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1992. 12.

鄭 圭 燮(政策研究室 研究委員)

姜 元 植(政策研究室 研究委員)

文 興 鎬(政策研究室 責任研究員)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報告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 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서 發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第 I 章 序 論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서 한반도 통일 기반을 완비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民族의 主體的 統一力量을 강화하는 동시에, 주변정세를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고 주변국가들이 민족통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努力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은 對內的 力量強化 次元과 國際的 環境造成 次元이라는 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검토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동북아 신국제질서하에서의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을 중심으로 논하고자 한다.

第 II 章 東北亞情勢의 現況과 展望

1. 域內國家들의 東北亞 政策方向

가. 美 國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① 러시아 경제, ② 일본 견제, ③ 중국 정치체제의 불확실성 대비, ④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安保政策의 基本 目標로 설정하고 있으며, 軍事力 優位 및 동맹국들과의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域內 均衡者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미국은 역내 경제주도권 회복을 최우선적인 東北亞 經濟政策 目標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다자간 접근, 시장개방압력 강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 확대 추진, 자국에 배타적인 역내 經濟블록 형성 움직임 견제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바, 이러한 미국의 대동북아 정책 기조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日 本

일본은 안보적 측면에서 美·日 同盟體制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 광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 노력은 미국의 방위분담 증대 요구, 일본내 新保守主義 대두, 동북아시아에서의 軍備競爭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고무될 것이다. 그러나 ① 세계적인 군비감축 추세와의 상충, ②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온 舊蘇聯의 몰락, ③ 일본의 軍國主義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급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한 일본은 대미 경제마찰 해소 노력 등 美·日 協力關係 강화를 모색하면서 일본 주도의 經濟圈 형성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군사적 역할 강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외국에 대한 經濟援助를 증대하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 中 國

중국은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 역내 국가와의 경제교류·협력 증진,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全方位外交 추진 거점 확보 등을 東北亞政策의 基本 目標로 설정하고, 특히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① 미국·러시아의 독점적인 영향력 억제, ② 한반도문제 해결의 주도권 장악, ③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라. 러시아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東北亞政策 目標은 ① 미국의 군사력 약화, ②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③ 중국의 反러化 방지, ④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⑤ 域內 軍縮 실현, ⑥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이며, 경제적 측면에서는 ① 역내국가들과의 경제협력, ② 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개발 참여 유도, ③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④ 東北亞 經濟圈에의 참여 등과 같은 目標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國內政治·經濟的 不安定性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러

시아는 일차적으로 國內問題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동북아정책은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동북아정책은 國內問題, 특히 경제침체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므로 러시아는 향후에도 日本을 위시한 역내국가들과의 經濟協力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2. 域內國家間 兩者·多者關係

가. 兩者關係

1992년 6월 워싱턴 미·러 정상회담 결과, 미·러 양국은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同伴者關係를 천명하고 「미·러 협력·우호를 위한 헌장」(워싱턴憲章)을 채택하였는 바, 향후 미·러 관계는 종래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열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러시아의 國內情勢 不安定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관계가 진정한 선린·우호관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다. 다만 미국은 러시아의 安定이 미국의 國益에 유익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러시아의 국내정세 안정을 지원·유도하면서 國際舞臺에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對러 정책을 모색·추진할 것이다.

美·日 關係는 脫冷戰으로 인한 공동위협 부재 및 양국간의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役割

再調整을 모색하고 있는 바,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안보개입을 축소·개편하는 한편, 일본은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양국간 외교·안보적 역할 재조정문제는 經濟分野에서의 葛藤과 맞물려 향후 양국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美·中 關係는 중국의 정치민주화 및 인권상황 개선, 경제문제, 臺灣問題,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등 갈등요인을 안고 있으나, 양국이 기본적으로 상호 선린·우호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極限 對立狀態에 처하지는 않을 것이며, 중국지도부의 권력 변동 등 대내외 정세 변화 및 事案의 성격에 따라 대립과 협력이 반복되는 불안정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日·中 關係는 相互牽制와 相互協力の 양측면을 공유하고 있으며, 향후 양국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협력과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립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樣相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양국간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인식 차이, 과거역사 청산문제, 영토분규, 對臺灣 關係 등의 문제는 향후 양국관계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이다.

中·러는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을 통해 장기간의 대립상태를 청산한 이래 정치·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 양국관계를 재정립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러시아 무기구입, 엘진 대통령의 중국방문 추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문에

서의 협력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러 양국은 역사적인 상호불신 및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가능성 등 관계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인들을 안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대립양상을 띠 가능성이 있다.

日·러는 양국간의 전통적인 불신감, 미·일 안보관계의 특수성, 北方領土問題 등으로 단기간내에 관계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양국 經濟關係는 일본 경제계가 정경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가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확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나. 多者關係

(1) 安保協力

냉전후 아·태지역에 있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共同 認識이 제고됨에 따라 역내 安全保障問題에 대한 논의가 활성화되고 있다. 특히 일본이 역내 안보문제에 대한 발언권 제도화, 정치·군사대국으로서의 위상 확립, 자율적인 對美外交 추진 등의 필요에서 최근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을 주장함으로써 역내 다자간 안전보장을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미국이 雙務的 安保同盟 유지를 전제로 制限的 機能을 수행하는 多者間 安保體制 형성에 동의한다면

새로운 안보협력기구의 창설도 가능할 것이며,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가 아·태지역에 있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의 場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2) 經濟協力

新國際秩序下에서 經濟問題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경제협력체 형성노력이 배가되고 있다. 동북아지역 역내국가들 모두가 經濟發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미국·EC의 시장개방 압력이나 여타 지역의 경제권 형성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내국가들이 短期的으로 제도화된 단일 「경제권」을 형성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와 같은 域內 經濟協力機構를 보다 확대·발전시키는 형태로 다자간 경제교류·협력을 제도화하여 나갈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第Ⅲ章 韓半島情勢의 現況과 展望

1. 域內國家들의 韓半島 政策方向

가. 美 國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재정적자 누증에서 비롯된 국방비 삭감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의 防衛費 分擔 확대, 駐韓美軍의 段階的 減縮, 주한 미군의 役割 調整 등과 같은 정책조정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존의 한·미 동맹체제와 前進配置戰略을 유지할 것이다.

한편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안정저해요인 제거 차원에서 北韓體制의 變化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는 바, 핵문제 해결후에도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생산·수출, 북한의 인권, 체제개방 등과 같은 문제들을 쟁점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미국은 통일된 한국이 서방, 특히 美國과 긴밀한 同盟關係를 갖는 정치·사회체제를 유지함으로써 통일한국이 한·미 동맹관계의 연장선상에 남아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나. 日 本

일본의 韓半島政策 目標은 ①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②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 수립 저지, ③ 한반도에 대한 政治·經濟的 影響力 확보를 통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 도모 등으로 요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단기적으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한 영향력 및 韓半島問題 解決方式에 대한 영향력

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北韓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대북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2+4 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관여하고자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일본은 남북한이 關係改善을 통해 사실상의 統一狀態에 도달하더라도 완전한 統合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다. 中 國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①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政治·經濟的 基盤 조성, ② 자국의 국익을 최대화할 수 있는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이라는 동북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手段으로서의 性格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① 한반도 안정 유지, ② 남한과의 경제교류·협력 강화, ③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의 차원에서 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韓半島 統一과 관련하여 중국은 무력 및 외세 개입에 의한 통일이나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자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 目標 實現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라. 러시아

러시아의 한반도정책은 ①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 유지, ②

남한과의 經濟交流를 통한 實益 증대, ③ 日本의 대러시아 接近 유도, ④ 아·태 진출 교두보 확보 등의 目標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러시아는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남북대화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나아가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주변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2. 北韓의 對內外 政策方向

가. 北韓式 社會主義體制 強化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 심화와 가중되는 경제난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경제침체가 지속되면서 북한은 정권 유지와 체제 정당화를 위해 民生問題 해결이라는 필요불가결한 과제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 불만 해소에 주력하는 등 통제된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思想統制를 계속하는 가운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강화 논리에 입각한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제된 開放政策 推進

북한은 개혁·개방이 經濟의 市場化 뿐만 아니라 정치의 民主化를 초래하여 體制威脅要因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에 對外開放 과급효과를 극소화시켜 체제유지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의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經濟難을 해소하려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채택·발표한 것은 對外開放을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보완하여 「통제된 개방」 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얻어질 경제적 이익 및 정치적 과급효과를 계산하는 데 치중할 것이며, 이 결과에 따라 開放政策의 範圍와 速度를 조절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 東北亞 國際秩序 變化에의 適應

북한은 한반도의 안정을 위해서는 동북아 신국제질서가 수립되어야 하며, 美·北韓, 日·北韓 關係正常化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주변 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과 이에 따른 「두개 조선」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은 세계질서 재편의 主導權이 美國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변 4국 가운데 對美 관계개선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政策轉換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중, 한·소 수교에도 불구하고 중국·러시아와의 기존 우호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고 있다.

라. 二重的 對南戰略 推進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남북공존」을 수용함으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 동시가입,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현재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統一戰線戰術의 적극 추진이라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統一은 「민족대단결」 명분하에 「先남조선혁명, 後공산화통일」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즉 북한은 「남북공존」 모색이라는 남북관계 재조정을 시도하면서도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통일3원칙을 駐韓美軍 철수, 軍縮 우선 실시, 보안법 철폐, 창구 다원화, 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는 등 기존 對南戰略을 계속 추진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다.

3. 南北關係

남북한은 1992년 2월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발효시킴으로써 분단 반세기만에 처음으로 和解·共存關係를 제도화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또한 1992년 9월 제 8 차 고위급회담을 통해 「기본합의서」 이행·준수를 위한 3개 附屬合意書가 채택됨으로써 「기본합의서」 이행·실천이 개시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부속합의서 채택과정에서 남북관계 진전의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는 核心事項들이 합의되지 않았으며 남북 상호핵사찰 규정이 채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남북관계 발전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에 있다. 더욱이 북한은 제 8 차 고위급회담 이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및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관련하여 對南 非難攻勢를 전개하고 있으며, 4 개 공동위 제 1 차 회의 및 제 9 차 고위급회담 개최 거부의를 밝힌 바 있다. 남북 당국간회담은 한국의 新政府 출범 및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이후 비로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IV. 韓半島 統一環境에 대한 綜合 評價

1. 東北亞 新國際秩序 展望

동북아에서는 중·소 관계정상화,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 脫冷戰的 兩者關係 再調整이 진행중이고 多者間 協力問題도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는 전세계적 차원에서 형성되고 있는 국제질서와는 상이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에서 美·日·中·러 등 강대국의 利害關係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中國과 北韓이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기존의 冷戰的 對立要因이 잔존하고 있고, 韓半島 分斷 등 냉전시대의 유산이 남아 있기 때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流動性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二重性이 동북아지역 新國際秩序의 전반적인 性格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美國이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日·中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 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미국이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중·북한의 사회주의 고수, 분단국문제, 영토문제, 군비경쟁 등 冷戰的 要素가 잔존하고 있는 동북아지역내 현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1+3」 체제로 형성될 동북아 역학관계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역내 국가들은 예상되는 危機를 관리할 수 있는 共同메카니즘을 창설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기본적으로 「1+3」 체제 형성과 함께 역내국가들이 多者間 協力을 강화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구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2. 東北亞 新國際秩序가 韓半島問題에 미칠 影響

가. 韓半島 平和定着

주변 4 국은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각국의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호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발발 등 지역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소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주변 4 국은 韓半島 現狀維持 次元에서 남북한간의 긴장 완화와 평화공존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주변 4 국의 南北 韓 交叉承認을 희망하고 있다.

나. 韓半島 統一

주변 4 국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國家別로 다소 입장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① 통일된 한국의 未來에 대한 불확실성 우려, ② 한반도에서의 現狀變化가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되어 각국의 國益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주변 4 국은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므로 적어도 南北關係는 획기적으로 개선·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自主的 努力에 따라 남북한이 민족화합·민족공영을 지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한이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면서 南北間 平和와 交流·協力이 제도화되고 민족공존·공영이 보장될 수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으로는 單一國家 統一을 이룩하지 못하더라도 남북한이 國家聯合 또는 聯邦을 구성하여 政治的 一體性을 강화하여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統一意志 여하와 주변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한이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이며, 이러한 상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統一構圖에 따라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민족화합을 달성해 나갈 때 조성될 것이므로 域內

情勢의 急變을 야기하지 않고서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실현되면 역내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통일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구현되거나 또는 한반도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처럼 급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주변 4국이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즉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주변 4국은 교차승인으로 조성될 남북한에 대한 影響力을 바탕으로 이것이 통일후 統一韓國에 대한 영향력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이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파괴하는 變數로 작용하지 않도록 政策的 努力을 경주한다면,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第V章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

1. 基本方向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基本方向에 입

각하여 민족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 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南北對話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民族共存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民族共榮을 도모한다.

둘째,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4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의 當爲性과 不可避性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統一意志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인 민족통일로 발전시킨다.

이와 함께 주변 4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緊張緩和와 平和定着에는 긍정적인 반면, 궁극적인 韓半島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韓半島 平和定着 次元과 韓半島 統一 次元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의 國際的 支援 誘導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統一意志를 천명함으로써 주변 4국의 통일문제 개입여지를 최소화한다.

둘째, 주변 4국과의 지속적인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주변 4국으로 하여금 北韓의 開放·改革을 적극 유도

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과 國際的 平和保障體制 構築을 실현한다.

한편 韓半島 統一 次元에서의 國際的 支援 誘導方案은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理由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강구·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未來像에 대한 주변 4국의 우려를 불식한다.

둘째,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東北亞 國際 秩序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 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이상과 같은 여섯 가지 方案이 반드시 段階性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다만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로써 확보된 韓半島 平和를 궁극적인 統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항의 지속적인 구현과 함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2. 推進方案

가. 韓半島 平和定着支援 誘導方案

(1)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平和統一意志 천명

平和定着 및 統一過程에서 주변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統一主體가 남북한 당국과 주민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 方案으로는 ① 「기본합의서」를 유엔에 등록하여 法的 效力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 ② 한반도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임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선언하는 방안, ③ 남북한이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이 통일을 자주·평화·민주적으로 이룩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2) 周邊4國과의 善隣·友好關係 維持·發展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변 4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첫째, 對美關係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實利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 안보협력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동북아의 지역불안정 가능성 등 외부적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미국의 均衡者的 役割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對日關係에 있어서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外交·經濟·安保協力을 강화하여 증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對中關係에 있어서는 역내 안보·경제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북아 신국제 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韓·中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균형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對러關係에 있어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내 정세를 고려하여 향후 정국의 향배와 관계없이 한·러 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각적인 관계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對北韓 開放誘導

短期的인 측면에서 북한의 對外開放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가는 中國이므로, 중국의 多國間 經濟協力體 구상과 중국내 韓·中 經濟合作에 대한 북한의 참여 및 북한의 자유무역지대에 대한 한·중의 공동 참여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의 經濟協力과 관련, 한·러 경제협력 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 러·북한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시베리아 개발 등에서의 남북한·미·일 등 다자간 공동 참여, 북한 자유무역지대에의 한·러 공동 참여 등의 방안을 모색·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美·北韓, 日·北韓의 관계발전을 북한이 國際

法, 國際慣例를 준수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북한, 일·북한 수교후 미·일의 對北韓 경제지원 및 협조수준을 북한의 개방과 연계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의 政治的 民主化를 유도하기 위해 미·북한, 일·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미·일이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도록 하고, 수교 이후에도 동 문제가 경제지원·협력 확대의 條件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韓半島 平和에 대한 國際的 保障

남북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 保障裝置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美·日·中·러의 한반도 평화 보장조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한국은 적어도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문제에 관해서는 「2+4」의 6者會談을 적극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平和體制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統一基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통한 국제적 평화보장방안을 중장기적 차원에서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나. 韓半島 統一支援 誘導方案

(1)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 설정·제시

한국은 통일한국의 位相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未來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불식함으로써 이들이 統一 障礙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4국의 利害關係를 위협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 자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통일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經濟力을 상회하는 과도한 통일비용 지출이 요구될 것이며, 따라서 단기간내 한국이 역내 경제강국으로 등장하기 어려움을 강조하면서 통일한국의 경제발전이 역내의 여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며, 역내 경제번영에 기여하는 것임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安保的 側面에서 남북한은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를 감안한 段階的 軍縮을 이루어 나가는 한편, 통일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입각하여 韓半島의 非核化를 실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東北亞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의 적극 참여

한반도 통일이 역내 정세변동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韓半島 統一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의 일환으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일·중·러 등 동북아 4국 모두와 외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외교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주변국간의 懸案問題를 거중 조정하는 外交力量을 발휘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간 力學關係의 새로운 變數로 작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 多者間 安保·經濟協力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자간 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의 統合을 모색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自主統一의 여건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第V章 結 論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주변4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交流·協力을 활성화하여 나간다면, 民族의 自主的 努力 여하에 따라 남북한이 民族和合·民族共榮을 지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남북한의 主體的인 統一意志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4국의 우려를 불식해 나간다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單一國家 統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國際的 統一支援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對內的 統一基盤이 조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한 국력신장, 정치적 안정과 민주발전 지속, 정의사회 구현 등을 통해 독자적 統一對備力量을 강화하는 한편, 段階別 南北關係 發展構圖를 설정·추진함으로써 남북간 교류·협력을 제도화하고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조성하여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완비하여야 할 것이다.

目 次

第Ⅰ章 序 論	1
第Ⅱ章 東北亞情勢의 現況과 展望	5
1. 域內國家들의 東北亞 政策方向	5
가. 美 國	5
나. 日 本	11
다. 中 國	16
라. 러시아	21
2. 域內國家間 兩者·多者關係	27
가. 兩者關係	27
나. 多者關係	45
第Ⅲ章 韓半島情勢의 現況과 展望	54
1. 域內國家들의 韓半島 政策方向	54
가. 美 國	54
나. 日 本	58
다. 中 國	60
라. 러시아	65
2. 北韓의 對內外 政策方向	70
가. 北韓式 社會主義體制 強化	70
나. 통제된 開放政策 推進	74
다. 東北亞 國際秩序 變化에의 適應	79

라. 二重的 對南戰略 推進	89
3. 南北關係	93
第Ⅳ章 韓半島 統一環境에 대한 綜合 評價	102
1. 東北亞 新國際秩序 展望	102
2. 東北亞 新國際秩序가 韓半島問題에 미칠 影響	112
가. 韓半島 平和定着	112
나. 韓半島 統一	118
第Ⅴ章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	124
1. 基本方向	124
2. 推進方案	130
가. 韓半島 平和定着支援 誘導方案	130
(1)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平和統一意志 천명 ...	130
(2) 周邊4國과의 善隣·友好關係 維持·發展	135
(3) 對北韓 開放誘導	137
(4) 韓半島 平和에 대한 國際的 保障	140
나. 韓半島 統一支援 誘導方案	144
(1)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 설정·제시	145
(2) 東北亞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의 적극 참여	148
第Ⅵ章 結 論	153
* 參 考 文 獻	156

第 I 章 序 論

중국과 소련의 정치·경제적 변혁으로 시작된 社會主義圈의變化는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동·서 진영간 냉전적 대립구조를 이완시킴으로써 전세계적인 차원에서의 國際秩序 再編을 촉진하고 있다.

탈냉전의 과도기적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국제질서의 주요 특징은 기존 국제질서의 형성·변화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했던 이념·체제·제도간의 갈등과 대립이 현저하게 감소된 반면, 平和와 經濟發展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구질서하에서 국가간의 우호·적대관계를 결정하는 핵심적 척도는 理念과 體制의 상이성 여부였으나, 새로운 국제질서하에서는 현실적인 國益을 고려하여 親疎關係를 재규정함으로써 대내외정책의 현실적 조정을 통하여 자국의 政治·經濟的 實利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지역 역시 냉전적 대립과 갈등이 첨예화되었던 지역으로써 탈냉전의 새로운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지금까지 남북한은 남북대결에서 상호 배타적인 동맹관계를 유지·강화하면서 同盟國의 지원·협력을 획득하는 것 이외에는 동북아 국제환경에 대해 커다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으며, 이와 마찬가지로 주변 4국도 동·서 냉전과정에서 남북한에 대한 자국의 영향력 확대에 역점을 두었을 뿐 한반도 통일 등 한반도의 장기적인 미래에 대해서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주의 체제의 본질적 변화, 소연방 해체, 세계적 차원에서의 화해·협력 추세 및 독일 통일 등 세계정세의 급격한 변화는 동북아에서도 脫冷戰을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南北關係는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발효하는 등 일정한 진전을 보이고 있고, 주변 4국도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통일, 통일 이후 한반도의 위상 등과 같은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갖게 되었다. 한편 한국은 지속적인 國力伸張과 北方政策 추진에 따라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루어 주변 4국 모두와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외교적 성과를 바탕으로 민족통일의 외부적 장애요인이었던 冷戰構造를 제거해 나가고 있다.

민족의 주체적 역량으로 해방을 맞지 못한 상황 속에서 냉전적 대립이라는 國際的 要因이 남북분단을 강제하였음에 비추어 볼 때, 統一過程은 민족통일을 방해하는 국제적 요인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면서 민족의 주체적 통일역량을 강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전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즉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國內的 統一力量 強化와 國際的 統一環境 造成이라는 對內外的 基盤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對內外的 基盤이 현재 완비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남북관계가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발효에도 불구하고 남북간의 입장 차이로 冷戰的 對立狀態를 완전히 탈

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제반 측면에서 민족의 주체적 통일역량이 성숙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으며, 소연방 해체와 사회주의권의 민주화·시장경제화 추세 및 한국의 적극적인 북방정책 추진 등으로 인하여 한반도 통일의 冷戰的 障礙要因은 해소되고 있는 과정에 있으나,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부정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동북아지역은 세계 어느 지역보다 미·일·중·러 등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얽혀 있고 냉전적 대립구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불안정성과 유동성을 노정하고 있기 때문에, 역내 정세의 변동요인으로 작용할 한반도 통일이 용이하지 않을 수 있으나, 반면에 동북아정세의 현상 변경이라는 현재의 상황이 韓半島 統一의 好機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동북아지역의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서 남북한의 통일문제가 보다 구체화될 수 있는 對內外的 基盤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최우선적으로 경주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민족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주체적 통일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周邊情勢를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고 주변국가들이 민족통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努力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반도 통일기반 조성방안 연구도 對內的 力量強化次元과 國際的 環境造成次元이라는 두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연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나, 이러한 두 가지 차원은 상호 연계되어 있으면서도 독립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을 중심으로 분석하되, 國內的 力量強化 次元은 국제적 기반조성과 필요불가결하게 연계된 사항만을 고려하고자 한다.

한반도 통일의 국제적 기반 조성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의 本論은 다음과 같은 논리와 내용으로 전개된다.

제Ⅱ장에서는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의 동북아정책, 양자관계 및 다자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반도정세의 주변환경을 이루는 東北亞情勢를 분석·전망한다.

제Ⅲ장에서는 주변 4국의 한반도정책, 북한의 대내외정책 및 남북관계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구체적인 韓半島情勢를 분석·전망한다.

제Ⅳ장에서는 제Ⅱ장과 제Ⅲ장의 분석을 종합하여 東北亞 新國際秩序를 전망하고, 한반도 統一問題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認識과 政策을 분석·전망함으로써 韓半島 統一環境을 종합적으로 평가·전망한다.

제Ⅴ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강구하되, 우선 전체적인 基本方向과 推進構圖를 개관한 후 細部 推進方案을 제시할 것이다.

第Ⅱ章 東北亞情勢의 現況과 展望

1. 域內國家들의 東北亞 政策方向

가. 美 國

미국은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소련, 중국, 일본의 이해가 교차하고 있는 동북아지역이 세계적 안정과 미국의 지속적인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는 인식하에¹⁾ 對蘇封鎖와 미국주도 세계질서예의 일본 편입을 위하여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에 유리한 勢力均衡 유지를 死活的 利益으로 간주하여 왔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지역에 있어서 美本土 지원, 전세계적 抑止政策 지원, 이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정치·경제적 접근 확보, 霸權防止를 위한 域內 세력균형 유지, 域內 국가들의 對西方性向 강화, 域內 민주주의 및 人權 신장, 核擴散 방지, 航海의 自由 확보 등을 國家利益으로 설정하고 있다.²⁾

미국은 이러한 국가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域內국가와의

1)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by General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 p. 198.

2)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 8.

雙務 軍事同盟體制 유지, 해외기지 확보, 前進配置를 기조로 한 東아시아政策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탈냉전 등 전세계적 차원의 安保環境의 변화 및 재정·무역적자 등 국내경제적 요인에 따라 미국은 기존의 封鎖政策을 지역적 또는 小지역적 안보전략으로 대체하였으며, 이에 따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의 지속적 개입을 위한 안보전략 및 정책의 명분도 변화하게 되었다.

1990년 4월 미 국방부의 議會 報告書 「21세기 아·태전략개요」를 통해 발표된 아·태정책 조정의 핵심 내용은 향후에도 역내국가들과의 기존 쌍무동맹체제와 전진배치전략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지만,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상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域內 安定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軍事力 構造를 축소 조정하고, 한국·일본 등 域內 同盟國들의 防衛分擔을 증대시킨다는 것이다.³⁾

미국은 탈냉전시대에 있어서 ① 과거 대소 봉쇄일변도 정책에서 대러시아 警戒政策으로의 전환, ② 미국 주도의 동북아 안보체제를 통한 일본 견제, ③ 중국정치체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 ④ 미국의 힘의 우위에 기초한 한반도 군사적 긴장의 안정적 관리 등을 기본적인 政策目標로 설정하고,⁴⁾ 「域內 均衡者」 역할을 통하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략을

3) Ibid., pp. 10 ~ 17.

4) 民族統一研究院,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Ⅰ)」(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pp. 1 ~ 121 참조.

추진하고 있다.⁵⁾ 즉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기존 군사동맹체제 유지, 군사력의 前進配置, 전략핵 중심의 核雨傘政策 등 기존 정책의 골격을 유지하되 費用節減 차원에서 그 규모와 운영방식을 대내외적 여건에 맞게 다음과 같이 조정한 것이다.

첫째, 미국은 대규모 美軍駐屯을 바탕으로 한 기존의 전진 배치전략의 수정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아·태지역의 점증하는 경제적 중요성과 불확실성을 근거로 주둔병력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되 前進配置戰略을 전면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아·태지역이 北美 및 유럽과 함께 國際政治·經濟의 中心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미국과 아·태지역과의 利害關係가 긴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이 미국의 국가이익에 死活的 重要性을 지닌다는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⁶⁾ 따라서 미국은 전진배치전략에 의한

5)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2.

6) 아·태지역의 經濟的 重要性을 강조한 저작에 대해서는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 2;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p. 806 ~ 809; Yutaka Akio,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pp. 42 ~ 43;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by General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February 8, 1990, p. 198 참조.

軍事力 維持를 통하여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유지·보호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미국은 향후 중·러·북한·캄보디아·인도네시아 등지에서 政治的 不安과 混亂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추세와 북한의 핵무기 개발노력도 이 지역의 安定을 저해하는 요인이라고 인식하는 등 향후 10년을 轉換期로 평가하고 있다.⁷⁾ 이와 함께 미국은 구소련만이 미국의 유일한 안보위협은 아니며 미국의 국가이익을 저해하는 다양한 요인이 상존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⁸⁾ 따라서 미국은 비록 초강대국간의 대결 가능성이 감소되었더라도 기존의 前進配置戰略이 추구해 온 地域均衡者, 良心的 仲裁者, 궁극적인 安全保障者 역할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⁹⁾ 미국은 다만 안보환경 변화와 예산상의 제약을 감안하여 역내 안정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서기 2000년까지 3段階에 걸친 減縮을 계획하고 있다.¹⁰⁾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1992년 7월 미 국방부의 議會 報告書 「아·태전략개요」에서도 재확인

7)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4 ~ 5.

8) Carl W. Ford, Jr., "The U.S. Future in Asia,"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2 (Winter 1990), p. 209.

9)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 1.

10) *Ibid.*, pp. 10 ~ 11. 그러나 이 계획은 제 1 단계에서만 감축규모를 확정·제시하고 있을 뿐이며, 제 2, 3단계 감축계획은 각 단계의 말기의 안보 상황을 검토하여 상황이 악화될 경우에는 전면 再調整할 수도 있다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되고 있다.¹¹⁾

둘째, 미국은 전진배치병력 감축으로 생길 수 있는 전력상의 공백을 보충하는 동시에 미국내 국방예산 감축압력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국·일본 등 域內 同盟國들의 費用分擔 및 役割分擔 확대를 요구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은 費用分擔 側面에서 韓·日에 대하여 동북아에 전진배치된 군사력 유지비용의 더 많은 부분을 부담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役割分擔 側面에서는 동맹체제내에서 동맹국의 역할 증대 및 방위능력 증강을 요구하고 있다.¹²⁾

셋째, 미국은 核武器體系를 전략핵, 기동성 위주의 전술핵, 전략방위계획 등을 중심으로 재조정하고, 전진배치군사력의 규모를 축소하는 대신 그 構造를 가능한 한 機動軍 중심으로 개편하는 조치를 취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미국의 軍事力 改編作業은 미국이 향후에도 국제정세를 주도하기에 충분한 군사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다.

11)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ly 1992, pp. 20 ~ 21.

12) 예컨대 미국은 한국방위에 있어 한국군이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미군은 지원역할로 전환한다는 목표를 설정하여 한국군이 수행가능한 미군의 임무 및 작전통제권을 점진적으로 한국에 이양하는 등 한국의 역할을 증대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에 대해서는 自衛隊의 1,000海里 방위능력 증강 및 PKO 파병을 통한 일본의 군사적 역할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pp. 15 ~ 18; James A. Baker,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 10.

따라서 향후 미국은 동북아에서 기존 동맹체제와 전진배치 전략, 그리고 일정 수준의 전략핵 및 공군용 전술핵에 근간을 둔 核抑止戰略을 유지함으로써 절대적인 軍事力 優位를 견지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域內 均衡者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성장 추세, 특히 일본 및 신흥공업국의 경제발전에 따라 미국의 域內 經濟 主導力이 상대적으로 위협받게 되고 미국의 재정·무역적자가 가중되면서, 미국은 대내적으로 자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國內投資를 활성화하고, 대외적으로 세계무역의 多者間 協議機構 개선을 통하여 미국에 유리한 國際貿易秩序를 확보하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동북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經濟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多者間 通商協商인 「우루과이 라운드」(UR)를 통하여 미국의 무역수지 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GATT 이외에도 국제통화기금(IMF),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서방선진7개국(G7) 회담 등에서의 指導的 役割을 견지함으로써 일본 등 경제강국과 아시아 신흥공업국가군에 대한 牽制와 統制力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둘째, 미국은 자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일본·한국 등 아시아지역 국가들에 대해 개별 국가들을 상대로 강력한

市場開放 壓力을 행사하고 있다. 특히 미국은 일본에 대해 構造調整協議(Structural Impediment Initiative: SII)¹³⁾를 추진함으로써 對日 貿易逆調를 개선하려 하고 있다.

셋째, 세계경제와 미국경제에 있어서 동북아 및 아·태지역 경제가 점유하는 비중과 중요성이 점증함에 따라 미국은 아·태지역을 자신이 주도하는 自由貿易에 기초한 개방된 經濟圈으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아·태 경제협력 각료회의(APEC)를 자유주의적 多者間 經濟協議體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을 추진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은 미·일 무역수지 개선을 통한 미국의 경제주도권 회복을 최우선적인 東北亞 經濟目標로 설정하고, 이를 위하여 우루과이 라운드를 통한 다자간 접근, 쌍무적 시장개방 압력 강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 확대 추진, 자국에 배타적인 역내 經濟블록 형성 움직임 견제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러한 미국의 대동북아정책 기조는 향후 상당 기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 日 本

동북아지역에서 일본은 美·日 동맹하에서의 安保 강화, 資源 및 市場의 안정적 확보를 國家利益으로 하여 ① 동북아지

13) 무역문제 해결을 위한 構造調整協議는 일본의 유통구조를 개선하여 시장개방을 촉진시키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으나, 일본은 미국의 재정적자 감소와 소비절약을 강조하고 있어 양국간의 무역마찰은 상호내정간섭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역에서 안보역할 증대, ② 잠재적 위협에 대한 방어 및 견제, ③ 아·태지역 경제 주도 등과 같은 政策目標을 추구하고 있다.

우선 안보적 측면에서 일본은 미·일 동맹체제하에서 안전 보장을 모색하면서도 經濟力을 바탕으로 안보역할을 증대함으로써 政治·軍事大國의 지위 확보를 도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잠재적 위협에 대응하려 하고 있다.

일본은 구소련의 동북아지역 군사력을 최대의 위협으로 간주하여 왔으며, 구소련 붕괴 이후에도 러시아 極東軍事力을 여전히 위협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¹⁴⁾ 한편 일본은 중국과 1972년 외교정상화 및 1978년 平和友好條約 체결을 통해 양국간의 敵對關係를 공식적으로 청산하고, 지역안정을 위한 양국간의 협력관계를 도모하여 왔으나, 地域強國으로서의 中國과의 경쟁이 불가피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동·남지나해에서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우려하고 있다.¹⁵⁾

14)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東京: 防衛廳, 1990), pp. 46, 49; 「防衛白書 1991」, p. 49.

15) 중국은 1992년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軍現代化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결의하고, 특히 1992년 2월 「領海法」을 제정하여 남지나해와 동지나해의 거의 전역을 중국영해로 규정하여 일본이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해 온 尖閣列島와 국제적인 영유권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南沙諸島 등을 자국의 영토로 명기하고 영해침범 외국선박을 실력행사로 퇴거시킬 것임을 분명히 하였다. 이에 따라 일본은 중국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이 일본의 國益을 위해하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近藤重克, “冷戰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卷 第1號 (1992年 6月), pp. 62 ~ 72 참조. 한편 일본은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고도 첨단기술의 對中國 移轉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日本の防衛構想,” *Voice* (1990. 8), p. 131.

일본은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美·日 同盟體制 유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현대화, 군사적 역할 광역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① 동북아지역에서의 多元化 現象에 따른 갈등 및 위협 가능성 억지, ② 일본의 軍備增強에 대한 域內國家들의 우려 불식 등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미·일 동맹관계를 유지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 동맹관계는 미국 군사비의 포괄적 삭감, 해외주둔군의 단계적 철수, 방위분담 확대에 따라 日本이 동북아 역내 안보에서 일정한 役割을 담당하는 雙務的 關係로 전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¹⁶⁾

둘째, 일본은 방위력 증강 및 군사력 現代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은 전후 네 차례에 걸친 防衛計劃을 추진하였으며, 1987년 나카소네 내각은 방위비를 GNP의 1% 정도로 한다고 발표함으로써 GNP의 1% 이내라는 防衛費 上限線을 철폐하였다. 1991년에 이르러 일본의 防衛豫算은 전년대비 5.8% 증가되었으며,¹⁷⁾ 1992년도에는 전년대비 5.38% 증액된

16) 일본은 미국의 「安保無賃乘車論」에 대해 駐日美軍 경비의 35~40%를 부담하고 있으며, 따라서 美·日 關係는 미국의 간섭을 배제하고 쌍무적인 對等한 關係로 재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世界週報」, 1992年 3月 10日. 한편 1992년 1월 부시 미대통령의 訪日時 미·일 양국정상은 「세계적 동반자 관계」(global partnership)를 기반으로 21세기의 도전에 공동 대응한다는 「東京宣言」을 채택한 바 있다.

17) 1991년도 豫算부터 반영되기 시작한 제2차 「新中期 防衛力整備計劃」(1991~95)에는 총 22조 7천 5백억엔에 달하는 호위함 현대화, 핵무기 탑재 가능 최신 미사일 도입, F-15機 국산화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

4조 6,200억엔으로 책정되었다.¹⁸⁾

셋째, 일본은 東北亞地域에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영향력 확보를 위해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정책은 지역방위전략과 해상안보정책, 유엔평화유지군 파병¹⁹⁾ 등을 통해 나타나고 있다.

한편 일본은 기존의 경제적 우위를 유지하고,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에 대비하면서 資源과 市場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全方位經濟外交, 미·일 무역마찰 해소, 수출 및 첨단산업 주도의 비교우위 확대, 경제협력의 전략적 이용, 일본 주도의 地域經濟圈 구축 등 포괄적인 대외경제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은 미국의 전략적 이해와 충돌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資源과 海外市場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政經分離原則에 입각한 「전방위외교」를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은 미·일간 貿易不均衡問題를 해소하기 위하여 駐日美軍의 경비부담 및 對外經濟支援 증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경제구조조정 뿐만 아니라 의회와 연구기관간의 유대 강화 등을 통해 상호불신을 조정하려 하고 있다.²⁰⁾

18) 이는 일본 GNP의 1.5%에 달하며, 세계3위 수준에 이르고 있다.

19) 일본은 걸프전을 계기로 1991년 4월 해상자위대 소속 소해정을 중동에 파견한 바 있으며, 1992년 6월 「유엔평화유지활동 협력법안」 제정 이후 캄보디아에 육상자위대를 파견하고 있다.

20) Jimmy Carter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S.-Japan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1), p. 4.

셋째, 일본은 比較優位를 계속 유지함으로써 경제적 실리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주도정책은 「해외에서의 원자재 수입 → 생산·수입대체 → 수출」의 循環過程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일본은 수출을 지속적으로 증대시키면서도 수입 확대를 통해 무역마찰을 해소하는 한편, 첨단기술투자에 주력함으로써 역내 및 세계 차원에서 比較優位體制를 확립하고자 하고 있다.

넷째, 일본은 정부원조개발계획(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을 수립하여 제3세계 국가들에 대해 經濟支援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적인 영향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일본의 정부개발원조는 일반적으로 일본의 수출확대에 대한 배려, 미국의 안보전략 지원,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의 대비 등의 필요에서 제공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정치·군사 대국화를 위한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²¹⁾

다섯째, 일본은 세계적인 경제블록화 추세를 고려하여 일본 주도의 아·태 經濟圈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²²⁾ 이를 위해 일본은 아세안 및 여타 역내국가들에 대한 접근을 가속화하고

21) 일본은 걸프戰 이후 해상자위대의 中東派遣과 관련하여 寄港問題가 대두되었을 때, 대부분의 寄港地를 원조대상으로 결정하는 한편, 자위대 해외파병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하여 필리핀, 싱가포르,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에 개발원조를 제공하고 있다.

22) 일본의 아·태지역 경제권 형성에 관한 주장은 이미 1960년대부터 제기되고 있었으며, 1966년 고지마(小島)案, 1979년의 오오하라(大平)案 등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다. 小島清, 「續·太平洋經濟圈の生成」(東京: 文眞堂, 1990) 참조.

있다.

향후 일본의 東北亞政策은 安保 次元에서는 美·日 同盟體制가 유지되고, 경제력에 상응하는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는 동시에 군사력 증강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 모색 노력은 미국의 방위 분담 증대 요구, 일본내 新保守主義의 대두, 동북아지역에서의 軍備競争 가속화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인해 한층 더 고무될 것이다.²³⁾ 그러나 ① 세계적인 군비감축 추세와의 상충, ② 실질적인 위협으로 인식되어온 舊蘇聯의 몰락, ③ 일본 軍國主義 부활에 대한 주변국의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의 군사력 증강이 급속하게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한편 경제 차원에서 일본은 대미 경제마찰 해소 노력 등 美·日 協力關係 강화를 모색하면서 일본 주도의 經濟圈 형성을 위한 경제외교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치·군사적 역할 강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외국에 대한 經濟援助를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다. 中 國

1992년 1월 鄧小平의 「南巡講話」 이후 改革·開放 확대를 통한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수준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중국은

23) 이와 관련하여 일본은 유엔안보리 常任理事國 被選意思를 시사하고 있으며, 유엔평화유지군 등 유엔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유럽에 비해 亞·太地域의 공정·합리적인 신국제질서 형성을 위한 여건이 성숙되었다는 인식하에,²⁴⁾ 자국의 國家利益을 최대화할 수 있는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①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 및 역내국가들과의 경제교류·협력 증진, ② 세계적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全方位外交 추진의 거점 확보 등을 기본 政策目標로 설정하고 있다.

우선 중국은 경제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평화적인 周邊環境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존 질서의 現狀維持라는 소극적인 입장보다는 자국의 대내외정책 방향에 부합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국가이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에서 주변환경을 조성해 간다는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1992년 8월 24일의 韓·中 關係正常化는 중국의 이러한 태도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로 평가된다. 한·중 수교는 평화적인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중국의 對南北韓 정책변화라는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며, 對南北韓 關係의 균형적인

24) 중국은 유럽이 ①舊蘇聯의 정치·경제적 불안정, ②政治·經濟的 不均衡(獨逸統一 이후 英·獨·佛의 균형 상실), ③領土紛糾·民族葛藤·宗教對立 심화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반면, 亞·太地域은 ①각종 모순이 兩極體制하에서 억제되지 않고 이미 폭발하여 현재 해결추세에 있고, ②제2차 세계대전 이후 빈번하게 발생한 地域紛爭(한국, 베트남, 캄보디아, 아프카니스탄)을 통해 평화·경제발전의 중요성을 절감하여 對話·協商 분위기가 고조되어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究」, 1992年 1期, pp. 3~5 참조.

조정을 통해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전세계를 겨냥한 전방위외교 추진의 기반을 확보한다는 보다 광범위한 차원의 戰略的 意圖가 내재되어 있다.²⁵⁾

또한 중국은 改革·開放政策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일본·한국 등 역내 주요 국가들과의 經濟交流·協力을 강화하고 있다. 개혁·개방정책 초기 중국은 동북아지역 국가들보다 西方 先進國家들과의 경제협력을 중시하여 왔으나, ① 아·태지역의 경제성장, ② 서방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미흡, ③ 6.4 天安門事態에 따른 서방의 對中 경제제재조치, ④ 지역별 경제블록화 현상 등의 요인에 따라 역내국가들과의 다각적인 경제협력을 모색하면서 「東北亞經濟圈」형성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중국은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역내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차원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려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국은 ① 미국·러시아의 독점적인 영향력 억제, ② 한반도 문제해결의 주도권 장악, ③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견제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5) 중국은 자신들이 世界秩序의 변혁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和平演變」에 대한 지나친 危機意識으로 인해 대외정책상 被動·守勢的인 자세를 일관했다는 반성과 함께 향후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고유한 역할과 영역을 확보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대외정책상의 인식변화는 중국의 對東北亞政策 및 對韓半島政策 전반에 민감하게 반영되고 있다.

첫째, 중국은 미·러의 상대적 영향력 약화 및 군사적 위협 감소 등 동북아의 정세 변화가 자국의 영향력 증대에 유리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미·러의 군사적 위협에 대한 소극적 대응이라는 기존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정치·경제·군사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약화 추세에 있는 미·러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한편,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상대적으로 증대시키려 하고 있다. 물론 중국이 미·러의 영향력을 완전히 驅逐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자국의 배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은 아니다.

특히 중국은 미국의 경우 동북아지역의 긴장완화 추세, 미국의 국내경제적 요인 등으로 역내 주둔군 철수를 포함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에서의 戰略的 調整과 軍事力 縮小가 불가피하지만, 해·공군의 기동력 강화를 통해 기존의 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를 기반으로 미국 주도하의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므로²⁶⁾ 동북아 신국제질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미국 주도하의 질서 형성을 견제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문제와 관련하여,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정착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을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과거 미·소가 향유하여 온 한반도에서의 영향력을 흡수하는 동시에 日本의 對韓半島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는 정책을

26)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pp. 1 ~ 2 참조.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안정유지 필요성에 대한 강조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이 의도하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의 차원에서 한반도문제 및 대남북한 관계를 이끌어 간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과거 중국이 일·북한, 미·북한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전제로 韓·中 修交를 고려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한·중 수교를 전격적으로 실현한 것 역시 중국의 이러한 방침과 무관하지 않다. 즉 중국은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남한과의 政治關係를 정상화함으로써 韓·蘇 修交 이후 北韓에 대한 영향력을 대폭 상실한 러시아나 지속적인 관계개선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北韓의 核開發問題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관계발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일본·미국에 비해 한반도문제, 대남북한 관계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있다.

셋째, 대일 관계에 있어서 중국은 일본과의 경제교류·협력이 자국의 경제발전에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점과 東北亞의 地域列強으로서 중·일 양국이 긴밀한 協調體制를 유지해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면서도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가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에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으로 억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역내국가들과의 공동보조 모색 등 日本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견제하고 있다.

물론 중국은 동북아에서 미·소의 정치·군사적 대립 완화와 역내 전략적 동맹관계의 중요성 약화에 따라 미·러의 독점적

영향력이 감소되고 있고, 특히 정치·군사적 측면보다는 경제적 측면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어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일본의 영향력 확대가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으로 급속하게 발전될 경우,²⁷⁾ 중국의 동북아정책 목표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이 특히 미국과의 협조하에 軍事力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는 극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라. 러시아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국가이익은 무엇보다도 러시아의 接境地域으로서 동북아지역에 대한 地戰略的 利害에 기초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安保的 次元에서 구소련 이래로 동북아의 전략적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여 왔으며, 이는 러시아가 동북아지역의 세력균형관계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 한, 아·태지역 전체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하였다. 이에 따라 러시아의 동북아 安保政策은 역내 전략환경을 러시아에 불리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군사적 균형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조성하여 역내 문제에 심도있게 관여

27) 중국은 일본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와 군사적 팽창을 구분하여 인식하고 있다. 신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서 일본이 경제력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의 고유한 역할과 지위를 강화함으로써 政治大國化를 지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군사력 증강을 통한 軍事大國化는 용인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다는 目標 위에 추진되고 있다. 따라서 군사·전략적 측면에서 러시아의 東北亞政策 目標은 ① 미국의 군사력 약화, ② 일본의 재무장 및 군사대국화 견제, ③ 중국의 反러化 방지, ④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 ⑤ 域內 軍縮의 실현, ⑥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등으로 요약된다.

한편 러시아는 동북아 지역에서 시베리아 개발과 관련하여 중요한 經濟的 利害關係를 갖고 있다. 동북아지역 국가, 특히 미국·일본·한국의 경제력이 시베리아 개발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러시아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은 적지 않으며, 또한 중국·북한 등과의 경제협력도 매우 중요하다. 즉 페레스트로이카 시대 이래로 러시아의 外交政策은 최우선 과제인 經濟活性化를 위한 外的 與件 조성이라는 국내경제적 목적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입안되고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러시아의 동북아정책도 경제적 고려를 우선시하면서 추진되고 있으며, ① 동북아지역 국가와의 경제협력, ② 역내국가들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 유도, ③ 역내 경제협력기구에의 참가, ④ 東北亞 經濟圈에의 참여 등과 같은 目標를 추구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동북아정책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 비추어 볼 때 상대적으로 소극성을 떨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① 구소련 해체 이후 불안정한 독립국가연합의 미래와 러시아의 國內政治·經濟的 不安에 따라 향후 러시아는 일차적으로 國內問題 해결에 주력할 수 밖에 없다. ② 외교문제에 있어서도 독립국가연합 구성국가들과의 관계를 최우선 고려대상

으로 삼지 않을 수 없다. ③ 외교정책 추진 우선순위에 있어서 전통적으로 동북아지역은 유럽에 비해 부차적인 고려대상이었다.

향후 러시아는 고르바초프시대의 「新思考」外交의 틀을 완전히 벗어날 수 없을 것이나, 종래의 고르바초프 외교와는 상이한 형태를 보일 것이다. 즉 고르바초프 외교에 마지막까지 붙어 다녔던 「또 하나의 大國」指向과 절연한다고 하여도 西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최근 러시아에서는 과거 19세기 중반 러시아帝國의 근대화를 둘러싸고 러시아의 知的 生活을 이분화하였던 「서구파」와 「슬라브파」의 논쟁을 방불하는 論爭이 벌어지고 있고, 현재의 러시아 外交指導部는 대체적으로 「서구파」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 예컨대 코지레프 외무장관은 안보분야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로 대표되는 西方側 安全保障體系에 완전히 편입되어 그 一翼으로 되는 것이 러시아의 國益에 유익하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즉 코지레프는 對美 關係에 언급하면서 “금일 우리는 러시아와 미국간의 유익한 관계발전을 진정으로 방해하는 여하한 원인도 인정할 수 없다”고 단정하고, “西方 先進國은 러시아의 자연스러운 同盟者”라는 확신 위에 철저한 西方에의 接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²⁸⁾

28) *Izvestiya*, 1992. 1. 2.

러시아 外交指導部の 이러한 西歐指向性에 반하여, 세계정 치 속에서의 러시아의 位相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反省이 주로 言論界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으며,²⁹⁾ 또한 1992년 6월 「자유러시아」의 루쓰코이 부통령, 「러시아민주당」의 트라브킨 당 수, 「산업동맹」의 불리스키 의장 등 의회내 中道派들이 연합체로서 「市民同盟」을 결성한 이래 코지레프 외무장관의 사임을 요구하는 등 코지레프의 서구지향적 외교정책노선에 반대하고 있어, 옐친 대통령이 「시민동맹」과의 제휴가 불가피한 현 상황³⁰⁾ 속에서는 옐친 정부의 대내외정책이 보다 保守化할

29) Alexei Pushkov, "Is Alliance with the West Feasible?"; Andrei Zagorsky, "New Russia in a New World," *Moscow News*, no. 9, 1992. 여기에서 푸쉬코프는 "현재 러시아에 있어서 西方에의 接近을 대체하는 길은 없다. 러시아가 東(중국) 내지 南(아랍)에서 동맹국을 구하는 것은 치명적인 과오이다. 러시아의 國益은 서방국가, 특히 미국의 그것과 일치시키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자고르스키는 "독립국가연합의 분해가 조만간 피할 수 없다면, 러시아의 장래는 유럽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러시아와 서부 인접국의 관계가 國境·民族問題로 불안정하므로 그것이 러시아의 유럽 接近의 阻害要因으로 되고 있다. 이 의미에서 러시아는 독일·폴란드·벨라루시·발트3국과의 선린관계를 우선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다리로서의 러시아라는 견해도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아시아와 유럽은 러시아를 제외하고도 융합(예컨대 아시아의 NIES)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使命은 유럽과 아시아의 架橋가 아니라 이 融合過程에 참가하는 것이다. 다만 아·태 방면의 지역협력에 러시아가 참가하기 위해서는 對日 領土問題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30) 1992년 1월이래 추진해 온 가격자유화정책 등 衝擊療法에 의한 급진적 경제 개혁정책의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옐친을 지지하는 개혁파 정치세력이 약화되고 보수파의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바, 옐친은 중도와 연합인 「시민동맹」과 제휴함으로써 정국을 관리하려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옐친은 1992년 10월 6일 최고회의에서의 施政方針演說에서 개혁의 온건화를 주장하는 「시민동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평가하고, 향후의 經濟政策을 軍産複合體·産業系의 主導로 행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가능성이 크다.

이상에서 볼 때 아직 러시아외교는 고르바초프 시대의 「신사고」에 상응하는 새로운 指導理念, 또는 「신사고」의 發展形態를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西歐派와 슬라브派 또는 西方一邊倒論과 全方位外交論間의 대립은 아직 완결되지 않았으나, 러시아정치의 보수화 경향과 함께 향후 러시아는 「서구에 대한 일방적 추종」보다는 일차적으로 獨立國家聯合內 구소련 구성국가와의 관계를 중시할 것이며, 隣接國家와의 우호관계 유지 차원에서 유럽 및 아시아 국가들과의 선린관계를 모색할 것이다.

다만 동북아정책은 國內問題, 특히 경제침체 극복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초점이 모아질 것이며, 이는 특히 日本을 위시한 역내국가들과의 經濟協力 중시 외교정책 추진을 의미한다. 한편 걸프전 이후 서방측의 자금 흐름이 변화하여 서방측의 대규모 對러시아 經濟援助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여력이 있는 유일한 국가는 日本이라는 주장도 있다.³¹⁾ 따라서 향후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 및 경제협력 획득에 주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외교가 경제협력 획득이라는 목표만을 추구하지는 않을 것이며, 전술한 안보·경제의 목표

31) 藤經明, “ソ連版マ-シャル・プランは實現するか,” 「世界週報」, 1991年 6月 25日, p. 7.

들을 복합적으로 추진할 것이다.³²⁾ 外交는 內政의 연장이나, 구소련의 내정 위기가 결과적으로 내정문제를 외교를 통해서만 해결하려 한 新思考 外交政策의 限界에서 기인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³³⁾ 향후 러시아는 외교를 추진하면서도 國內問題를 무엇보다도 중시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³⁴⁾ 1992년 9월 엘친 대통령이 일본으로부터의 경제지원이라는 매우 중요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북방영토의 對日 인도 반대라는 국내 여론을 고려하여 訪日을 연기하였던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된다. 즉 향후 러시아는 國內問題 解決을 우선시함에 따라 西方에 대한 經濟援助에 의존하는 외교정책보다는 中國式의 自力更生路線을 모색하는 방향에서의 외교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32) 이와 관련하여 러시아는 최근 중국에 SU-27 60대 등 신형무기를 수출하였는데, 이는 1992년 4월 제6차 러시아 인민대표대회 이후 슈메이코, 히자, 체르노미르진 등 軍産複合體 출신간부가 부총리로 입각하고, 그동안 가이다르 총리서리가 관할해 온 輸出許可權이 히자 부총리로 이양됨에 따라 무기수출이 外貨獲得 手段으로 강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군산복합체의 영향력 증대와 함께 러시아의 武器輸出이 향후 증대될 가능성이 크다.

33) 예컨대 국내경제 회복문제의 경우, 구소련은 自力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할 수 없다는 한계로 인하여 외교역량을 발휘하여 國際的 經濟支援을 확보하려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국제적 지원 확보에 실패하면서 경제난이 가중되었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內政 危機를 야기시켰던 것이다.

34) 이와 관련하여 「이즈베스찌아」紙는 對外政策의 長期的 成功은 대내정책의 성과와 연계되어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하면서 엘친 대통령에게 고르바초프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Izvestiya*, 1992. 2. 3.

2. 域內國家間 兩者·多者關係

가. 兩者關係

(1) 美·러 關係

1992년 6월 16 ~ 17일간 워싱턴 미·러 정상회담 결과 양국은 우호와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同伴者關係를 천명하고 「미·러 협력·우호를 위한 헌장」(워싱턴憲章)을 채택한 동시에, 대규모 戰略核武器減縮協定 등에 합의하였다.³⁵⁾ 이에 따라 향후 미·러 관계는 종래의 적대적 대결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우호·협력관계를 열어 나갈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國內情勢 不安定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미·러 양국이 진정한 의미에서의 선린·우호관계로 발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소연방 해체 이후 미국은 對蘇 封鎖政策에 입각한 世界戰略을 수정하면서 러시아와의 善隣·友好關係 정립을 모색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에 대한 警戒를 유지하고 있다. 즉 미국은 소련의 군사적 위협이 현저히 감소하였음을 인정하면서도 첫째, 구소련의 정치·경제체제 개혁이 여전히 不確實性을 안

35) 미·러 양국은 2003년까지 현재 보유중인 長距離 戰略核武器를 3분의 1만을 남기고 모두 폐기하기로 합의함으로써 戰略武器減縮協定(START, 1991. 7) 合意水準에서 또 다시 절반 이상을 감축하여 미국 3,500개, 러시아 3,000개로 대폭 하향 조정하였다. 또한 中型 大陸間彈道彈(ICBM)과 多彈頭 大陸間彈道彈을 폐기하기로 합의하였다.

고 있으며, 둘째, 러시아를 포함한 구소련이 여전히 미국을 파괴할 수 있는 유일한 軍事力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의 정치·경제·군사적 未來를 경계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러시아와의 軍備縮小協商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함으로써 러시아의 軍事的 威脅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구소련의 핵무기 등 軍事力이 통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러시아를 지원하고자 할 것이다.³⁶⁾ 즉 미국은 기본적으로 구소련 해체 이후 초강대국으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상실한 러시아가 재차 強大國으로 재생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나, 동시에 러시아가 붕괴하여 豫測不能의 상태로 되는 것도 미국의 國益이 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따라서 미국에 있어서 가장 바람직한 러시아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으면서도 아시아와 남북문제 등에서 미국의 외교정책에 협력할 수 있는 러시아인 것이다.

미국의 對러시아 정책은 다양한 國際懸案에서 구소련의 계승자로서 러시아를 疏外시키지 않는 方向으로 모색·추진될 것이며, 이는 동북아지역에 있어서도 유사할 것으로 보인다. 즉 미·러의 영향력 약화와 일·중의 영향력 증대로 특징지워지는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과정 속에서 美國은 地域 均衡者로서

36) 러시아 外交指導部の 西歐主義的 對美 偏向에 반대하는 학자들은 미국의 대러시아 정책은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核武器와 政治的 將來에 대한 不安感에서 출발하고 있으며, 미국은 러시아를 전면적으로 원조할 의향이 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Pushkov, "Is Alliance with the West Feasible?" 참조.

日·中의 과도한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면서도 러시아를 지역현안 해결에 중요한 파트너로 대우하는 방향에서 域內 勢力關係를 관리하고자 할 것이다.

한편 러시아는 西歐主義에 대한 국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서방으로부터의 경제지원 획득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런 점에서 앞으로도 미국을 중시하는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美國은 러시아 엘진 政權의 安定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 가속화를 희망하고 있으나, 미국의 경제상황 및 대통령선거 등 國內要因으로 인해 전면적이고 대규모적인 對러시아 援助를 실시할 수 있는 능력을 결여하고 있다. 결국 러시아는 對美 關係에 있어서 앞으로 미국의 독자적 지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동시에, G7 등 국제사회가 對러 원조를 적극화할 수 있도록 미국이 영향력을 행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차원에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2) 美·日 關係

미·일 관계는 1990년대 들어 脫冷戰으로 인한 공동위협 부재 및 양국간의 경제적 역학관계 변화에 따라 외교·안보분야에 있어서 役割 再調整을 모색하고 있다. 즉 미국은 아시아에 대한 안보개입을 축소·개편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외교·안보적 역할 재조정문제는 현재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 經濟關係 葛藤과 맞물려 향후 양국관계에 긴장과 갈등을 초래할 수도 있을 것으

로 보인다.

미국은 일본의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에 대하여 二重的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전세계적 차원에서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경제·외교적 협조가 불가결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국은 일본과의 관계를 「同伴者關係」로 규정하여³⁷⁾ 일본의 국제적 위상 제고 및 세계적 차원에서의 일본의 정치·군사적 역할 확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세계의 주요 정치·군사적 문제들에 대한 미·일간의 協議體制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미국은 일본의 군사대국화가 아·태지역에서의 미국의 主導權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이 미·일 동맹체제의 틀을 벗어나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수준으로까지 증대될 수 없도록 견제하고 있다.³⁸⁾

미·일 양국은 미·일 안보동맹의 지속이 양국관계 안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미·일 양국은 同盟體制의 틀 속에서 양국관계의 재조정을 모색할 것으로 보

37) 1992년 1월 9일 미·일 양국은 정상회담을 통하여 냉전체제 붕괴 이후 미·일 관계를 정리한 「東京宣言」과 「行動計劃」을 발표하고, 양국이 전세계적 차원에서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며, 아시아에서는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를 기반으로 시장개방 확대를 위해 공동 노력하는 데 합의하였다.

38) 이와 관련 크로우 제독은 일본의 軍備增強을 미·일 동맹체제를 통하여 견제할 것임을 주장한 바 있다. William J. Crowe,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Pacific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2 (Spring 1991), p. 135.

인다. 이는 미국의 전진배치전략이 동맹체제를 전제로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의 역내 안보역할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기존 동맹체제 유지의 필요불가결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의 입장에서도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미·일 안보동맹체제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일 양국은 미·일 동맹의 유지 필요성을 공감하면서도 役割 調整의 性格과 範圍에 대해서는 다소의 異見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향후 상황의 변화에 따라 양국관계의 중요한 緊張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경제관계에 있어서 貿易摩擦問題는 양국간의 가장 중요한 현안과제로 미·일 양국은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으나 앞으로 이 문제가 쉽게 해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다양한 통상관련 법안과 미·일간의 「構造調整協議」 등 법적·제도적 장치를 통하여 심화되고 있는 양국간의 貿易 不均衡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무역불균형 시정노력으로 駐日美軍의 경비부담, 대외경제지원 및 대미 무역문제에 있어서 미국측 요구를 수용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92년 1월 미·일 양국은 「동경선언」과 「행동계획」을 통하여 무역불균형 시정을 포함한 經濟關係 調整을 위한 구체적인 접근을 모색한 바 있다. 양국간의 무역마찰문제 해결은 양국관계 뿐만 아니라 國際經濟 危機를 막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양국은 構造調整協議를 통하여 지속적인 의

견 접근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3) 美·中 關係

1989년 6·4 天安門事件 이후 미·중 관계는 중국의 人權狀況에 대한 미국의 비판, 중국에 대한 시장개방 압력, 제3국에 대한 중국의 핵기술 지원 및 무기수출에 대한 미국의 비난 등으로 인해 냉각된 관계를 유지해 왔다. 미·중간의 이러한 불편한 관계는 1991년 11월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1992년 1월 31일의 부시 미대통령과 李鵬 總理의 회담 등을 계기로 다소 해소되는 조짐을 보이기도 했으나 미국의 비난·압력과 중국의 반발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특히 1992년 9월 2일 미국이 臺灣에 대한 150대의 F16 전투기 판매를 결정하면서 양국관계가 더욱 냉각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지도부가 한결같이 양국의 우호적인 관계발전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중 관계가 1989년 이전의 우호적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소연방 해체 이후 미국의 對中政策이 점차 「特惠」의 측면을 줄이고 현실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實利爲主의 정책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중국 역시 정치·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발전이 절실히 요구되기는 하나 사회주의권 변화 이후 가중되고 있는 미국의 압력을 그대로 수용할 경우 중국의 대내외적 立地가 더욱 어려워지고, 결국 「和平演變」의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對美關係에서 유연한 입장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미·중간의 이러한 인식·입장차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과거 양국이 對蘇戰略 차원에서 유지했던 우호적인 관계를 완전히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국제질서의 변화에 따른 양국관계의 再定立이 불가피하다. 또한 미·중 관계가 현실적으로 조정되는 과정에서 중국의 정치민주화 및 인권상황의 개선, 미·중 경제관계, 臺灣問題,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이해관계 대립 등의 문제는 양국관계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첫째, 중국의 정치민주화와 인권상황의 개선을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은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이다. 1989년 天安門 사건 이후 미국은 중국의 인권상황 개선 및 정치민주화의 추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중국은 이를 內政干涉으로 받아 들임으로써 이 문제는 양국관계를 냉각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물론 중국은 미국의 요구에 대해 심한 거부감을 보이면서도 「인권백서」 발간(1991. 10) 및 6·4 천안문사건 주동자 일부 석방(1992. 5) 등 중국의 인권상황에 대한 부정적인 國際輿論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³⁹⁾ 중국의 인권문제와 관련된 미국의 최근 정책 역시 모든 政治犯의 석방 등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무리한 조건을 제시하기보다는 선별적인 制裁措置 등을 통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

39) 「文匯報」, 1992年 5月 28日.

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다.⁴⁰⁾ 그러나 이러한 변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정치민주화와 인권문제를 체제유지 및 정권수호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內政 次元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둘러싼 미·중간의 대립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중간의 通商摩擦 역시 양국간의 관계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제이다. 1990년 이후 미국의 대중국 貿易赤字가 심화되면서 미국은 이에 대한 시정책으로 중국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중국에 대한 최혜국대우 철회를 고려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양국은 1991년 10월 이후 貿易協商을 지속하여 왔으나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또한 1992년 8월 19일 北京에서 개최된 미·중 무역회담에서 미국은 중국이 1992년 10월 10일까지 수입관세 인하, 수입할당제 철폐, 무역관계법 개선 등 市場開放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自國 通商法 301조에 의거 39억달러에 이르는 報復關稅를 부과하겠다는 점을 중국에 통보하였다. 결국 미국의 대중국 무역보복조치는 양국간의 추후 협상을 통해 일단 철회되었으나 양국의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점을 찾은 것은 아니다.⁴¹⁾

40) *The New York Times*, May 29, 1992.

41) 미·중간의 貿易協商이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요인중의 하나는 양국간의 경제문제가 경제외적인 문제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시장개방 요구는 사실상 중국의 인권문제, 무기수출 등에 대한 制裁措置의 성격을 띠어 왔고 중국 역시 이를 경제외적인 압력, 내정간섭 차원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무역불균형 시정을 위한 양국의 노력이 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셋째, 1992년 9월 2일 미국의 臺灣에 대한 F16 전투기 판매 결정으로 1979년 수교 이후 미·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인 요인으로 남아 있던 臺灣問題가 다시 부각되고 있다. 특히 미·중관계가 전반적으로 냉각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臺灣政府의 적극적인 외교공세에 중국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시점에서,⁴²⁾ 미국이 1982년의 8.17 공동성명(對대만 무기판매의 궁극적 철폐 규정)을 위반하고 중국의 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대규모 첨단무기 판매를 결정하였다는 점에서 동 문제는 향후 미·중 관계를 더욱 냉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상과 같은 양국간 현안문제를 둘러싼 對立 可能性에도 불구하고 미·중 양국 모두 기본적인 우호관계 유지 필요성과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관계의 현실적인 조정 불가피성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⁴³⁾ 양국관계가 극도의 對立

42) 臺灣政府는 「雙重外交」(중국과 臺灣의 二重承認 유도) 방침에 따라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따라 臺灣은 1989년 7월 그레나다와 외교관계를 재개한 이래 라이베리아, 니카라과, 중앙아프리카, 니제르 등 아프리카·중남미 국가들과 외교관계를 회복했다. 더욱이 최근 주요 서방국가들의 對臺灣政策이 변화조짐을 보이자 중국은 臺灣의 이러한 외교공세를 「一中一臺」, 「一國兩府」 실현을 위한 음모라고 비난하고 있다. “惡化中美關係的嚴重步驟,” 「人民日報」, 1992年 9月 5日 評論; 徐林興, “向臺售武嚴重損壞中美關係,” 「文匯報」, 1992年 9月 4日 참조.

43) 미국의 터커 교수는 脫冷戰 이후 對蘇戰略 차원에서의 중·미협력의 의미를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미국은 캄보디아·한반도 문제의 해결 및 핵확산 억제 등의 문제에서 상호협력 필요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Nancy Bernkopf Tucker, “China and America: 1941 ~ 1991,”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pp. 90 ~ 92 참조.

상태에 빠지지 않는 것이며, 대내외 정세의 변화 및 事案의 성격에 따라 대립과 협력을 반복하는 不安定한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4) 日·中 關係

1980년대 이후 일·중 관계의 기본 성격은 相互牽制와 相互協力の 양측면을 갖고 있다는 것이며 이러한 측면은 앞으로도 일·중 관계를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 될 것이다. 중국은 일본의 경제역량을 자국의 경제발전에 최대한 활용해야 함은 물론 동북아지역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일본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일본도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중국의 默認 내지는 協調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향후 일·중 관계는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교류·협력과 잠재되어 있는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립 가능성을 어떤 식으로 조화시켜 나가느냐에 따라 樣相을 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일본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 움직임을 우려하여 이에 대한 견제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면서도 이를 당장 表面化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그동안 중국은 對日關係에서 주로 경제적인 측면에 치중하여 일본의 資本과 技術 誘致에

44) 日·中 關係의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는 Gerald Segal, "The Challenges to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XXI, part III (October 1990), pp. 308 ~ 309 참조.

중점을 두어왔으며, 무역불균형 시정과 기술이전문제에 대한 일본의 인색한 태도, 일본의 역사 왜곡, 釣魚臺(센카쿠)를 둘러싼 領土紛糾 등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측면에서의 교류·협력 강화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왔다. 특히 중국은 1992년 이후 改革·開放政策의 「제 2도약」을 추진하면서 일본과의 경제협력을 더욱 중시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對日關係와 정치·군사적인 측면에서의 대일관계가 상호 모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되 우선 양국의 경제교류확대에 일차적인 중점을 둔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⁴⁵⁾ 이에 따라 중국은 일본의 유엔 平和維持活動(PKO) 파병 등의 문제에 대해 일본이 보다 신중히 처리해 주기를 바란다는 선에서 일본의 軍事力 膨脹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8,000억엔에 달하는 제 3차 엔 차관(1990 ~ 95)의 조기도입문제 등 경제협력 강화와 관련된 문제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다.⁴⁶⁾

일본도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의식하여

45)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상황을 감안할 때, 일본의 政治·軍事的 影響力 확대를 근본적으로 제어하는 것이 불가피할 바에는 對日 關係에서 이에 지나치게 제약받기보다 서로의 입장을 일정하게 수용하는 가운데 새로운 일·중 관계를 再定立해 가는 것이 양국 모두에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46) 江澤民 總書記는 1992년 4월 8일 東京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은 일본의 평화적인 발전을 희망하는 동시에 아·태지역 및 세계평화 촉진에 공헌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海外派兵은 매우 敏感한 문제이며 중국은 일본의 우방으로서 일본이 이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 주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2年 4月 9日.

일본이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결코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는 軍事大國의 前轍을 밟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⁴⁷⁾ 중국이 요구해 온 日王의 중국방문과 경제협력문제에서도 신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처럼 중국과 일본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목표와 기본 인식에서 차이를 갖고 있으면서도 相互協力에 대한 현실적인 필요성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불만을 최대한 표출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즉 상대방의 민감한 부분을 자극하기보다는 현상황에서 협조가능한 부분에 일차적인 주안점을 두면서 兩國關係를 재정립해 간다는 기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 일·중 관계가 양국이 의도하는 것처럼 상호대립 가능성보다 상호협력만을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할 수는 없을 것이다. 즉 일·중 양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경쟁과 관련된 對美關係, 한반도문

47) 가이후 前日本總理는 1991년 8월 12일 北京 中日青年交流中心에서의 연설(새로운 세계와 일·중 관계)을 통해 “일본은 平和國家에 대한 신념을 버리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이를 계속 고수할 것”(「人民日報」, 1991年 8月 13日)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미야자와 일본총리는 1992년 4월 6일 江澤民 총서기의 일본방문중에 가진 회담에서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은 軍事大國을 다시 추구하지 않기로 결심했다”(「人民日報」, 1992年 4月 7日)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아키히토 日王은 중국방문(1992년 10월 23 ~ 28일) 과정에서 과거 일본의 침략행위를 사과하는 동시에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국민은 전쟁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고 平和國家를 지향하기로 굳게 결심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제에 대한 인식차이 이외에 과거역사 청산문제,⁴⁸⁾ 영토분규, 對臺灣 관계 등의 문제들을 안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들은 계속해서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5) 中·러 關係

중·러관계는 1989년 5월 고르바초프의 중국방문을 통한 장기간의 대립상태를 청산하고, 소련의 급격한 변혁에 대한 중국지도부의 불만과 관계 악화, 소련 붕괴 이후 舊蘇聯의 국내 상황 변화에 대한 중국의 探索·觀望 과정을 거쳐 새로운 관계를 정착시켜가는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우선 중국은 1989년 6·4 天安門事件 이후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 바탕을 둔 소련과 동유럽에서의 급격한 정치·경제개혁이 중국내 민주화 운동을 촉발·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인식 때문에 소련과의 關係發展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소련의 변화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하는 데 역점을 두어 왔다.⁴⁹⁾

48) 중국에서는 中·日戰爭 과정에서의 중국인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의 배상문제와 관련하여 1992년 3월 중국 제5기 全人大 5차회의에 案件이 제기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차원에서 「대일배상추구위원회」를 조직하여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는 일·중간의 과거역사 청산문제가 완결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민간차원의 對日賠償 요구에 대한 중국정부의 입장은 ①일본은 중국침략으로 야기된 복잡한 문제들에 대해 합당한 처리를 해야 하며, ②중국정부는 1972년 「中·日共同聲明」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표명한 바 있고 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人民日報」, 1992년 3월 24일(1992년 3월 23일 錢其琛 외교부장의 내외신 기자회견).

49) 당시 중국은 “소련의 변화는 전적으로 소련의 內政이며 중국은 이에 간섭하지 않는다”(「人民日報」, 1991년 8월 21일)는 공식적인 論評 이외에 소련의

그러나 중국은 소련의 붕괴 및 소련공산당의 해체, 각 구성 공화국의 독립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舊 蘇聯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를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의 이러한 정책변화는 사회주의권의 변화가 본격화되면서 수세적·피동적 태도로 일관해 온 기존의 태도를 전환하고 새로운 국제질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는 중국지도부의 인식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즉 중국은 理念的 紐帶를 기반으로 한 과거의 관계를 청산하고 政治·經濟的 實利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국가관계의 한 부분으로서 러시아와의 새로운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게 된 것이다.⁵⁰⁾

러시아 역시 국내의 정치·경제체제 정비에 주력하여 왔으나 점차 과거 소련이 담당했던 국제적인 地位와 役割을 계승함으로써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중에는 중국과의 새로운 관계 발전이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중

변화에 대한 지도부의 「三不方針」(不評, 不支持, 不反) 및 「十二字方針」(兵臨城下, 敵強我弱, 以守爲主)을 하달한 것으로 알려지는데 이는 소련의 변화에 대한 중국의 수세적인 태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莊蒙, “鄧提內政外交‘十二字’新方針,” 「鏡報」, 1991年 11月號, pp. 84 ~ 86 참조.

50) 중국정부의 이러한 입장은 1992년 8월 18 ~ 19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중·러경제무역·과학기술합작위원회」 제 1 차 회의에 참석중 중국의 田紀雲 부총리가 강조한 부분에서도 잘 나타난다. 田紀雲 부총리는 19일 가이다르 러시아 총리서리와 의 회담에서 “중국정부는 舊蘇聯의 각 공화국 및 러시아의 국내정세가 어떻게 변하든간에 平和共存5原則 및 互惠平等的의 기초위에서 러시아와 우호·협력관계를 진일보 발전시키고자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2年 8月 21日.

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통해 일차적으로 國境問題를 매듭 짓고 양국간의 군사적 긴장을 종식시킴으로써 안보상의 威脅 要因을 제거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⁵¹⁾ 또한 이를 바탕으로 양국간 國境貿易의 活性化 및 중국의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유도하는 동시에 러시아 극동지역의 경제개발과 중국의 동북지역 경제개발을 연계시키려는 구상을 갖고 있다.⁵²⁾

이처럼 중국과 러시아는 정치·안보·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상호협력 필요성에 의거하여 양국관계를 새롭게 정립시켜 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중국의 러시아 무기 구입, 열쑤 대통령의 중국방문 추진 등 보다 구체적인 부분에서의 협력 강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중·러 관계는 아직까지 양국의 관계발전을 제약할 수 있는 불안정한 요인들을 안고 있다.

우선 중·러간에는 相互不信의 요인들이 존재한다. 특히 중국은 러시아를 포함한 舊蘇聯 국가들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내면적으로 이들이 世界社會主義運動의 역사적 발전을 저해했다는 불신감과 불만을 갖고 있다. 따라서

51) 이러한 인식하에 중·러 양국은 1992년 3월 16일 코지레프 러시아 외무장관의 중국방문시 「중·러 국경협정」을 체결했으며, 李鵬 총리는 3월 17일 코지레프 외무장관 접견시 국경무역의 활성화를 통한 중·러 경제협력 확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人民日報」, 1992年 3月 18日.

52) 중국과 구소련과의 貿易은 최근 점증하고 있다. 1988년 18억 5천루블, 1989년 24억루블, 그리고 1990년은 27억루블로 추계되었다. *Pravda*, 1991. 2. 14. 현재 러시아 등 구소련은 이미 중국의 5대 무역상대국으로 부상되었으며, 향후 中國은 구소련과의 接境都市들을 對外開放區로 지정하여 경제협력 확대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社會主義理念과 體制를 고수하는 한 러시아는 여전히 경계의 대상이며 쌍방의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따라 관계발전의 수준을 조절할 수 밖에 없다.

그 밖에 중국과 러시아는 동북아지역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도 대립할 소지를 안고 있다. 중국은 과거 美·蘇가 갖고 있던 동북아지역에서의 독점적인 影響力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러시아와의 대립이 불가피하다.

(6) 日·러 關係

러시아는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적극 추구하고 있으나, 대일 관계개선은 양국간의 전통적인 불신감, 일본의 위협인식, 미·일 안보관계의 특수성, 北方領土問題 등으로 단기간에 성취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러시아는 향후 政經分離를 주장하면서 양국간 경제협력을 증진시킬 것을 강조할 것이며, 특히 경제와 학술 등 민간부문에서의 對日接觸을 증대시켜 이를 정치적 관계정상화로 연계시킨다는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대일 관계개선을 도모할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일본이 첫째, 전통적인 對蘇 敵概念을 수정하고 있으며,⁵³⁾ 둘째, 대소 경제지원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셋째, 일본정부가 북방영토문제로 政經不可分을 주

53) 일본은 1990년판 「防衛白書」에서 「소련 잠재적 위협론」을 삭제하였다.

장하나, 민간차원에서 정경분리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양국간 관계개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對日 관계개선을 위해 협상을 적극화하고 특히 경제영역에서의 협력을 모색하는 등 양자적 접근을 계속할 것이다.

이에 따라 經濟協力の 경우, 양국은 이미 1991년 4월 18일 외무장관회담에서 양국간 경제·과학·기술·문화협력 및 기술지원에 관한 15개 경제관련 문서에 서명하였으며, 10월 14일 일본정부는 25억달러의 대소 지원책을 발표하고, 12월 14일 마샬플랜을 참조하여 西方國家들이 소련에 대한 자금 공여 등 경제지원을 제공할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시베리아 개발문제와 관련, 최근 일본은 시베리아 야쿠트지역 및 사할린의 천연가스를 개발하여 이를 한반도와 일본에 파이프로 연결한다는 「극동에너지개발계획」(Vostok Plan)에 적극 참여하기로 결정하였다.⁵⁴⁾ 양국 경제관계는 일본의 정경불가분 정책에 따라 북방영토문제 해결과 연계되어 있으나, 최근 일본 經濟界에서 정경분리를 요구하고 있고 러시아가 일본과의 경제협력 확대를 적극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도 계속 증대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54) 일본은 「사할린 대륙붕 석유·천연가스 개발협력 프로젝트」를 미·일·소 3국간 합작투자로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나카오 通産長官은 1991년 10월 23일 엘진과 회담하면서 시베리아 개발 참여를 적극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北方領土問題⁵⁵⁾ 러·일 양국의 입장이 상이하고, 특히 영토반환 등 문제해결 권한을 가지고 있는 러시아의 國內情勢, 經濟的 損益, 軍事安保的 考慮 등의 요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어 解決方式 등 미래를 전망하기 매우 어렵다.⁵⁶⁾ 더욱이 1992년 9월 13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옐친 대통령의 일본방문이 북방영토 일본 인도에 반대하는 國內輿論에 밀려 연기되면서 일·러 관계 전반이 급냉각되고 있어 북방영토문제가 단기간내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게 되었다.

현재의 러시아 국내정세에 비추어 러시아정부가 북방영토문제를 早期 解決하려 할 경우, 政治的 危機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러시아는 北方領土問題를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해결하고자 할 것이며, 일본도 정경불가분의 원칙에 입각한 기존 방침을 변경하여 보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러시아와의 經濟協力을 선행 모색함으로써 북방영토 반환에 대한 러시아 국내여론을 선도하고자 할 가능성이 있다.

55) 北方領土는 에토로후(澤捉, Iturup), 쿠나시리(國後, Kunashir), 하보마이(齒舞, Habomai), 시코탄(色丹, Shikotan) 등 日本 北海道 北端에 위치한 쿠릴열도(Kuril'skie ostrova, 千島列島) 最南端 島嶼群을 지칭하며, 현재 행정구역상 러시아연방 사할린州에 소속되어 있다. 4,996km²의 총면적에 인구는 24,800여명으로 1947년 일본인이 추방된 이후 住民은 모두 러시아인이다. 그러나 원래 이 지역은 17세기 이래로 아이누族이 살고 있었으며, 역사적으로 北海道의 부속 도서로서 일본의 영토로 간주되어 왔다는 점에서 러·일간의 領土紛爭 對象으로 되어 現在 러·일 양국관계에서 최대의 현안으로 부각되고 있다.

56) 구체적인 논의는 姜元植,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러·日의 立場과 解決 展望,”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 (1992), pp. 69 ~ 102 참조.

나. 多者關係

(1) 安保協力

러시아는 구소련 이래로 계속하여 아시아지역에서 유럽안보協力會議(Conference on Security and Cooperation in Europe: CSCE)와 같은 多者間 安保協議機構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하여 왔다.⁵⁷⁾ 즉 러시아는 유럽안보협력회의가 유럽의 安全(평화, 긴장완화, 신뢰구축, 군비통제)과 協力(경제, 과학기술, 문화, 인도주의, 인권)을 증진하는 기틀로 작용하였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시아에서도 CSCE를 모델로 한 다자간 안보

57) 소련의 아시아 집단안보구상은 1933년 蘇聯의 태평양불가침조약 체결 제안과 태평양상호원조조약 체결 구상을 효시로 하고 있다고 한다. 木村明生, “アジア安保構想: 스탈린에서ゴル바초프へ,” 『ソ連研究』, 第3號 (1986年 10月), p. 29. 그후 브레즈네프 서기장은 1969년 6월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3차 세계공산당대회에서 「아시아 集團安保」構想을 천명하였으며, 고르바초프 시대에 들어서는 적극적인 아시아정책 추진과 함께 아·태 집단안보를 강조하였다. 즉 고르바초프는 1985년 5월 21일 蘇聯을 방문한 간디 인도수상 환영 만찬회에서 「全아시아 포럼」(All-Asian Forum) 구상을 제창한 이래, 아·태지역의 집단안보보장체제의 확립 필요성을 누차에 걸쳐 강조하고 있는데, 제27차 당대회 보고(1986. 2. 25)에서 「포괄적 국제안전보장체제」의 확립, 블라디보스톡 연설(1986. 7. 27)에서 「아시아版 헬싱키會談」 제의,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1988. 9. 16)에서 「全아시아 安保協力會議」 제안, 그리고 北京演說(1989. 5. 17)에서 「全아시아 過程」 주장 등이었다. 또한 세바르드나제는 1990년 9월 블라디보스톡 연설에서 「汎아시아 포럼」과 1993년 「아시아 外相會議」를 제의하였다. 한편 고르바초프는 1991년 4월 17일 日本 衆議院 演說에서도 아시아지역 국가간의 상호불신을 제거하고 군축의 촉진과 협력관계 강화를 위하여 蘇·美·日 간의 3國會議 개최, 안전보장과 경제협력을 논의할 多者間 協議機構 창설을 위한 蘇·美·日·中·印 간의 5國會議 개최, 동북아시아·동해(일본해) 수역의 안전보장과 협력지대의 창설 등 이른바 「東京독트린」을 발표하였다.

협의기구가 창설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왔다.

또한 域內國家들도 구소련의 제안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 필요성을 강조하여 왔다. 예컨대 1988년 10월 유엔총회에서 盧泰愚 대통령의 「동북아 평화 협의회의」 제의 이외에도 1990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 에반스 오스트레일리아 외무장관은 아시아에 있어서도 유럽의 CSCE와 같은 안전보장문제를 처리하는 틀을 설립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캐나다도 1990년 이래 「北太平洋 安保協力 對話」(The North Pacific Cooperative Security Dialogue)를 제창하여 일본·중국·한국·북한·미국·구소련·캐나다 등 북태평양 7개국의 안전보장 대화의 촉진을 강조하여 왔다.⁵⁸⁾ 한편 일본은 1991년 7월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에서 나카야마 외무장관이 확대외무장관회의를 “안정도를 높이기 위한 정치적 대화의 場”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회의 산하에 高位實務級 協議體 설치를 제안하였으며,⁵⁹⁾ 1992년 6월 22일 미야자와 외무장관은 美·러·中이 참여하는 다국간 안전보장기구 설치를 주장하였다. 이에 따라 1992년 1월에 개최된 아세안 정상회담은 냉전후의 지역정세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매년 개최되는 확대외무장관회의를 域外國家들과 정치·안전보장

58) 캐나다의 「북태평양 안보협력대화」에 대해서는 Brian L. Job, “Canadian Defense Policy in the Pacific, Relevance, Commitments and Capabilities,” *Canadian Defense Quarterly*, vol. 21, no. 2 (1991), pp. 36 ~ 37 참조.

59) 日本外務省, 「外交青書」平成 3年版, p. 429.

문제를 협의하는 場으로 한다는 방침을 결정하였다.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이러한 호응에도 불구하고 美國은 기본적으로 아시아에서의 均衡者 役割 수행을 위해서는 일본·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美군사력을 배치시켜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이러한 前進配置戰略의 골간을 이루고 있는 쌍무적 안보동맹체제가 손상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에서 아시아 多國間 安全保障機構 構想에 기본적으로 반대하여 왔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볼 때, 미국이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첫째, 냉전후의 아·태지역에 있어서 안전보장에 대한 共同體意識의 고양을 배경으로 安全保障問題에 대한 多國間 接近이 강조되고, 다국간 대화의 촉진에 의하여 지역의 안전보장 공동의식을 높이지는 움직임이 활발히 제기되고 있다.

둘째, 일본은 기본적으로 美·日 同盟體制를 유지할 것이나,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외교·군사정책에 대한 일본의 발언권 제도화, 아시아 정치대국으로서의 자국의 위상 확립 및 보다 자율적인 대미 경제외교 추진 등을 위해 美·日間 雙務的 安保關係 一邊倒를 탈피하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창설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셋째, 미국도 아·태전략을 재조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기본적으로 쌍무적 동맹체제를 유지하면서도 域內 危機를 관리하기 위한 일정한 다자간 안보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⁶⁰⁾ 즉 최근 미국은 역내 균형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補助裝置로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인식하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며, 특히 클린턴 美대통령 당선자가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고 있어 同 機構 창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이 아시아 다자간 안보기구 설치에 대해 보다 강력한 의지를 표명할 경우, 역내국가간에 동 기구 창설 필요성에 대한 共感帶가 형성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거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이 미·일간 雙務的 安保同盟 유지를 전제로 制限的 機能을 수행하는 多者間 安保體制 형성에 동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물론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형성이 이루어질 경우, 同 機構에 대한 중국과 러시아 등 역내국가들의 입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일본은 제도화된 틀을 이용하여 역내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증대시키려는 의도이나, 중국은 일본의 영향력 증대를 제도화된 틀 속에 묶어 일본의 再武裝 가능성을 통제한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러시아는 아·태지역 진출창구로서의 의미에서 同 機構를 인식할 것이다.

60) 이와 관련하여 베이커는 캄보디아문제의 평화해결 과정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특정 안전보장문제에 대한 多國間 接近을 분쟁해결의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하고 있다. Baker, III, "America in Asia," pp. 5~6.

또한 동북아 및 아·태지역의 多者間 安保協力機構가 전혀 새로운 형태로 창설될 수도 있을 것이나, 기존의 機構를 확대·발전시키는 형태로 구성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전술하였듯이 아세안이 매년 개최되는 확대외무장관회의를 역외국가들과의 정치·안정보장문제에 대한 대화의 場으로 할 것을 결정하였고, 현재 아세안의 대화 상대국이 한국·미국·일본·캐나다·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및 유럽공동체이므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를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나,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의는 아세안에 관계된 문제만을 논의하도록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태지역의 전체적인 安保協力問題를 논의하기에는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가 地域經濟協力 뿐만 아니라 안보협력을 논의하면서 점차 아·태 다자간 안보협력의 場으로 발전해 나갈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⁶¹⁾

(2) 經濟協力

동북아지역에서의 多者間 經濟協力體 형성과 관련하여 역내

61) 일본도 아세안을 거론하였으나, 장차 APEC이 더욱 효율적인 안보협력기구가 될 것이라 간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西原正 防衛大學 教授는 地域安全保障 協議의 場으로 아세안 확대외무장관회담보다 APEC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Massashi Nishihara, "Security Initiatives in East Asia," presented in the Workshop on Shared Security Responsibilities, the Trilateral Commission, October 20 ~ 21, 1991, Revised April 5, 1992; 近藤重克, "冷戦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卷 第1號 (1992年 6月), p. 72에서 재인용.

국가들은 유럽과 달리 역내국가들의 정치·경제체제의 차이와 경제발전 수준이 불균형적이라는 점 때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 왔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에 비추어 볼 때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 가능성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첫째,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냉전구조의 와해 이후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下에서 經濟問題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세계경제 추세가 유럽공동체, 北美自由貿易地帶 등 블록화 추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도 역내 경제협력체 형성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둘째, 역내국가들이 모두 市場開放 압력 등 대외무역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국의 경제발전을 위해 주변국가들과의 협력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

셋째, 한·소 수교, 한·몽 수교, 한·중 수교, 중국의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추진 움직임 등 그동안 域內 經濟協力體 형성을 저해했던 이념·체제상의 장애요인들이 점진적으로 제거되는 추세에 있다.

동북아지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다자간 경제공동체 형성 움직임은 아세안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아세안 자유무역지대」(AFTA), 중국이 제시하고 있는 「東北亞經濟圈」,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環日本海經濟圈」 등이 있다. 우선 아세안 자유무역지대 구상은 아세안 국가들의 기존 협력체를 바탕으로 아세안 국가들간의 완전한 자유무역지대를 구축한다는

것으로써 이는 이미 구체적으로 추진되고 있다.⁶²⁾

중국은 자국의 경제발전에 유리한 역내 경제질서 형성이라는 차원에서 중·일·러·남북한·몽고를 포함한 東北亞經濟圈 창설을 강조하고 있다. 중국은 동북아지역 經濟秩序의 特性⁶³⁾을 감안한 역내 經濟協力の 基本 原則과 구체적인 協力方式을 제시하면서, 동북아지역에서의 다국간 경제협력구상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經濟合作의 추진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동북아 경제협력의 기본 원칙으로 「三分離」 원칙과 「自發性과 互惠平等」을 제시하고 있는데, 「三分離」 원칙은 역내 국가들의 사회제도 및 여건의 相異性을 감안하여 政經分離, 민간과 정부의 분리, 중앙과 지방을 분리함으로써 공동 경제발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自發性과 互惠平等」의 원칙은 역내 경제협력이 군사·정치·경제상의 통제에 의한 것이 아닌 자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동시에 특정 국가가 경제적인 이익을 독점해서도 안된다

62) 1992년 10월 23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경제장관회의에서는 1993년 1월부터 15개 생산품에 대한 關稅 인하가 합의되었으며, 와타나베(渡部恒三) 일본 통상상은 1992년 10월 24일 마닐라에서 개최된 아세안 확대 경제회의에서 아세안 국가들의 자유무역지대 구상을 지지하고 일본의 협력을 약속한 바 있다. *Far Eastern Economic Review*, October 29, 1992, p. 28.

63) 중국이 지적하는 동북아지역 경제질서의 특성중에서 중요한 것은 ①이념·체제의 東西關係, 경제상의 南北關係로 인해 정부 차원의 긴밀한 상호협조와 통제가 곤란하다는 分散性, ②다자간 경제협력체 형성은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치를 거쳐야 한다는 漸進性 등이다.

는 것을 의미한다.⁶⁴⁾ 최근 중국은 東北亞經濟圈 창설구상의 합리성과 실현 가능성을 강조하고 있어 향후 중국은 동 구상 실현을 위해 더욱 적극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⁶⁵⁾

일본은 중·러·남북한·일본의 5개국 이외에 홍콩·臺灣을 포함한 環日本海經濟圈을 창설함으로써 유럽공동체, 북미자유무역지대에 이은 제 3의 경제권 구축을 강조하고 있다.⁶⁶⁾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에 있어서 일본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環日本海經濟圈 구상은 중국의 東北三省과 러시아의 극동지역 및 北韓이 인접해 있는 지역(琿春을 중심으로 한 金三角地帶)을 동북아지역의 多者間 經濟協力の 기지로 하여 한국과 일본이 자본·기술을 적극 투자하기를 바라는 중국의 의도와 마찰을 빚을 소지가 다분히 있다.

동북아지역 및 아·태지역에서의 多者間 經濟協力體 형성을 위한 이상과 같은 다양한 구상들은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른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으며 아세안 자유무역지대를 제외하고는 아직 구체적인 實現段階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域內

64) 池元吉, “國際經濟集團化的趨勢與日本構築‘經濟圈’的設想,”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3號 (1991), pp. 11 ~ 12; 冬福全, “三大經濟圈發展的新趨向及其未來特徵,” 「世界經濟」, 1990年 10月, pp. 27 ~ 29.

65) 중국은 東北亞經濟圈 구상이 동북아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日本의 구상보다 自國의 구상이 보다 현실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池元吉, “國際經濟集團化的趨勢與日本構築‘經濟圈’的設想,” pp. 7 ~ 8.

66) 「讀賣新聞」, 1991年 1月 1日; 河合浪一, “環日本海經濟圈と日中協力,” 「日中經濟協會報」, 1990年 9號, pp. 2 ~ 4; 姜凌濬, “我國東北地區在東北亞經濟合作中的地位和作用,”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第3號 (1991), pp. 14 ~ 18.

國家들은 일본 주도의 경제권 형성에 대해 일본에의 經濟隸屬化를 우려하여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현재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美國도 일본 주도의 排他的인 地域經濟圈 형성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시아역 역내 국가들이 모두 經濟發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특히 미국·EC의 시장개방 압력이나 다른 지역에서 經濟권 형성 움직임에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는 점에서, 短期的으로 제도화된 단일의 「경제권」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와 같은 域內 經濟協力機構를 보다 확대·발전시키는 형태로 역내 다자간 경제교류·협력을 보다 제도화하여 나갈 가능성은 크다고 판단된다.

第三章 韓半島情勢의 現況과 展望

1. 域內國家들의 韓半島 政策方向

가. 美 國

미국의 對韓半島 政策은 한국전쟁 이후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의 분쟁 발발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韓·美 雙務同盟體制와 前進配置戰略을 근간으로 추진되어 왔다. 미국은 1990년대에 들어 동북아 안보환경 변화와 미국의 재정적자 누증에서 비롯된 國防費 削減壓力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반도 안보정책과 관련하여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한 상태에서 다음과 같은 政策調整을 모색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조정은 1993년 민주당 정부의 출범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으로 변화되지는 않을 것이다.

첫째, 미국은 韓·美 同盟關係가 미국의 동북아정책에서 根幹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바, 한국에 대한 安保介入을 축소하기보다는 最適費用으로 이를 유지하기 위해 韓國의 防衛費 分擔 확대를 추진할 것이다.¹⁾

1) 미국은 주한미군의 年間 維持費用 가운데 원貨로 지불되는 부분 중 한국정부의 부담비율을 연차적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일본의 분담수준인 73% 수준까지 증액하도록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pp. 9~10. 한국

둘째, 미국의 대한반도 前進配置戰略 調整은 주한미군 감축과 주한미군 역할 조정의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부시행정부는 1990년 4월에 발표된 「21세기 아·태전략개요」 보고서에서 駐韓美軍 3段階 減縮計劃을 발표하였으나,²⁾ 이는 부분적인 감축에 불과할 뿐 전면적인 철수가 아님을 강조해 왔다. 이計劃에 따라 1단계 감축이 완료되었지만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가 부각된 1991년 후반 이후 북한이 核問題를 해결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 2단계 철수계획을 연기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화하고 있다.³⁾ 美國은 북한 핵문제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타결될 경우 주한미군을 상당 정도로 감축할 가능성도 있으나, 가까운 장래에 주한미군 자체를 1사단 규모 이하로 감축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미국은 韓半島統一 이후에도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을 유지하여 동북아에서의 균형자 역할 및 영향력 유지를 도모할 것으로 전망된다.⁴⁾

의 防衛費 分擔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은 ① 미군주둔비용 분담 확대, ② 대외적인 군사역할 증대를 목표로 한 한국의 군사적 역할의 광역화, ③ 한·미·일간 「차세대전투기사업」에서 확인되는 미군수산업과 연계한 한국 군사력의 현대화 추진 등 3次元으로 전개되고 있다.

2)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tury*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pp. 15~17.

3) U.S. Department of Defense,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ly 1992, pp. 20~26.

4) 예컨대 칼 포드 미국방부 동아·태담당 차관보는 1992년 4월 訪韓時 “서기 2000년 이후까지도 상당 수준의 주한미군 병력을 유지할 것”이라 밝힌 바 있다.

또한 미국은 한국군의 역할 강화, 주한미군의 구조 및 역할 개편이라는 측면에서 작전통제권 및 휴전협정 관리 역할을 한국군에 이양하는 등 駐韓美軍의 役割 調整을 추진할 것이다.

셋째, 미국은 한반도에서 「비핵화정책」과 「핵우산정책」을 병행·추진하고 있다. 즉 미국은 남북한이 核武器는 물론 核再處理施設을 갖지 못하도록 하는 「비핵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⁵⁾ 핵보유국으로부터의 핵위협에 대한 대처 등 한국의 安全保障을 위해서는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한다는 정책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미국의 對北韓政策의 當面目標는 북한의 군사적 모험을 억지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미국이 추진하고 있는 政策方向은 크게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첫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보유 억제 및 북한의 군사능력 약화를 목표로 다양한 군사·정치·외교적 압력을 행사하고, 둘째, 한반도에서 북한의 군사적 행동을 억지하며, 셋째, 동북아 주요 국가의 대북한정책을 조정하고 이들과의 共同步調를 도출해 내기 위하여 多者的 이니셔티브를 취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무기 개발문제가 한반도 및 동북아 안정에 있어 중대한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북한이 핵무기

5) 부시 미대통령은 1991년 9월 27일 포괄적인 戰術核 廢棄宣言을 하였으며 이로써 1950년대 후반부터 배치해 온 것으로 알려져 온 한반도의 전술핵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었다.

개발에 성공할 경우 이것이 일본 등 역내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유도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동북아에 있어서 주요 安保懸案으로 상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의 핵문제 해결을 위하여 정치·경제·외교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며 이를 對北韓 關係改善의 핵심적인 前提條件으로 제시하고 있다.⁶⁾ 따라서 향후 북한이 핵재처리시설 보유 금지 및 南北 相互核査察이라는 美國의 立場을 수용할 경우, 미국이 대화수준을 격상하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임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한 정책이 한반도에서의 근본적인 安定沮害要因 제거 차원에서 北韓體制의 變化 유도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 미국은 핵문제 해결후에도 생·화학무기 및 미사일 생산·수출문제, 인권문제, 체제개방문제 등과 같은 포괄적인 문제들을 쟁점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북한의 체제 변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보인다.

韓半島 統一問題와 관련하여 미국은 통일 자체보다는 분단의 안정적 관리를 중시하여 왔으며, 한반도 통일의 경우에도 통일한국의 체제와 한·미 관계 등에 주목해 왔다고 볼 수 있다. 즉 미국은 통일된 한국이 서방, 특히 美國과 긴밀한 同盟

6) 미국이 대북한 대화수준 격상 및 관계개선의 前提條件으로 제기하고 있는 사항은 대체로 ① 남북대화 진전, ② 핵무기개발 포기, ③ 미사일 및 화학무기 수출 금지, ④ 국제적 테러리즘 포기, ⑤ 인권상황 개선, ⑥ 미군유해 송환, ⑦ 반미 적대선전행위 중지 등이다.

關係를 갖는 정치·사회체제를 유지하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미국이 韓半島에서의 불리한 現狀變更으로 인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에서 유지해 온 정치·군사·경제적 영향력 상실을 바라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기존 한·미 동맹관계의 희생을 전제로 하는 한반도 통일에는 반대 입장을 보일 것이다.

나. 日 本

일본은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增大를 통하여 東北亞 및 韓半島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의 對韓半島 政策目標은 ① 한반도의 위기상황 발생 방지, ② 일본에 적대적인 정권 수립 저지, ③ 한반도에 대한 政治·經濟的 影響力 확보를 통한 최대한의 정치·경제적 이익 도모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⁷⁾ 이러한 목표에 따라 일본은 한반도에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유지를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安保 次元에서 韓半島의 평화와 안정이 東北亞의 안정에 중요하며, 북한이 남한에 대한 위협으로 존재하는 한 일본에 대해서도 潛在威脅된다고 인식하여 한·일 우호·협력관계를 한반도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⁸⁾ 經濟的 側面에서 일본

7) Jungsuk Youn,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p. 33.

8) 日本外務省 編, 「外交青書」(平成 3年版), p. 208.

은 한·일간 무역불균형 및 첨단기술 이전과 관련된 양국간의 갈등요인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긴밀한 經濟關係를 유지하려 할 것이다.

한편 일본은 1990년대에 이르러 冷戰構造의 와해와 한·소 수교, 남북대화 진전 등에 따라 북한과의 수교교섭을 추진하고 있다. 1990년 9월 가네마루(金丸信) 前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自民黨·社會黨 代表團의 訪北을 계기로 본격화된 북한과의 修交 交渉은 북한의 核問題, 배상문제, 이은혜문제 등의 현안을 남기고 있다.

일본은 한반도의 現狀維持 차원에서 남북대화 진전과 남북한 平和共存을 지지하고 있으나, 통일한국의 軍事力과 經濟力을 위협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⁹⁾ 한반도 통일이 지역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여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일본은 단기적으로 「두 개의 한국」 정책을 견지함으로써 남북한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일본은 對北韓 관계개선을 통하여 대북한 영향력을 확보하고, 「2+4 회담」 제의 등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에 지속적

9) 예컨대 統一韓國의 軍事力이 남북한의 현수준(북한 110만명, 남한 60만명)을 유지할 경우, 총170만명으로써 일본 자위대의 25만명을 훨씬 능가한다는 것이며, 또한 통일한국이 核武器를 보유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또한 經濟的 威脅과 관련하여 통일한국은 근면한 勞動力과 6,500만 인구, 방위비 감소 등으로 경제강국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竹村健一, 「日本の悲劇」(東京: 祥傳社, 1991) 참조.

으로 관여하고자 할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장기적으로 남북한이 關係改善을 통해 사실상의 統一狀態에 도달하더라도 완전한 統合せ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기존 정책의 연장선상에서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즉 일본은 남북대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정착이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韓國과의 기존 경제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北韓의 경제개혁 과정에 개입하여 북한 경제의 對日依存을 유도함으로써 장기적으로 통일 이후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자 할 것이다.

다. 中 國

중국의 한반도정책은 ① 개혁·개방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政治·經濟的 基盤 조성, ② 자국의 정치·경제·군사적 영향력을 최대화할 수 있는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이라는 동북아정책 목표 실현을 위한 일차적인 手段의 性格을 띠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① 한반도의 안정 유지, ② 남한과의 경제 교류·협력 강화, ③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보 등의 次元에서 한반도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1980년대 이후 한반도문제에 대한 기본인식의 전환, 한국과의 비정치적인 관계 증진 및 대남북한관계의 조정, 한·중 수교 등 일련의 한반도정책 轉換過程에서 한반도의 안정 유지를 중시해 왔다. 즉 중국이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한 이후 韓半島의 安定 維持는 한반도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이러한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이다. 중국은 남북한 緊張緩和 및 關係改善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정착, 對南北韓 關係의 균형적 조정, 남북한간의 勢力均衡 실현을 통해 한반도의 안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앞으로 다음과 같은 政策을 추진하고자 할 것이다.

첫째, 중국은 남북한 당사자간의 平和的인 對話·協商을 통한 한반도문제 해결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여 한반도에 대한 주변국들의 영향력 행사를 억제하고, 남북한 각자의 입지 강화와 관련된 對中要求를 회피하고자 하는 한편, 남한에 의한 북한의 흡수통일 가능성을 배제하려 할 것이다.

둘째, 남한과의 정치관계 정상화, 경제교류·협력 증대에도 불구하고 南北韓과의 관계에 있어서 均衡을 최대한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즉 중국은 한·중 수교로 대남북한 관계의 현실적·균형적 조정이 일단락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한반도의 현상 유지 및 영향력 확대를 위한 基本手段으로 활용하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중국은 한·중 수교 이후 남한과의 정치·경제적 관계발전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대남북한 관계에서의 또 다른 불균형을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¹⁰⁾

10)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한·중 수교 및 노태우 대통령의 중국방문 과정에서도 잘 나타났다. 즉 중국은 한·중 수교가 中·北韓關係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으며(1961년 체결된 中·朝相互援助條約의 불변 등) 노태우 대통령 방중시 핵문제와 관련된 한국의 요구를 거부했다. 또한 李鵬 총리는 한국기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中朝關係의 不變」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중국은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우호·협력관계 유지,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유도, 북한의 국제적 지위 강화를 위한 미·일과의 수교 및 각종 국제기구 가입에 대한 측면 지원 등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이 북한과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데에는 대남북한 관계에서의 均衡을 통한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 이외에 사회주의 이념·체제를 고수하고 있는 국가로서의 連帶意識이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북한의 대내외적 역량 강화 및 사회주의체제 유지와 관련된 協力·支援을 지속할 것이다.

韓國과의 經濟交流·協力を 강화하는 문제는 중국이 한국과의 정치관계를 정상화하기 이전부터 중시해 왔던 문제로서 한·중간 정치관계 발전의 促進要因으로 작용해 왔다. 한·중 수교를 계기로 중국은 남한과의 경제관계 발전에 더욱 관심을 기울이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한·중 경제관계는 향후 한·중 관계발전의 중요한 指標가 될 것이다. 경제교류·협력 강화와 관련하여 중국의 對韓 政策은 한국의 자본·기술 도입과 교역 증대를 일차적으로 중시하면서 추진될 것이다. 중국은 鄧小平의 「南巡講話」와 14全大會를 통해 全方位 改革·開放政策의 추진은 물론 「社會主義 市場經濟體制」 확립 필요성을 천명하고 經濟發展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중국은 과거 남부 지역의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발전전략을 확대 조정하여 上海·烟臺·天津·大連 등 동부·북부 연안의 주요 도시를 거점으로 제 2 단계 경제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이들 지역에 대한 한국기업의 投資·技術合作 등을 적극 희망하는 동시에 양국간 交易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¹¹⁾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중국은 한국과의 경제관계 확대가 韓半島 均衡政策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¹²⁾

한편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현상 유지, 대남북한 관계의 균형 유지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核心的 部分을 차지하는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우위를 확보하고자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지위 증진이라는 보다 높은 차원의 外交目標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 차원에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는 것이다. 기타 주변국들에 비해 한반도문제에 대한 影響力 優位를 확보하려는 중국의 意圖는 우선 한·소 수교 이후 지금까지 누리고 있는 북한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 우위를 최대한 유지하는 동시에, 한·중 수교를 바탕으로 한국과의 정치·경제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중국은 북한의 개혁·개방 및 국제적 지위 강화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동시에 대북

11) 한·중 교역은 1970년대 후반 홍콩·일본 등 제3국을 통한 間接交易方式으로 시작하였으나 1986년 이후 연평균 38%의 급속한 증가율을 보여 1991년에는 57억 7천만달러를 기록했다. 또한 한·중 수교로 인해 政治的·法的 障礙가 해소되면서 양국간 교역은 앞으로 더욱 증대될 것이다.

12)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① 중국의 각 지방정부가 한·중 경제관계 발전의 主役을 담당하고(지방정부의 대외경제부문 자율권 확대조치의 일환으로), ② 한·중 경제교류·협력과정에서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며, ③ 북한에 대해 간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方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한 영향력 우위를 견지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미·북한, 일·북한의 관계개선과 북한의 핵문제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미·일이 북한과의 관계개선에 前提條件으로 제시하고 있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에 있어서 “남북한 모두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되며 한반도의 비핵화를 지지한다”는 기본적인 입장 표명을 통한 간접적인 勸告 이상의 대북한 압력을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¹³⁾

韓半島 統一에 대한 중국의 基本立場은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에 대한 한민족의 염원을 존중하며 한민족 스스로의 평화 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이다.¹⁴⁾ 중국의 이러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을 지지하되 統一方式은 반드시 남북한간의 대화·협상에 의한 「평화적」, 「자주적」 통일이어야 한다는 점을 표명하는 것이며, 중국의 동북아정책, 남북한관계,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 등을 모두 고려한 것이다. 즉 중국은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무력 및 외세 개입에 의한 통일,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은 자국의 동북아정책 및 한반도정책 目標 實現에 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국은 한편으로 북한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감안

13) 북한의 핵개발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基本 立場은 ① 남북한의 핵보유 반대, ② 한반도의 비핵화 실현이다. 그러나 중국은 북한의 핵개발문제와 관련된 國際的 壓力 행사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14) 韓·中 修交聲明 第5項, 「人民日報」, 1992年 8月 25日.

할 때 남한에 의한 북한의 吸收統一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것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北韓에 대한 對內外的 支援을 지속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일차적으로 外勢의 개입을 견제하고 남한(통일한국)과의 새로운 관계 발전을 도모하는 선에서 자국의 이해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사회주의권의 붕괴과정에서 융통성있는 정책을 취하였던 것처럼 일단 한반도에서의 상황변화가 기정사실화되면 신속한 정책전환을 시도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라. 러시아

종래 구소련은 革命과 理念的 同質性을 기준으로 友敵概念을 인식하여 왔으나, 경제발전을 최대의 과제로 설정하고 페레스트로이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實用性·合理性을 기준으로 새롭게 親疏關係를 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인식상에도 커다란 변화가 초래되었다. 즉 사회주의적 유대를 강조한 對北韓 一邊倒政策에서 탈피하여, 남한과의 경제협력도 도모하여야 한다는 韓半島 均衡政策으로 발전하였다.

러시아의 대한반도 정책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目標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①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 유지, ② 남한과의 經濟交流를 통한 實益 증대, ③ 日本의 대러시아 接近 유도, ④ 아·태 진출의 교두보 확보 등이다.

첫째, 러시아는 國內 政治安定과 經濟發展을 도모하기 위한

평화로운 주변환경 조성 차원에서 한반도의 平和와 安定을 유지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남북한간의 直接對話를 통한 평화정착이 무엇보다도 긴요하다고 인식하고, 南北對話를 적극 권장하는 동시에 남한과 외교관계를 개설하고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등 적극적인 한반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러시아는 남한이 최근 들어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함으로써 동북아에서는 물론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남한의 경제력을 이용하여 러시아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南韓과의 경제교류를 모색·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市場經濟化 政策의 外部的 環境을 원활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韓·러 關係發展을 적극 모색하는 동시에, 北韓의 開放·改革을 중용하고 對北韓關係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고 있다. 즉 러시아는 북한의 체제유지정책이 러시아의 아·태정책 추진에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고 인식하여,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다.

셋째, 현재의 러시아 경제상황에 비추어 西方과의 경제협력이 필요불가결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경제력에 대한 러시아의 기대는 매우 크며, 따라서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이 日本에 대한 刺戟要因으로 작용하여 일본의 對러 진출이 적극화되는 계기로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넷째, 러시아는 한국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아·태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자 하고 있다. 이는 러시아의 대일 정

책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일본이 북방영토문제를 표면적 이유로 정경불가분의 원칙을 고수하면서 러시아의 對日 관계개선정책 및 나아가서 아·태 진출정책에 제동을 걸고 있기 때문에, 남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태평양경제협력회의(PECC),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 아시아개발은행(ADB) 등에의 加入을 실현하고, 域內 多者間 安保協力 機構를 창설함으로써 아·태 진출을 본격화한다는 것이다.

러시아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러시아의 國益에 유리하다는 인식에서 남북대화와 긴장완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형성될 한반도정세가 종래의 적대적인 南北 對立關係가 아닌 화해와 협력에 기초한 平和關係라고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이는 南北分斷을 전제로 한 現狀維持政策이라 할 수 있다. 해방직후 구소련의 남북분단정책이 한반도 완충지대화 정책의 연장선상에 이루어졌다면,¹⁵⁾ 러시아의 國益이라는 관점에서 더 이상 한반도가 反러 侵略基地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확신이 없는 한, 남북분단이라는 현상을 유지하려 하는 것이다. 즉 러시아는 한반도의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남한과의 관계를 개선하고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현실적으로 재조정하는 동시에 남북대화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

15) 구소련은 미국과의 적대적 관계라는 전세계적 구도하에서 한반도를 미국의 위협을 제어하는 緩衝地帶로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인식은 제정러시아 이래의 基本認識이었으며,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세한 것은 姜元植, “解放直後 蘇聯의 韓半島 政策構想,”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제 7 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참조.

으며, 나아가 한반도의 평화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이른바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에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우선 통일된 한국의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 때문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러시아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統一韓國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強者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또한 한반도가 통일되어 역내 강자로 등장할 경우, 日·中 등 역내 강국이 역내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軍事大國化를 모색·추진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말미암아 야기될 東北亞 力學關係의 변동이 러시아의 國益에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러시아가 공식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외국군 철수를 주장하는 북한의 입장에 동조하여 왔으나, 실질적으로 반드시 주한미군의 철수를 원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며, 러시아에서는 域內 勢力均衡者로서의 美軍의 아·태지역 주둔을 필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¹⁶⁾

16) Vitor I. Novozhilov, "Soviet Views on the Probl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Keynote Address in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American and Soviet Studies, Dankook University, November 4~5, 1991.

그러나 한반도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처럼 급속도로 가시화 될 경우, 러시아는 한반도문제에 적극 관여할 수 있는 實質的 能力을 결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공산주의 세계혁명노선을 포기하였다는 점 등에 비추어, 한반도가 平和定着過程을 통하여 統一될 경우 統一政權이 反러시아의 성격을 표방하지 않는 한 韓半島 統一을 반대하지는 않을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러시아가 한반도 통일이라는 역내 정세의 변동이 러시아의 국익에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인식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러시아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심각한 국내정치·경제적 혼란에 직면하고 있으며, 국제적 위상도 과거 어느 때보다 저하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의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突破口를 마련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지금까지 구소련은 다자간 안보협력기구의 창설을 아·태지역에서의 열세를 타개하기 위한 最善의 方案으로 인식하여 왔으며, 이와 함께 한반도문제 해결에서의 러시아의 영향력 행사를 고려하여 왔다. 따라서 구소련의 신사고 외교정책이 독일통일을 가능하게 한 최대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듯이 향후 러시아가 남북대화과정과 통일과정의 진전상황에 따라 주변국가들보다 적극적으로 韓半島 統一의 必要性을 강조하고 한반도 통일을 적극적으로 支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北韓의 對內外 政策方向

가. 北韓式 社會主義體制 強化

북한은 현재 국제적 고립 심화와 가중되는 經濟難¹⁷⁾으로 인해 體制維持에 최대의 역점을 둘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① 제국주의 비난 및 사회주의 고수 천명, ② 북한식 사회주의의 우월성 강조를 통한 사상통제, ③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 공고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첫째,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政治變革을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기인한 것이라고 비난하며,¹⁸⁾ 「사회주의의

17) 북한은 「인민경제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基本課業으로 설정하여 제3차 7개년계획(1987~1993)을 추진하고 있으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의 비효율성, 과도한 군사비 지출, 투자자금의 부족, 생산설비의 노후화, 기술낙후, 생산의욕 저하,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경제협력·지원 감소 등의 요인에 의해 經濟沈滯가 장기화되고 있다. 1990년 현재 북한의 1인당 국민총생산은 1,064달러로 추산되며, 經濟成長率은 1990년 휴전 이후 처음으로 -3.7%를 기록했고 1987~1990년간의 평균성장률은 1.21%로 목표인 7.9%에 크게 밀도는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다. 또한 貿易赤字가 累增되고 있어 1990년 말 현재 북한의 외채총액은 78억 6천만달러에 달하고 있다. 특히 에너지와 원자재의 부족으로 산업시설의 가동률은 45%에 지나지 않으며, 주민생활 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食糧事情도 극도로 악화된 상황에 있다.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서울: 統一院, 1991.8) 참조.

18)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평화적 이행〉의 전략은 본질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고 자본주의의 길로 되돌려세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저들의 지배권안에 넣으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으며, 1992년 “신년사”에서 제국주의자들의 戰略的 目標은 “사회주의를 완전히 말살하고 식민주의체계를 부활시켜 제국주의의 세계적 지배를 실현하려는 것”이며, 제국주의자들은 이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군사정치적 압력·위협, 경제적 매수·예속, 사상문화적 타락 등의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고수」를 천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김일성 80회 생일 경축행사에 참석한 세계 각국의 공산당·노동당 대표들을 동원하여 1992년 4월 20일 “사회주의위업을 옹호하고 전진시키자”는 「평양선언」을 채택하였다.¹⁹⁾ 그리고 김정일은 1992년 10월 10일 당 창건 47주년에 즈음하여 발표한 논문 “혁명적 당건설의 근본문제에 대하여”에서 “사회주의 위업을 끝까지 완성하자면 사회주의 사상의 순결성을 확고히 고수해야 한다”²⁰⁾고 강조하였다.

둘째, 북한은 대내적으로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象徵操作을 지속적으로 행하면서, 主體思想에 입각하여 “온 사회의 사상적 통일”을 확고히 구축하는 思想革命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에 대한 論理는 김정일이 1991년 5월 5일 당 중앙위원회 책임일군들과의 담화 “인민대중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는 필승불패이다”를 통해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라는 개념으로 體系化되었다. 이 담화에서 김정일은 북한식 사회주의를 ① 주체사상을 구현하고 있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 ② 인민대중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는 가장 우월한 사회주의, ③ 수령·당·대중이 일심단결된 불패의 사회주의로 규정하였다. 특히 김정일이 “우리 당은 사상혁명을 기본으로 틀어쥐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 주체사상원리교양과 당정책교양, 충실성

19) 이 선언의 전문은 「로동신문」, 1992년 4월 22일 참조.

20) 이 논문의 전문은 「로동신문」, 1992년 11월 2일 참조.

교양, 혁명전통교양, 계급교양, 집단주의교양,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비롯한 여러가지 사상교양을 강화함으로써 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온 사회의 사상적 일색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여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한 점에서 北韓이 취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思想的 統制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다.²¹⁾

셋째, 북한식 사회주의체제의 공고화 문제는 김정일 後繼體制의 구축과 밀접히 연계될 수 밖에 없으나, 특히 김일성이 80회 생일 경축연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김정일 후계체제의 구축을 만족스럽게 생각하며 자신의 80평생의 주된 總和라고까지 언급한 점에 비추어 후계체제의 구축은 이미 완료된 것으로 평가된다.²²⁾

21) 「로동신문」, 1991년 5월 27일. 또한 김일성은 80회 생일 경축연회에서 행한 연설의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해 北韓式 社會主義의 優越性 및 思想統制를 강조하였다: “우리가 건설한 사회는 당과 인민대중이 일심단결되어 혁명의 자주적인 주체를 이루고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면에서 주체가 주체가 튼튼히 선 사회이며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는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사회주의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제국주의자들과 반동들의 반사회주의책동과 격변하는 복잡한 정세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우월성을 과시하면서 확신성있게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당과 인민이 주체적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주체사상은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나아가야 하며 주체의 지도적 원칙을 튼튼히 틀어쥐고 일관성있게 관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위업은 중국적 승리를 이룩하게 될 것입니다.” 김일성,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

22) 김정일은 1980년 10월 개최된 제 6차 당대회에서 북한의 權力序列에서 제 2 인자의 지위를 차지하게 되어 김일성의 後繼者로서 공식 등장한 이후 주요

한편 북한이 北韓式 社會主義의 우월성을 강조하며, 주민들에게 체제수호적 선전 및 상징조작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북한이 체제유지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反證하는 것이나, 통제·폐쇄사회인 北韓體制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현 상황에서 「주체사상」을 전면 부정할 수 있는 지도부가 출현하거나 「아래로부터의 革命」이 일어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할 수 있다.²³⁾ 또한 김정일이 1992년 1월 3일의 담화를 통해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이른바 <다원주의>가 허용될 수

대외문제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내외정책을 관장해 왔다. 김정일은 1990년 5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1차회의에서 國家機關으로는 최초로 확대 개편된 國防委員會 제1부위원장으로 선출된 이후, 1991년 5월 5일의 담화문을 통해 “혁명을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대를 이어 나가는 당의 령도의 계승문제가 우리나라에서는 빛나게 해결되었습니다”라고 언급하여 後繼體制가 완결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또한 김정일은 1991년 12월 24일 개최된 당중앙위원회 제6기 제19차 전원회의에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추대되고, 1992년 4월 20일 원수칭호를 수여받았다. 이로써 김정일은 黨·政·軍 모두에 걸쳐 통치자적인 입지를 확고히 구축하였다. 1992년 2월 16일 김정일의 50회 생일축하문에서 “김정일동지에 대한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 우리 인민과 군대의 신뢰는 절대적인 것이며 김정일동지의 령도는 우리 혁명이 어떤 시련도 뚫고 백전백승할 수 있는 결정적 요인입니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현재 김정일 後繼體制는 확고히 구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16일.

- 23) 이에 반해 영국 經濟情報團(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報告書는 북한이 경제개혁을 하지 않을 경우 1990년대 이내에 국지적인 민중봉기 또는 군부 및 정치엘리트의 쿠데타에 의해 붕괴될 가능성이 있다고 상정하고 있다.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pp. 90~91. 또한 단기적으로 북한 전역에 걸친 소요사태가 발발하여 南韓과의 戰爭을 촉발시킬 가능성도 크다는 견해도 있다. Thomas W. Robinson, “Modernization and Revolution in Post-Cold War Asia,” *Problems of Communism*, vol. XLI, no. 1-2 (January/April 1992), p. 174.

없습니다. <다원주의>가 표방하는 사상에서의 <자유화>, 정치에서의 <다당제>, 소유에서의 <다양화>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에 기초한 생존경쟁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의 정치방식입니다. 사회주의는 집단주의에 기초한 사회이며 인민대중의 통일을 생명으로 하는 사회이므로 사회주의와 <다원주의>는 량립할 수 없습니다”²⁴⁾라고 천명한 점에 비추어 北韓體制의 本質的 變化를 현재로서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경제침체 상황 속에서 북한이 체제와 정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民生問題라는 필수불가결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²⁵⁾ 체제의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경공업 발전을 통한 주민 불만 해소에 주력하는 등 통제된 변화를 시도하면서도 思想統制를 계속 강화하는 가운데 북한식 사회주의체제 강화 논리에 입각한 체제유지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 통제된 開放政策 推進

북한이 경제침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改革과 開放을 추진

24) 「로동신문」, 1992년 2월 4일.

25) 예를 들면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주민의 불만을 무마시키려는 의도로 “인민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우리 당 활동의 최고목적”이라고 강조하였다. 북한이 1992년 2월 13일 “전체 로동자, 기술자, 사무원들의 생활비를 높이며 협동농민들의 수입을 늘이는 시책을 실시함에 대하여”라는 중앙인민위원회 정령을 공표하여 賃金引上을 통해 人民生活 向上施策을 마련한 것은 北韓住民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된다. 이 政令의 내용에 대해서는 「로동신문」, 1992년 2월 15일 참조.

해야만 하는 상황에 있지만, 개혁·개방은 經濟의 市場化 뿐만 아니라 정치의 民主化를 초래하여 體制 威脅要因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즉 체제유지를 위해서는 경제 활성화와 實用主義 路線 채택이 불가결하지만, 이것이 역으로 체제에 대한 위협 요인으로 된다는 점에 북한의 딜레마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적극적인 개혁정책의 추진 및 전면적인 개방정책과 같은 本質的 變化를 추구하기보다는 對外開放의 파급효과를 극소화시켜 체제유지가 손상받지 않는 범위내에서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經濟難 해소 정책을 추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제 2 차 7개년계획과 제 3 차 7개년계획을 추진하면서 經濟의 現代化, 科學化를 달성하기 위해 對外經濟關係의 확대를 모색해 왔으며, 그 대표적인 예가 1984년 9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에서 제정·공포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합영법」이다.²⁶⁾ 合營法 제정 이후 북한은 1985년 3월에

26) 김일성은 1985년 6월 9일 일본의 「世界」誌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合營法 制定의 意義와 향후 經濟合作·交流의 方向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우리 공화국은 사회주의 나라들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자본주의 나라들과도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더욱 확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난 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영법>을 채택하고 공업과 건설, 운수, 과학기술, 관광업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다른 나라들과 합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합영법이 발표된 다음 많은 나라들에서 우리나라와 경제합작과 기술교류를 진행할 것을 새롭게 요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며

는 「합영법시행세칙」, 「외국인소득세법」, 「합영회사 소득세법」을 제정하고, 5월에는 「합영회사 소득세법세칙」, 「외국인 소득세법 세칙」 등을 각각 마련함으로써 對外開放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으며,²⁷⁾ 제 3차 7개년계획에는 대외무역의 확대, 경제합작, 합영의 발전을 공식화하고 있다. 對外開放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없는 국내적 制約要因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경제의 현대화·과학화를 포기하지 않는 한 對外經濟關係擴大政策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1984년 9월 합영법 발표 이후 1992년 9월 말까지 합작실적은 약 1백 40여 건으로 집계되고, 조총련이 합작대상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합영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성과는 미약하다.²⁸⁾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새로운 段階의 對外開放政策을 추

우리나라와 경제기술적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킬 것을 요구하는 나라들에 대하여서는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에 관계없이 언제나 환영할 것이며 평등과 호혜의 원칙에서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진행하여 나갈 것입니다.” 조선중앙통신사, 「조선중앙년감 1986」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86), p. 18.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에서 북한이 合營法의 제정을 매우 중시했으며, 보다 적극적으로 대외경제교류·합작을 추진하려는 政策意志를 알 수 있다.

27) Hy-Sang Lee,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 (December 1988), pp. 1272~73;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 (1990년 12월), pp. 20~21 참조.

28) 북한의 合作誘致 實績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1985~86년 9건, 1987년 17건, 1988년 27건, 1989년 29건으로 1980년대에는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서는 1990년 8건, 1991년 18건 등으로 부진한 상태에 있다. 또한 투자비율은 대부분 1백만달러 내외의 少額이며, 업종별로는 서서비스분야 40%, 경공업분야 25%, 농수산분야 15%, 의료분야 9% 등이다. 「內外通信」, 第816號 (1992. 10. 8) 참조.

구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은 1991년 7월 몽골 울란바토르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국제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개발구상안」을 최초로 표명한 이래, 10월 평양에서 개최된 유엔개발계획 동북아조정관회의에서 「나진·선봉경제지대 조사보고서」를 제시하였다. 이후 北韓은 1991년 12월 28일 나진·선봉지역 621km²를 「자유무역지대」로 지정한 정무원 결정 제74호 채택을 공식 발표하여 통제된 개방을 구체화하기에 이르렀으며,²⁹⁾ 1992년 4월 평양에서 두만강개발에 관한 「동북아 경제포럼」을 개최하기도 하였다.³⁰⁾ 나진·선봉지역 이외에 북한이 經濟特區로 설정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는 해주, 남포, 신의주 등을 들 수 있다.³¹⁾

한편 북한이 1992년 4월 9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 9기 3차회의에서 憲法 일부를 수정하여 대외개방의 법적 근거를 헌법에 명시하고,³²⁾ 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으로 「외국인 투자법」, 「외국인 기업법」, 「합작법」 등을 채택·발표함으로써 對外開放을 위한 法的·制度的 裝置를 보완

29) 「內外通信」, 第777號 (1992. 1. 10).

30) 북한은 이 會議에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명의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라진, 선봉지구 자유경제무역지대의 현 실태와 전망에 대하여」라는 資料를 배포하였다.

31)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p. 19.

32) 개정된 헌법 제16조는 “자기 영역안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7조는 “국가는 우리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와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들과의 기업 합영과 합작을 장려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여 통제된 개방정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했다. 특히 외국인투자법은 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 유도를 위해 수출입품목의 무관세, 3년간 소득세 감면조항 명시, 과실 송금 허용, 최고 50년간 토지임대 등 特惠條項과 함께 투자여건의 다변화를 위한 투자기업의 경영비밀 보호, 국유화 금지 등 法的 保障裝置를 명시하고 있어 合營法보다 진일보된 것으로 평가된다.³³⁾ 또한 外國人投資法 5조는 “공화국영역밖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동포”의 투자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韓國企業의 對北 投資를 유도하려는 의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① 外國人 單獨企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내에만 창설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점, ② 외국인투자법에 의하면 종업원 채용을 북한의 勞動機關과의 契約을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제한한 점, ③ 외국인기업법 21조에는 직업동맹이 從業員 活動을 감독하도록 규정한 점 등은 북한이 제한된 地域만을 開放하고, 북한근로자를 철저히 감독하여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겠다는 정책의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단기적으로는 이러한 통제된 개방을 추진하면서 이를 통해 도출될 경제적 이익 및 정치적 파급효과를 계산하는 데 치중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 결과에 따라 북한은 개방정책의 범위 및 속도를 조절해 나갈 것이다.

33) 세 가지 法의 全文은 「평양방송」, 1992년 10월 20일; 21일; 22일 참조.

다. 東北亞 國際秩序 變化에의 適應

북한은 대외적으로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고 경제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1988년 12월부터 對美 직접 접촉을 개시하고, 1990년 9월 日本과의 국교정상화에 합의하는 등 對美·日 接近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북한의 대미·일 접근은 동북아 국제질서의 변화에 적응하면서 體制維持를 위한 수단으로 볼 수 있다. 북한의 대외정책 방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세계정세에 대한 인식 및 동북아 4국에 대한 정책을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새로운 世界秩序 창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은 김일성이 1992년 9월 1일 「메디아 인도네시아」 신문사 책임주필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에 명백히 드러난다:

...초대국들사이의 대결로 인한 랭전구조가 허물어졌지만 제국주의의 낡은 세력은 그대로 남아있으며 그들은 변함없이 세계제패의 야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국제무대에서 힘의 균형이 파괴된 것을 계기로 하여 현대제국주의는 계속 힘의 정책에 매달려 세계를 저들이 좌지우지하는 1극화의 세계로 만들려고 있습니다. 1극화의 세계는 오히려 2극화의 세계보다 인민들의 자주화위업에 더 큰 장애와 위협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제무대에서 지배주의를 추구하는 또다른 새로운 뿔럭들이 나올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³⁴⁾

34) 「로동신문」, 1992년 9월 4일.

이러한 김일성의 언급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은 ① 사회주의체제의 본질적 변화로 인한 資本主義의 世界化에 대한 우려, ② 현대제국주의는 여전히 「힘의 정책」을 사용하여 사회주의 국가 및 제3세계 국가를 지배하려 한다는 점에 대한 불안, ③ 새로운 支配主義 勢力圈의 등장에 대한 위기의식 등이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北韓이 인식하는 1극화 세계란 “현대제국주의가 주인 노릇을 하며 판을 치는 〈서방화〉된 세계”를 의미하며, 이러한 1극화의 세계에서 “미국은 다름 아닌 〈군주〉의 역할”을 하려 한다는 것이다. 즉 現代帝國主義는 힘의 정책과 平和的 移行戰略의 양면전술을 통해 사회주의국가, 제3세계 국가들을 정치·군사·경제적으로 지배·통제하려 하고 있으며, 북대서양조약기구 및 美·日 안보체제를 근간으로 支配主義를 추구하는 새로운 勢力圈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³⁵⁾

이러한 세계정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이 표방하는 對外政策은 支配主義 반대 및 自主權 행사를 기반으로 한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連帶性 강화, 非同盟運動의 강화 발전, 평

35) 리석윤, “1극화의 세계는 자주위업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세계,” 「로동신문」, 1992년 9월 19일. 특히 북한은 美·日 安保條約을 “일본령토를 군사기지화하고 일본군국주의를 재생, 재무장시켜 아세아의 〈돌격대〉로 내몰려는 미국과 하루빨리 군사대국으로 되어 해외침략에 나서려는 일본의 군사적 결탁의 산물”이라고 규정하고, 이 條約이 극동과 아·태지역에서 戰爭危險을 조성하고 있는 主要 要因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2년 9월 11일.

화애호인민들과의 단결 등이다.³⁶⁾ 이와 함께 실제 외교정책 추진의 측면에서 북한은 김일성이 1992년 “신년사”를 통해 아시아 국가들과의 關係增進을 표방한 이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에 주력하고 있다.

북한은 위와 같은 세계정세 변화에 대한 認識 및 政策方向을 바탕으로 東北亞 4國에 대한 政策도 전환시키고 있다. 최근 동북아정세의 변화 속에서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주변 4국에 대한 정책은 美·日과의 관계개선 모색과 中·러와의 기존관계 유지로 특징지어 진다.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야 하며, 美·北韓, 日·北韓 關係正常化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표명하고 있다.³⁷⁾ 즉 북한은 中·러의 對韓 修交 등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대미·일 관계개선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난 회복에 기여할 것이고, 이는 결과적으로 體制維持 方案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정책전환은 북한도 남북한과 주변 4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두개 조선」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36) 國家樹立 44주년 기념행사에서 행한 연형묵 총리의 보고,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2년 9월 9일 참조.

37) 1992년 7월 27일 『로동신문』 사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북한은 세계질서 재편의 主導權이 美國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4국 가운데 對美 관계개선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政策轉換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러와 기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입장에 있으며, 특히 한·중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理念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최대한 유지시키려 하고 있다. 주변 4국에 대한 북한의 정책을 國家別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북한은 韓·中 國交正常化에 대해 전혀 비난을 제기하지 않은채 기정사실로 받아 들이면서 중국과의 기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북한은 한·중 수교 이후 일시 중국과의 人的 交流를 통제했으나 1개월 이후 재개했다. 또한 북한은 1992년 10월에 개최된 中國共產黨 제14차 전국대표대회에 보낸 祝電을 통해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은 지난날과 같이 앞으로도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공동위업 수행에서 중국공산당, 중국인민과 언제나 함께 나아갈 것이며 반제공동투쟁에서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조중친선을 귀중히 여기고 이를 계속 강화발전시켜 나아갈 것입니다”³⁸⁾라고 언급하여 양국관계의 성격을 전통적

38) 「조선중앙방송」, 1992년 10월 12일. 또한 김일성은 1992년 10월 19일 江澤民의 總書記 再選과 관련한 祝電에서 “나는 앞으로도 우리 두나라 당과 인민들 사이에 피로써 맺어진 전통적인 친선과 단결이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공동 투쟁속에서 더욱 발전되리라고 확신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10월 19일.

인 「血盟關係」로 강조하였다. 중국 역시 북한과의 기존 관계를 급속히 단절시킬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는 않다. 따라서 兩國의 友好關係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2년 1월 26일 중·북한 양국간의 무역을 구상무역에서 경화결제방식으로 전환하는 貿易協定을 체결한 이래 양국의 經濟關係는 현실적인 차원으로 재조정되면서 축소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한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룬 蘇聯의 행위를 「배신」이라고 비난하고, 韓·蘇 修交는 결국 「두개 조선」 인정, 북한의 국제적 고립, 개방유도와 궁극적으로는 사회주의제도의 전복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으며,³⁹⁾ 1991년 8월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발하였을 때 이를 묵시적으로 지지하였다. 이에 따라 소연방 해체 이후 구소련의 계승자로 등장한 러시아와의 관계는 소원해질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북한은 1992년 2월 13일까지 독립국가연합 구성국 모두와 外交關係를 수립하였고, 1992년 3월 독립국가연합의 統合軍 대표단의 訪北에서 나타나듯이 군사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따라서 북한·독립국가연합의 관계는 개별 共和國 次元으로 전개될 것이지만, 북한의 구소련에 대한 경제·군사적인 측면에서의 依存度에 비추어 북한은 러시아와의 기존 우호·협력관계를 유지하려는 외교적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39) “딸라로 팔고사는 <외교관계>,” 「로동신문」, 1990년 10월 5일.

북한은 1990년 9월 일본 자민당·사회당과 조선로동당 공동 선언을 통해 양국간 國交正常化 추진에 합의한 후 1990년 1월 30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제1차 본회담을 개최하기 시작하여 일본에 대한 接近을 가속화해 왔다. 북한은 “조일국교정상화란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고 식민지통치를 강요한 과거사를 옳게 반성총화하고 그 토대우에서 우리나라와 참다운 평등, 호혜의 새로운 선린관계를 수립하는 문제”라고 규정하고, “따라서 조일국교정상화를 해결하는데서 핵을 이루는 것은 가해자인 일본이 피해자인 우리 인민에게 끼친 인적 및 물질적 피해와 불행과 고통을 준데 대하여 옳게 반성하고 사죄하며 응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다”⁴⁰⁾라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일·북한 수교협상 과정에서 양국간 주요 爭點은 한반도의 管轄權問題, 식민지 지배에 대한 보상, 북한의 核査察 수용, 남북관계 개선, 재일한국인의 법적 지위 및 일본인 처의 고향 방문, 이은혜문제 등이며, 특히 일본은 북한의 핵사찰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해결없이 양국의 修交는 불가능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1992년 중반부터 일본의 핵위협, 유엔평화유지 활동 참여의 위협성을 강조하고 정신대문제 등 과거청산문제를 강도있게 주장하고 있다. 이는 북한이 對日接近의 속도를

40) 「로동신문」, 1992년 2월 3일.

늦추기로 결정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⁴¹⁾ 즉 북한은 핵문제 해결 및 일·북한 관계개선 속도문제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영향력하에 있다는 판단에서 對美·日 關係改善 우선순위상 대일관계보다는 대미관계를 중시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미·북한 양국은 1988년 12월 北京에서 정무참사관급 외교관 접촉을 시작한 이래 1992년 9월까지 26차례의 회합을 가졌으며, 유엔 및 뉴욕에서도 북한과 미국 고위인사간의 접촉이 있었다. 북한의 對美 관계개선 理由와 條件은 김일성이 1991년 9월 26일 일본 岩波書店 사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명백히 나타난다. 이 대답에서 김일성은 대미 관계개선 노력의 이유를 “미국이 조선의 분렬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며 통일문제 해결이 미국의 대조선정책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대미관계 개선의 條件은 “미국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대조선정책을 재검토하고 조선의 통일을 도와주는 길로 나간다면”이라는 것이다.⁴²⁾

김일성은 1992년 4월 12일 「워싱턴 타임즈」紙 기자단과의 담화를 통해 冷戰 종식에 따라 미·북한 관계개선은 당연하다는 전제하에 북한의 핵사찰문제와 미군유해 송환문제도 원만히 해결될 것이며, 평양의 미국대사관 개설문제는 朝·美關係

41) 북한이 1992년 9월 개최된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시 연행묵 총리의 기초연설을 통해 「북과 남이 일본의 과거청산과 핵위협, 해외파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데 대한 합의서」(초안)를 제시하였다는 점은 對日政策의 변화를 나타내는 증거이다.

42) 「로동신문」, 1991년 11월 11일.

개선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점을 밝혔다.⁴³⁾ 또한 북한은 한·중 수교 다음 날인 1992년 8월 25일자 「로동신문」 논설을 통해 미·북한 관계개선을 촉구하였으며,⁴⁴⁾ 연형묵 총리는 1992년 9월 8일 국가수립 44주년 기념행사 보고문을 통해 미·북한 관계개선을 다음과 같이 계속 촉구하였다:

만약 미국이 부당한 전제조건을 내세우지 않고 자주성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흐름에 맞게 성근한 입장에서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길로 나온다면 우리도 과거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을 내다보며 나갈 것이며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미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할 것입니다.⁴⁵⁾

이러한 북한의 입장에 비추어 북한은 현재 적극적인 對美 關係改善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북한의 對美接近論理는 韓半島 統一問題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다. 북한은 미국이 한국전쟁과 휴전협정의 당사자로서

43) 「로동신문」, 1992년 4월 18일.

44) 리석운,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 「로동신문」, 1992년 8월 25일. 이 論說에서 언급된 對美 關係改善의 理由와 미국의 대북한정책 전환을 촉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미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조선반도에서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데서 매우 중요하다. 미국은 조선반도의 긴장상태와 우리 민족의 분열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나라이다. 지금의 조미관계는 미국이 우리 공화국에 대하여 계속 적대시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불평등한 관계이며 미국의 대조선정책은 력사의 흐름에도 맞지 않고 정세의 변천에도 부합되지 않는 완전히 낡은 것이다. 북남합의서와 조선반도의 비핵화공동선언이 채택, 발효된 조건에서 미국은 마땅히 이를 존중하고 그 리행에 유리한 환경과 조건을 마련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여야 한다.”

45) 「로동신문」, 1992년 9월 9일.

한반도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보장과 통일 실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韓半島의 平和保障과 平和統一을 위해서는 남북한의 화해와 신뢰구축, 미·북한간 평화협정 체결, 남북한 군비축소, 駐韓美軍 및 핵무기 철수가 실현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⁴⁶⁾ 즉 이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美·北韓의 直接對話가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북한이 인식하는 미국의 對韓半島政策은 “남조선을 군사기지로 언제까지나 틀어쥐고 우리 공화국을 제압함으로써 남조선당국자들의 <승공통일>의 야망을 실현시키기 위한 힘의 대결정책”⁴⁷⁾이기 때문에, 결국 북한은 미국이 이러한 대한반도정책을 전환시키지 않는 한 한반도의 緊張緩和와 平和統一이 실현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미·북한간 접촉과정을 통하여 미국은 북한에 대해 핵문제 해결, 남북대화의 진전, 미군유해 송환, 反美 적대선전활동 중지, 테러행위 및 폭력 불사용, 인권문제, 대량살상무기의 해외판매금지 등을 제기하고, 이에 반해 북한의 미국에 대해

46) 1992년 7월 27일자 「로동신문」 사설, “조선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공고한 평화를 이룩하자” 참조.

47) 리석윤, “냉전시대의 유물: 미국의 낡은 대조선정책,” 「로동신문」, 1992년 9월 2일. 美國의 對韓半島政策에 대한 北韓의 觀點은 최문일,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 「로동신문」, 1991년 7월 29일; 김종손, “지배와 예측의 낡은 질서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힘의 정책,” 「로동신문」, 1992년 8월 2일; 호영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다,” 「로동신문」, 1992년 8월 5일 참조.

직접대화 및 관계개선, 對北 핵불사용선언, 주한미군 및 핵무기 철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 대체 및 3자회담 개최, 팀스피리트훈련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北韓은 미국의 要求條件을 서서히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미국도 북한의 제기조건에 일부 부응해 나가는 추세에 있다. 특히 1991년에 미국이 북한産 아연에 대한 바터로 밀 15만톤의 대북한 수출을 허용한 점이나, 1992년 1월 22일 당비서 김용순과 켄터 미국무부 정무차관간에 최초의 차관급 회담이 개최된 것은 양국간 관계개선이 진전되고 있는 징후로 파악된다.⁴⁸⁾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및 미국에게 신뢰감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핵개발문제에 대한 미국의 의혹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까지는 미·북한 관계가 급속히 진전되지 못할 것이다. 다만 북한은 미국의 대통령 선거 결과 전통적으로 진보적인 대외정책을 추진해 온 民主黨이 집권함에 따라 3者會談 개최를 더욱 적극적으로 제의하면서 對美接近 노력을 가속화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핵무기 개발 포기가 입증되고, 북한이 주한미군문제와 관련하여 신축적인 입장을 보일 경우 미국의 新政府 출범과 함께 미·북한 접촉수준의 격상·정례화

48) 北韓은 이 會談에 대해 “이번에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은 두 나라 인민들의 리익과 조선반도와 동북아세아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부합되는 유익한 것이였다”라고 공식 평가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2월 7일. 또한 김일성은 1992년 3월 31일 일본 「朝日新聞」 편집국장의 질문에 대한 대답에서 이 회담에 대해 “이것은 조미관계를 개선하는데서 일정한 의의를 가지지만 아직은 첫 출발에 지나지 않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4월 3일.

및 본격적인 修交論議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북한은 대미·일 관계정상화를 이루어 주변4국 모두와 外交關係를 수립함으로써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남한과 대등한 위치를 조속히 확보하여 對南關係에서의 열세를 만회하고, 체제유지를 도모하고자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현재 북한이 인식하고 있는 國際的 統一基盤이란 ① 대미·일 관계정상화와 대중·러 관계유지를 통하여 역내에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하고 경제난을 해소하여 현재보다 개선된 대내외적 상황을 조성하는 것, ② 미국과 平和協定을 체결함으로써 안전보장을 확보함과 동시에 對南 立地를 강화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라. 二重的 對南戰略 推進

1980년대 말 이후 소련 및 동유럽 사회주의권의 체제변혁, 비동맹국가들의 탈이념·실용주의화, 한·소 및 한·중 수교 등 국제환경의 변화, 그리고 대내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經濟難 등에 따라 북한이 1964년 이래 추진해 온 「3대혁명역량 강화」라는 統一戰略 가운데 북조선혁명역량과 국제적 혁명역량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다. 따라서 북한은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면서도 吸收統一을 우려하여 「남북공존」을 수용함으로써⁴⁹⁾ 體制維持를 도모하기 위하여 유엔 동시가입, 「기본

49) 김일성은 1990년 10월 18일 제 2 차 南北高位級會談 한국측 대표단과의 회견에서 처음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량방제방식”의 통일을 실현하자고 제의하여 1980년 10월 제 6 차 당대회에서 제의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설방안」內容의 修正을 시사하기도 하였다. 「로

합의서」 채택·발효 등에 응하면서 남북관계를 조정하고 있다. 즉 북한은 對南劣勢에 있는 현상황에서는 우선 「기본합의서」 채택·발효를 통하여 남북공존관계를 확립함으로써 흡수통일 가능성을 배제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은 주변 4국이 모두 한국과 수교하고 있고, 한국의 총체적인 國力이 북한보다 우세한 현상황에서 한반도에서의 독일식 통일, 즉 한국에 의한 흡수통일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⁵⁰⁾

동신문」, 1990년 10월 19일. 김일성은 1988년 “신년사”를 통해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존재를 인정하는 기초우에서 중립적이며 빨릭 불가담적인 하나의 련방국을 창설하는 것”이라고 언급하여 해방후 최초로 南北韓 共存의 필요성을 인정함으로써 남북한 競爭體制를 共存體制로 轉換시키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89년 9월 8일 국가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그대로 두고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합니다”라고 언급하여 共存의 原則을 구체화시켰다. 김일성,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p. 29.

- 50) 북한은 獨逸統一이 실현되자 남한에 의해 吸收統合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입장을 보였다.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나라의 흡수통합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 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북한은 한국의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격을 制度統一論이라고 평가하고 승공통일 흡수통합 야망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로동신문」, 1992년 1월 24일. 또한 1992년 7월 4일자 「로동신문」 사설에서는 “그들은 (남조선당국자) 자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민족내부문제인 통일문제를 외세의 힘을 빌어 남이 하는 방식으로 먹고 먹히는 방법으로 해결해보려고 어리석게 기도하고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의 <평화적 이행> 전략에 편승하여 우리에게 대한 <개방유도>로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체제>에 기초한 <흡수통합>, <승공통일>을 이룩해보려고 꿈을 꾸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다”라고 지적하여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韓國의 對美·日 友好關係를 “결국 미군을 남조선에 계속 붙잡아 두고 미, 일, 남조선 3각군사동맹 관계를 강화하여 힘의 우위를 확보한데 기초하여 북을 흡수통합하거나 무력에 의한 승공통일의 망상을 이루어 보려는 범죄적 기도를 드러낸 것이다”⁵¹⁾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북한이 흡수통일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은 體制維持에 더욱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反證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김일성이 1990년 5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제 9기 제 1차회의에서 행한 施政演說을 통해 「전민족적인 통일 전선의 형성」을 강조한 이래,⁵²⁾ 多元的인 한국사회의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민족대단결」을 명분으로 한 統一戰線 戰術의 적극 추진이라는 남조선혁명역량 강화에 주력하고 있으며, 궁극적인 統一은 「민족대단결」이라는 명분하에 「先남조선 혁명, 後공산화통일」을 성취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51) 「로동신문」, 1992년 9월 30일.

52) 北韓은 1991년 1월 25일 조국통일 범민족련합 북측본부를 결성하여 1990년 11월 20일 결성된 「범민련」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김일성은 1991년 8월 1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련합 북측본부 성원들과 행한 담화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를 통해 「민족대단결」에 입각한 統一優先主義를 강조하였다. 김일성은 1992년 2월 20일 고위급회담 대표단과의 담화에서도 “민족의 대단결을 도모하는 것은 합의서의 기본정신”이라고 강조하였으며, 4월 15일 80회 생일 경축연회 연설에서는 “온 겨레는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우리 민족의 자랑인 애국애족의 자주정신을 가지고 하나로 굳게 뭉쳐 조국통일의 문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언급하여 民族大團結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의 平和와 統一問題가 민족내부문제인 동시에 국제정세와 연관되어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특히 美國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대미 평화협정 체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지속 주장하고 있지만, 김일성이 80회 생일 경축연회 연설에서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물론 외세와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나라의 분열 자체가 외세에 의하여 강요되었으며 아직도 외세는 조국통일의 주되는 장애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디까지나 자기 민족을 믿고 민족주체의 힘에 의거하여 조국통일을 이룩하여야 합니다”⁵³⁾라고 지적하였듯이 「조국통일의 주체는 조선민족이다」라는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다.

自主的 統一에 대한 북한의 이러한 입장은 구체적으로는 통일3원칙에 따라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聯邦國家를 창설하여 統一을 이루는 것으로 표출되고 있다. 특히 북한이 「기본합의서」에 명시된 자주·평화통일·민족대단결 등 통일 3원칙을 駐韓美軍 철수, 軍縮 우선 실시, 보안법 철폐, 창구 다원화, 정치협상회의 소집 주장의 논거로 활용하고 있는 점은 북한이 남북공존 모색이라는 남북관계 재조정을 시도하면서도 북한이 원하는 통일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의 對南戰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二重性을 보이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53) 김일성,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

3. 南北關係

南北韓은 1972년 7. 4 남북공동성명으로 대표되는 1970년대의 南北對話와 1984년 9월 북한 적십자사의 수해물자 제공 이후 경제회담, 적십자회담, 국회회담, 체육회담 등 다양한 접촉과 대화를 가졌으나,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成果를 산출하지는 못하였다. 종합적으로 볼 때, 分斷 이후 1991년 12월 13일 제 5차 南北高位級會談에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가 채택되기 이전까지의 南北關係는 기본적으로 상호 불신과 갈등이 지속된 敵對的 共存關係로 특징지을 수 있다.

남북한은 1989년 2월 8일부터 1990년 7월 26일까지 8차례의 예비회담과 2차례의 실무대표 접촉을 통하여 쌍방 총리를 수석대표로 하는 南北高位級會談을 개최하여 「남북간의 정치·군사적 대결상태 해소와 다각적인 교류·협력 실시문제」를 협의할 것에 합의하였다. 이에 따라 1990년 9월부터 12월 사이에 제 1차~3차 고위급회담이 개최되었으나, 先정치·군사문제 해결, 불가침선언 채택을 주장한 北韓의 입장과 「남북관계 개선에 관한 기본합의서」 채택, 이산가족문제 해결, 경제교류·활성화를 주장한 韓國의 입장이 대립하여 실질적 성과는 없었으며, 1991년 2월로 예정되어 있던 제 4차 고위급회담도 북한이 한·미 합동군사훈련을 구실로 연기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일시 동결상태에 들어 갔다.

북한은 1991년 8월 소련에서 쿠데타가 발생하자 8월 27~30일로 일차 연기되어 있던 제 4차 고위급회담을 다시 연기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고위급회담은 약 10개월 동안 중단되었으며, 1991년 10월에 재개된 제 4차 고위급회담에서 北韓은 기존 입장에서 선회하여 상호실체 인정, 「불가침선언」과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단일문건 채택, 법률적·제도적 장애조항 삭제, 이산가족문제 해결조항과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파괴·전복행위 금지조항 신설 등을 제시함으로써 態度變化를 나타내었다.⁵⁴⁾ 이에 따라 제 4차 고위급회담에서 남북한은 單一文件으로 된 「기본합의서」의 명칭 및 내용구성에 합의한 후, 12월 11~13일간 개최된 제 5차 고위급회담에서 同 문건을 채택하였다.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에서 쌍방관계가 통일지향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特殊關係임을 인정하고, 平和統一을 성취하기 위한 共同努力을 다짐하면서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3부문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에 합의하였다.⁵⁵⁾ 이와 함께 제 5

54) 「로동신문」, 1991년 10월 25일.

55) 「기본합의서」에서 남북한이 合意한 內容은 다음과 같다. 첫째, 和解를 위하여 남북 쌍방은 체제 인정·존중, 내정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행위를 중지하고, 정전상태를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며, 국제무대에서의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민족 존엄과 이익을 위해 노력한다. 둘째, 쌍방은 무력 불사용, 분쟁의 평화적 해결, 불가침 경계선 설정에 합의하는 한편, 不可侵의 이행과 보장을 위하여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통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단계적 군축 실현, 검증 등의 문제를 협의·추진하고, 군사당국자간 직통전화를 설치·운영한다.

차 고위급회담 종료후 남북한은 3차례의 代表接觸을 가져 12월 31일 핵무기 시험·제조·접수·사용금지, 핵의 평화적 이용, 핵재처리·농축시설 보유금지, 핵사찰 등 6개항으로 구성된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채택하였다.

1992년 2월 19일 제 6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기본합의서」, 「비핵화 공동선언」, 「남북고위급회담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남북한은 분단 반세기 만에 처음으로 반목과 불신에서 벗어나 和解·共存關係를 制度化해 나갈 수 있는 기본틀을 마련하게 되었다.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채택·발효시킨 意義로는 첫째, 「기본합의서」에 정식 국호와 서명 당사자의 직함을 명시함으로써 相互實體를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을 통해 평화공존체제 구축 및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공동체 건설을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둘째, 「기본합의서」는 제 3 국의 개입없이 남북한 당국이 독자적인 공식 협의를 거쳐 채택한 最初의 合意文書라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

셋째, 쌍방은 交流·協力을 위하여 경제교류·협력, 과학·기술·교육·문화예술·보건·체육·환경과 언론·출판 교류, 이산가족문제 해결과 민족구성원의 자유왕래·접촉 등 인적 교류, 교통로 개설, 우편·통신 교류, 대외공동진출 등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남북한은 고위급회담 태두리내에서 합의서 이행·준수를 위해 합의서 발효후 1개월 이내에 정치·군사·교류협력 등 3개 分科委員會를 구성하고, 3개월 이내에 連絡事務所, 군사공동위원회, 경제교류공동위원회 및 부문별 共同委員會를 설치·운영하기로 하였다.

한편 북한이 기존 입장을 변경시켜 합의서 채택·발효에 동의한 背景으로는 첫째, 대외적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國際的 孤立에서 탈피하고 核査察 壓力을 회피하면서⁵⁶⁾ 경제난 타개를 위한 對美·日 接近을 가속화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고 평가된다. 둘째, 북한은 대내적으로 김정일 後繼體制의 공고화를 위해 남북관계 진전을 김정일의 治績으로 표방하는 한편, 經濟難에서 비롯된 주민들의 불만을 통일문제로 전이시킴으로써 體制維持를 도모한다는 정치적 상징조작의 일환으로 합의서를 이용한 것이다.⁵⁷⁾ 셋째, 統一戰略 側面에서 북한은 南北共存을 통해 吸收統一 가능성을 배제하면서 합의서 이행 과정을 기존의 통일전략과 연계시킬 수 있다고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 6 차 고위급회담 이후 남북한은 정치, 군사, 교류·협력

56) 북한은 1985년 12월 12일 「핵 확산금지조약」(Non-Proliferation Treaty)에 가입했으나 18개월내에 國際原子力機構(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와 체결하도록 되어 있는 安全協定을 보류해 왔으며, 1991년 7월 15일 국제원자력기구와 安全協定 標準文案에 합의했지만 정식 서명을 거부하고 있었다.

57) 북한은 “온 민족이 떨쳐나서 조국통일의 결정적 국면을 열자”라는 1992년 1월 3일자 「로동신문」 사설을 통해 統一問題를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올해는 7.4공동성명 발표 20돛이 되는 해이다. 북과 남이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의 3대원칙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공동성명과 이번에 마련된 합의서를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성실히 리행해나갈 때 나라의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고 90년대 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투쟁에서 일대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조국통일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고 계시고 오직 하나의 조선만을 아는 북과 남의 우리 인민이 있어 90년대 통일은 확정적이다.”

등 3개 分科委員會와 核統制共同委員會를 구성하여 1992년 3월부터 제 7 차 고위급회담 이전까지 각각 3차례에 걸친 부문별 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통일3원칙의 해석, 부문별 우선순위, 협의·이행방법, 부속합의서의 성격, 공동위 구성시기, 공동위 기능, 접촉창구 등 주요 쟁점과 함께 각 분과위 및 핵통제공동위에서의 입장 차이로 인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하지 못하였다.⁵⁸⁾

그러나 남북한은 제 7 차 고위급회담 (1992. 5. 6~7) 결과 「기본합의서」 규정에 따라 5월 18일까지 남북연락사무소 및 군사공동위, 경제·교류협력공동위, 사회문화교류·협력공동위 등을 구성하고 화해분야 이행기구로서 「남북화해공동위」를 구성·운영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부속합의서 작성시한, 8. 15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의 교환방문, 차기 회의일정 등에 합의하였다. 이러한 제 7 차 고위급회담 결과는 합의서 발효 이후 담보상태에 있었던 南北協商 狀況에 비추어 진일보한 것이며, 합의서 이행에 대한 양측의 實踐意志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실질적인 이행·실천을 기대할 수 있는 결실을 낳은 것이었으나, 共同委의 運用指針이 될 부속합의서가 작성되지 않아 공동위 가동은 물론 「기본합의서」의 실질적인 이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58) 鄭圭燮, “南北協商의 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民族統一研究院,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6), pp. 71~79 참조.

南北韓은 제 7차 고위급회담 이후 부속합의서 작성을 위해 41차례에 걸친 각 분과위 회의와 위원장 및 위원접촉, 그리고 11차례의 핵통제공동위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협상과정에서 交流·協力分野의 부속합의서 작성은 거의 이루어졌으나, 和解 및 不可侵分野에서는 남북관계의 규정, 분쟁방지에 필수적인 정찰활동 중지 등 核心事項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제 7차 고위급회담에서 합의한 시한내 부속합의서 작성에 실패하였다. 더욱이 북한은 제 7차 고위급회담의 합의사항인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을 북한 핵문제 철회, 이인모 송환, 포커스렌즈훈련 중지 등을 前提條件으로 무산시킴으로써 남북관계 개선의 상징적인 사업 실현이 이루어지지 못했다.⁵⁹⁾ 또한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근거로 南北相互核査察 규정 채택을 회피하면서 「의심동시해소원칙」에 입각한 駐韓美軍基地 사찰을 주장함으로써 핵문제에 관한 남북협상은 진전되지 않았다.

그후 제 8차 고위급회담(1992. 9. 15~18)을 통해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의 이행·준수를 위한 3개 附屬合意書 및 화해공동위 구성·운영 합의서가 채택·발효되고, 4개 共同委 運營開始日 등이 합의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이행·실천이 개시

59) 이산가족 노부모 방문단 및 예술단 교환방문 무산에 대한 北側의 論理는 1992년 8월 8일 발표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성명,” 「로동신문」, 1992년 8월 9일 참조.

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⁶⁰⁾ 그러나 부속합의서의 내용 중 未合意 事項은 향후 남북관계 진전의 결정적인 障礙要因으로 작용할 수 있는 核心事項이라는 점에서 여전히 문제점은 남아 있다.

첫째, 和解分野의 미합의 사항인 ① 단일의식·명칭으로 국제기구 가입, ② 유일대표단 구성 등은 북한이 「하나의 조선」 논리를 고수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또한 북한이 타국과 체결한 조약·협정의 개정·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내부문제 불간섭」 조항과 배치될 뿐만 아니라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겨냥한 것으로 韓·美 同盟關係 이완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 不可侵部門에서 북한이 제기한 ① 군사분계선 일대 무력증강 금지, ② 경찰활동 금지, ③ 영해·영공봉쇄 금지 등과 우리측이 제기한 서울·평양지역의 안전보장문제 등은 軍事共同委의 원활한 운영에 장애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交流·協力部門 중 핵심쟁점 사항인 북한의 「법률적·제도적 장치」 철폐 주장이 화해부문 부속합의서 제 4조에 의거하여 和解共同委 산하 「법률실무협의회」 협의사항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실질적인 南北交流·協력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

60) 북한은 제 8차 고위급회담 결과를 “은 거래의 지향과 요구에 맞게 북남합의서를 원만히 리행할 수 있는 실천적 기초를 마련한 것으로서 민족적 화해와 단합, 통일을 위한 길에서 이룩된 또하나의 획기적인 전진으로 된다”라고 평가하였다. 「로동신문」, 1992년 9월 18일.

이와 함께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도 南北 相互核査察 규정 채택이 무산되고, 이산가족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은 부속합의서 채택·발효의 성과를 반감시키고, 「기본합의서」의 實踐段階 진입 전도를 불투명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미해결 사항의 존재는 北韓의 기존 對南戰略이 아직까지는 근본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는 점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증거이다. 북한은 「기본합의서」 발효후 分科委 협상에 응하면서도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기존의 대남전략을 견지하는 한편, 體制維持에 위협이 되지 않는 제한된 범위내에서 상황에 따라 부문별·선별적으로 합의서 이행에 관심을 보이고 있을 뿐이다. 또한 南北 相互核査察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의 남북 상호핵사찰 주장에 대해서 북한은 미군사기지에 대한 全面査察을 주장함으로써 핵통제공동위에서의 북한 핵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한편, 日本의 핵개발에 대한 공동대처를 주장함으로써 북한 핵문제의 심각성을 희석시키려 하고 있다.

북한은 제 8차 고위급회담 이후 「남한조선노동당」 사건 및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와 관련하여 일련의 성명 및 대남편지를 통해 대대적인 對南非難 攻勢를 전개하고, 1992년 11월 3일 북한의 공동위원회 위원장들의 연합성명을 통해 4개 공동위 제 1차 회의 개최를 전면 거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⁶¹⁾ 남북

61) 북한 공동위 위원장들의 연합성명 전문은 「평양방송」, 1992년 11월 3일 참조.

당국간회담은 한국의 新政府 출범 및 1993년도 팀스피리트훈련 이후 비로소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1992년 10월 27일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를 통해 팀스피리트훈련 재개시 공동위원회 및 고위급회담 등 당국간회담을 중지하되, 정당, 단체 및 민간급 접촉·대화를 지속하겠다고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북한은 당국간회담을 중단한 채 기존의 통일전선전술은 계속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⁶²⁾

62) 북한의 정부·정당·단체연합회의 주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로동신문」, 1992년 10월 28일 참조.

第IV章 韓半島 統一環境에 대한 綜合 評價

1. 東北亞 新國際秩序 展望

東北亞 新國際秩序는 구소련 붕괴 이후 미·소를 주축으로 한 동·서진영간의 냉전적 대립이 해소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전세계적 차원의 國際秩序 再編過程의 일환으로 동북아시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국제정치·경제질서를 의미하며, 국제정세의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¹⁾

첫째, 걸프戰 이후 두드러지고 있는 미국 주도의 세계질서 재편이 가속화되면서 미국의 國際的 影響力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화되고, 미국이 유일한 군사대국으로 등장하는 軍事力의 霸權化 現象이 촉진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향후 국제정세를 주도한다고 하여 미국이 국제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決定者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多極化되고 있는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상대적으로 강화된 입장을 바탕으로 국제문제에 대한 효율적인 調停者 役割을 수행할 것이라는 점을 의미한다. 걸프전은 「팍스 아메리카나」의

1) 냉전 이후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의 一般의 特徵에 대해서는 Samuel P. Huntington,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February 1991), pp. 3~17; Zbigniew Brzezinski,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Winter 1991/92), pp. 3~17; Joseph S. Nye,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pp. 83~96 참조.

시작이었다는 견해도 있지만 이미 1970년대 이래로 세계경제는 미국·일본·유럽으로 3분화되어 있어 경제면에 있어서 미국은 헤게모니를 상실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東·西 冷戰의 終熄이다.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공산당의 와해로 말미암아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로 반영되어 온 社會體制間의 대결구도가 종식되고, 향후 국제정세는 인류복지와 평화를 위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이데올로기의 모색으로 특징 지워질 것이다. 이에 따라 전세계적 차원에서의 民主化와 市場經濟化 現象이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經濟問題의 重視 現象이다. 또한 국제관계를 국가간의 권력분배로 파악하여 온 종래의 現實主義的 觀念이 약화되고, 국가관계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도 중시하는 進歩主義的 觀念이 강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환경문제 등 전인류의 이해와 관련있는 문제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유엔을 비롯한 國際機構의 역할이 부각될 것이며, 軍縮을 포함한 국제정세의 긴장완화는 촉진될 것이나, 과학·기술, 경제 및 환경 등의 영역에서의 國際葛藤은 구체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에 있어서 힘의 개념이 변화된 동시에, 종래의 軍事安保 중심에서 탈피하여 정치·외교·경제적 측면에서 안보를 추구한다는 包括的 安保 概念이 새로운 국제질서의 중심개념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넷째, 國內問題의 比重 增大이다.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증대되면서 특정 국가의 국내문제가 전세계적 관심으로 대두

되는 동시에 외교정책 추진에 있어서 국내문제 해결을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경향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地域紛爭에 있어서도 미·러의 국내문제 중시에 따른 분쟁개입 자제에 따라 지역분쟁의 局地化가 진전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적 노력이 강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분쟁 자체의 발발 가능성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소 양극체제의 붕괴로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에서 예증되듯이 구소련이 통제하여 온 지역분쟁이 표면화될 수 있다. 또한 소련의 핵통제력 상실로 인한 核危機 管理問題는 전세계적 관심으로 계속 남아 있을 것이다.

다섯째, 世界經濟의 블록化 趨勢이다. 국제관계에서 힘의 개념이 변화되고 경제력의 다원화가 진전되면서 세계경제의 블록화가 더욱 촉진될 것이다. 그러나 이미 北美 自由貿易地帶(달러圈), 통합된 유럽(ECU 또는 마르크圈), 태평양지역(엔圈)으로 분화되고 있는 세계경제는 그 폐쇄성으로 인하여 새로운 분쟁 소지를 남기고 있다. 즉 세계시장의 분화에 대항하는 다국적 기업의 노력과 예컨대 엔블록에 반대하는 아시아 국가와 일본간의 충돌과 같은 권내 강대국과 약소국간의 갈등, 그리고 블록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새로운 貿易紛爭이 발생할 소지가 매우 크다.

한편 동북아에서도 중·소 관계정상화, 한·소 수교, 한·중 수교 및 남북한 관계개선 등 脫冷戰的 兩者關係 再調整이 진행중이고 多者間 協力問題도 진지하게 논의되는 등 새로운 국

제질서가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동북아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는 전세계적 차원의 국제질서 형성과정과는 상이한 특징들을 보이고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도 동북아지역에서 미·일·중·러 등 강대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中國과 北韓이 여전히 공산주의를 견지하고 있어 기존의 冷戰的 對立要因이 잔존하고 있고, 韓半島 分斷 등 냉전시대의 遺産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즉 강대국간 세력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流動性과 기존의 냉전적 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二重性이 동북아지역 신국제질서의 전반적인 성격을 규정하는 주요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선 強大國間 勢力關係 변화문제를 살펴 볼 때, 현재 동북아에서는 미·러의 독점적 영향력 감소와 일·중의 영향력 확대 현상이 서로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既得權 상실을 원하지 않으나 세계정세의 긴장완화, 국내경제력의 약화 등으로 아·태지역 駐屯軍의 축소를 포함한 전략적 조정이 불가피하며, 이는 동북아지역에서 미국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일본과의 기존 동맹체제를 유지하고 중국·러시아와의 정치·경제적 협조관계를 발전시키고 북한과의 관계발전 등을 도모하여 냉전 이후 확보된 唯一 超強大國으로서의 地位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均衡者的 役割을 수행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려 할 것이다. 즉 미국은 첫째, 소련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군사적 초강국으로

존재하고 있는 러시아의 군사력, CIS 내부정세의 불확실성 등으로 對러시아 견제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고, 둘째, 중국으로부터의 군사적 위협은 심각하지는 않으나, 중국의 체제 이질성과 격변 가능성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할 필요성이 지속되고 있으며, 셋째, 일본의 역내 정치·군사적 역할증대 모색과 이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반발 가능성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북아시아에서의 「균형자」 역할을 앞으로도 상당 기간 동안 유지함으로써 지속적인 地域安定을 도모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은 최근 PKO 법안 통과후 自衛隊를 캄보디아에 파견하는 한편, 동북아시아에서의 다자간 안전보장기구 설치를 주장하면서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즉 일본은 미·러의 영향력 약화, 특히 駐韓美軍의 감축·철수가 동북아시아에서의 「힘의 공백」을 야기시키는 동시에 주한미군문제가 주일미군문제와 연계되어 있음을 감안하여 주한미군의 철수에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으나, 미국의 동북아정책이 조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東北亞駐屯 美軍의 位相 變化가 불가피하다는 인식하에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自衛隊의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은 미국과의 기존 정치·군사·경제관계를 조정하고 중국과는 地域列強으로서의 협조체제를 유지함으로써 자국의 영향력을 극대화하려 하고 있다.

중국은 1992년 이후 개혁·개방 확대를 통한 經濟發展을 最

優善 國策으로 설정하고 대외정책상의 수세적인 자세를 탈피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동시에, 융통성있는 務實外交·全方位外交를 지향하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全方位外交는 동북아 국제환경 속에서 미·러의 영향력 감소를 자국의 영향력 확대로 연결하고, 경제부문을 중심으로 일본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되 일본의 정치·군사적 팽창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견제함으로써 자국의 역할 증대, 국익 확대에 유리한 동북아 신국제질서 수립에 주안점을 두고 전개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였으며, 심화되고 있는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정으로 인해 특히 군사·전략적 차원에서의 대외정책 축소 조정과 그에 따른 影響力 減少가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 즉 러시아는 국내 문제 최우선주의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지만 중국·북한과의 기존 관계 유지, 한국·미국·일본과의 관계발전을 통하여 동북아지역에서의 기득권 상실을 최소화하려 할 것이다. 특히 러시아는 極東地域의 군사력을 상당 기간 유지·강화하면서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모색하는 미국과의 협조하에 일본·중국의 정치·군사적 영향력 증대를 견제하고자 할 것이며, 이를 통해 러시아의 영향력을 유지하고자 할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의 강대국간 세력관계는 이상과 같은 요인에 의해 매우 유동적인 상황에 있다. 즉 일본과 중국은 과거 미·소의 주도적 역할에 밀려 동북아의 地域列強으로서 상응한 역

할을 수행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동적·부차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머물렀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인 새로운 동북아 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自國의 정치·경제·군사적 영역을 확대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러한 일·중의 움직임은 미·러의 대립구조 와해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지역에서의 既得權을 고수하려는 미국의 의도 및 구소련이 향유하고 있던 동북아지역에서의 정치·군사적 영향력을 계승하려는 러시아의 의도와 상충될 수 밖에 없다. 또한 일본과 중국이 단기적인 측면에서 地域列強으로서의 협력관계를 유지한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양국간의 정치·경제·군사적 대립·갈등이 불가피하다.

이상과 같이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에는 강대국간의 이해관계가 상호대립·교차하고 있어, 이것이 域内の 정치·군사적 불안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美國이 唯一 超強大國으로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영향력을 계속 견지하고, 정치·군사적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중의 역내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러시아와 함께 역내 세력균형을 이루는 방향, 즉 미국이 均衡者的 役割을 수행하고 日·中·러가 勢力均衡을 이루는 「1+3」體制로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향후 동북아지역의 강대국간 力學關係가 안정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얼마

만큼 효율적으로 日·中·러間의 力學關係를 조정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나 미국의 역내 영향력이 사실상 과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으며, 특히 클린턴행정부 출범 이후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이른바 쌍둥이적자(twin deficit)를 줄이기 위하여 미국이 일본·중국·한국 등에 대한 경제압력을 증대시킬 경우, 미국이 均衡者로서의 役割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로 인해 동북아정세가 불안정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와 같은 美國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의 비효율화 가능성과 함께 동북아지역내 二重的인 현실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1+3」체제로 형성될 東北亞 力學關係를 위협하는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첫째, 현재 중국이 개방·개혁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북한도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도 「통제된 개방」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양국이 민주화와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이라는 사회주의권의 전세계적 일반 추세와 유사한 발전방향을 보여 지역안정과 협력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이념노선을 고수하는 정치체제간의 모순에 따라 對內的 混亂이 가중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둘째, 分斷國問題로서 남북한관계와 중·대만관계가 현재 평화적 대화와 기능적인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진전되고 있으나, 통일원칙과 통일방식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갈등요인을 안고 있다.

셋째, 領土紛爭問題로서 일·러간 북방영토문제, 한·일간 독도 영유권문제, 중·일간 尖角列島問題, 한·중·일간 황해 및 동지나에서의 대륙붕 경계문제 등을 둘러싼 대립이 첨예화될 가능성이 있다.

넷째, 軍備競爭問題로서 비핵국가인 일본·한국·북한 가운데 어느 일국의 핵무장은 여타 국가의 핵무장을 초래할 것이며, 일·중간 군비경쟁이나 남북한간 군비경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역내 불안정요인이 동북아정세의 급격한 변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역내국가들은 예상되는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공동 메카니즘을 창설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최근 역내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구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러시아는 구소련 시대 이래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을 강조하여 왔으나, 최근 일본이 동 기구 창설을 주창하고 있고, 클린턴 차기 미대통령도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특히 주목되며, 中國도 동 구상이 본격화될 경우 적극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에 대한 域內國家들의 意圖가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다. 동 기구를 통해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비교적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러시아는 동 기구를 역내 진출의 기반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정치·군사대국화를 도모하고 있는 日本과 中國은

각각 자국의 신장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는 制度的 場으로서 또한 상대방의 과도한 정치·군사대국화를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美國의 경우, 균형자적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본·한국 등에 일정 규모의 군사력을 배치·운용하여야 한다는 인식에 기초하여 雙務的 同盟體制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미국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域內 危機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多者間 安保協力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미국은 역내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역내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한 補助裝置로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미국은 쌍무적 동맹체제와 다자간 안보협력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강구·추진함으로써 역내 영향력을 견지하고 역내 안전보장을 확보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유럽안보협력회의(CSCE)와 같은 域內 多者間 安保協議機構 창설구상이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며, 이와 함께, 역내 경제문제를 공동으로 논의하는 다자간 경제협력문제도 활성화되어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와 같은 역내 경제협력기구가 보다 확대·발전되는 형태로 域內 多者間 經濟 協力이 제도화될 가능성이 크다.

결론적으로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1+3」체제를 바탕으로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地域強國으로 부상하고 있는 일·중을 통제하면서 러시아를 소외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조성되어

질 것이며, 이와 함께 多者間 協力을 강화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不安定要因을 관리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2. 東北亞 新國際秩序가 韓半島問題에 미칠 影響

가. 韓半島 平和定着

제 8차 고위급회담 이후 현재 남북관계는 교착상태에 있다.北韓의 對南戰略과 體制維持는 鈔理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한,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표출되고 있는 북한의 이중적 태도와 「先남조선혁명, 後공산화 통일」이라는 대남전략 기조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평가된다. 현재 북한은 본질적인 변화보다는 위로부터의 「통제된 변화」를 시도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북한의 對南戰略 변화 및 南北關係의 급속한 진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다만 核問題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변화되어 南北 相互核査察 규정이 채택되고 제 8차 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된 「부속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실천되어 나간다면 남북관계는 상당히 진전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볼 때, 북한이 안고 있는 경제난 및 국제적 고립 심화, 김정일 후계체제의 정당화 명분 강화 필요성, 남북한 國力隔差 확대 등은 북한의 「개방확대」를 불가피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북한의 변화가 장기적으로 불가피하다는 전제하에 낙관적으로 전망한다면, 南北關係는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

을 통해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하고 있듯이 「남북 화해·협력시대 개막 →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 → 남북연합 → 통일」의 구도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기본합의서」 발효 이후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기 위한 한국의 정책적 노력과 국제적 개방 압력이 병행되고,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됨에 따라 남북간 교류·협력이 활성화되고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이루어진다면, 남북관계는 「평화정착 및 공존공영」의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주변 4국의 交叉承認이 이루어질 것이나,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위험을 항구적으로 제거하고 진정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 보장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南北聯合을 구성하기 위해서는 「기본합의서」가 성실하게 이행·실천되는 것과 함께 北韓이 주장해 온 高麗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²⁾ 철회 등이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남북연합이 실현되려면 고려연방제의 前提條件이 철회된 후 상호실체 인정·존중의 토대위에서 남북관계가 정상화되어야 하고, 南北頂上會談을 통해 남북연합 구성에 관한 合意書로서

2) 북한은 聯邦制 실현의 先決條件으로 ① 반공법·국가보안법 폐지 및 폭압통치 기구 철폐, ② 모든 정당·사회단체 合法化 및 자유정치활동 보장, 정치범 석방 및 이들에 대한 모든 형벌의 무효화, ③ 聯共 내지 容共政權으로의 교체, ④ 對美 平和協定 체결 및 주한미군 철수, ⑤ 미국의 「두개 조선」 조작책동 중지 및 내정간섭 철폐 등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條件이 붙은 聯邦制 提議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남한 정부 이외의 정치집단이 정권을 장악할 경우를 전제로 한 제안이기 때문에 사실상 對象이 없는 제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족공동체헌장」이 채택되어야 할 것이다.³⁾

한편 동북아지역의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 한·소 수교와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고, 미·일의 대북한 접촉도 최근 활성화하고 있어 한반도정세의 변동 가능성도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前章에서 論述하였듯이 남북한에 대한 주변 4국의 양자관계 재조정은 기본적으로 韓半島 現狀維持 次元에서 이루어지고 있어 한반도정세는 平和定着 方向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 4국은 한반도에서의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이 각국의 國益에 유리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개방·개혁 등 實用主義的 政策을 채택·추진하도록 유도함으로써 한반도에서의 전쟁재발 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고, 나

- 3) 民族共同體憲章에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된 ①統一의 원칙 및 기구설치 합의내용, ② 통일실현시까지 남북관계 전반에 걸친 기본적 질서와 방향, ③ 통일방안, ④ 불가침약속, ⑤ 「남북연합」 설치·운영에 관한 합의가 일차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①統一의 중간 단계, ②南北 平和體制 보장방안, ③ 한국전쟁 등 과거청산문제, ④ 북한의 人權問題 등과 같은 내용도 새로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남북연합 단계를 국가연합 단계와 연방 단계로 나누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즉 國家聯合 段階에서는 남북정부가 외교권·국방권·입법권을 각기 보유하면서도 쌍방간의 현안문제를 협의·해결하기 위해 「기본합의서」에 따라 설치될 諸機構을 남북정상협의회·상설각료위원회·한민족평의회·공동사무처 등으로 발전시켜 구성·운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聯邦 段階에서는 국가연합하의 기구들을 연방기구로 발전시키는 동시에, 聯邦政府는 南北 地域政府가 보유하고 있던 외교·국방·경제권을 이양받아 경제·사회·문화 등 諸分野에서 統合을 추진함으로써 政治的 統合의 基礎를 구축해 나가게 될 것이다. 즉 남북상설각료위원회를 연방정부로, 한민족평의회를 연방의회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聯邦議會는 양원제로 구성하되, 一院은 인구비례에 의해 구성하여 統一에 대비한 입법활동 및 통일헌법 초안을 작성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聯邦法院을 신설하여 위헌법률 심사, 연방과 지역정부간 또는 지역정부 상호간의 權限紛爭을 심사·처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가 남북대화가 진전되어 남북관계가 화해와 협력에 입각한 평화공존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희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변 4 국은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는 차원에서 남북한 교차승인을 추진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立場과 政策方向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냉전 종식 및 소연방 해체 이후 마련된 唯一 超強國의 지위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에서 「균형자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影響力 擴大를 도모하고 있는 미국은 地域均衡者의 입장에서 한반도에서 상존하고 있는 北韓의 威脅을 통제함으로써 한반도의 平和를 확보하는 것이 동북아의 안정과 나아가 미국의 國益에 부합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이러한 차원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촉구하는 동시에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북한의 위협을 직접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보유하고자 하고 있다.

둘째, 경제력에 상응하는 역내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일본은 한반도에서도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영향력 행사 뿐만 아니라 한반도문제에 대한 정치적 발언권을 증대시키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북한과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일차적으로 일본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확보하는 한편, 한국과의 선린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궁극적으로 韓半島問題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 신장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융통성있는 務實外交·全方位外交를 지향함으로써 동

북아에서 地域強國으로서의 역할 증대를 모색하고 있는 中國은 한반도정책에 있어서도 한·중 수교로 조성된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서의 지위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과 美·北韓, 日·北韓 관계개선을 통한 북한의 국제적 지위 신장을 지원함으로써 남북한간의 勢力均衡 및 한반도 현상유지를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한반도문제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넷째, 소연방 해체 이후 세계 초강대국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 러시아는 국내정치·경제적 불안정 요인을 우선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적극적인 외교정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나, 최소비용으로 기존의 국제적 영향력을 유지·발전시키려는 노력은 계속 경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러시아는 韓半島問題에 있어서도 남북한 동시수교국으로의 지위를 이용하여 북한과의 우호관계를 현실적으로 유지하는 동시에,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통한 실익을 도모하는 등 韓半島 均衡政策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북한의 체제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관측에서 북한의 개방·개혁을 유도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發言權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은 한반도의 안전을 유지하려면 동북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가 수립되어야 하며, 美·北韓, 日·北韓 關係正常化는 동북아 정세의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대미·일 관계개선이 중·러의 對韓 修交 등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타개하고 경제난 회복에

기여함으로써 결과적으로 體制維持方案으로 될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는 북한도 남북한과 주변 4국의 외교관계 수립을 인정하고, 이에 따라 현실적으로 「두개 조선」을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특히 북한은 세계질서 재편의 主導權이 美國에 있음을 명백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 4국 가운데 對美 관계개선을 보다 중시하는 방향으로 政策轉換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북한은 경제난 해소를 위해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추진하면서 중·러와 기존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려는 입장에 있으며, 특히 한·중 국교정상화에도 불구하고 社會主義 理念을 고수하고 있는 중국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려 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주변 4국과 북한이 모두 한반도의 안정과 남북한 평화공존 및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을 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주변 4국은 한반도가 다른 세력의 영향력하에 들어가는 것을 견제하면서 한반도와의 관계에서 경제적·전략적 이익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각국의 이해관계가 상충되고 있으나, 한반도에서의 새로운 전쟁 발발 등 지역 불안정이 야기될 수 있는 위험성을 소멸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의 군사적 대결상태의 완화, 긴장완화는 4국 모두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며,⁴⁾ 따라서 주변 4국은 韓半島

4) Donald S. Macdonald,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 140.

現狀維持 次元에서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공존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 평가할 때, 향후 南北關係는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발효된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和解와 協力の 平和共存關係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주변 4국의 交叉承認도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된다.

나. 韓半島 統一

주변 4국은 남북대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에는 공히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한반도의 궁극적인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 이유는 國家別로 사소한 입장 차이는 있겠으나, 대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要因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통일된 한국의 未來에 대한 불확실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한반도가 통일될 경우 통일한국이 장래 각국에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으며, 적대적인 세력으로 발전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統一韓國이 국력을 신장하여 동북아시아의 새로운 強國으로 부상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것이다. 즉 <도표 1>에서 나타나듯이 남북한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통일한국은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여 세계 188개국 중 통일된 한국의 면적은 78위, 인구는 12위, 국민총생산은 11위를 점하게 될 것이며,⁵⁾ <도표 2>에서 나타나

5) Ibid., p. 136. 특히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기술 등이 결합하면 자체의 市場 確保率이 증대되어 대외무역 의존도가 격감할 것이며, 군사력 감소 및 군수 산업의 민수전환은 경제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듯이 남북한의 현 군사력 규모도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도표 1〉 南北韓 및 周邊國家間 면적·인구·국민생산·대외무역 比較

국가명	면적 (100만 m ²)	인구 ^{a)} (100만명)	국민생산 ^{b)} (10억달러)	대외무역 ^{c)} (10억달러)
중국	3,691	1,116	422	70
일본	143	124	2,874	321
러시아	6,593	160	?	?
소련	8,650	298	1,950~2,480	170
미국	3,615	249	5,199	604
북한	47	23	47	4 ^{c)}
남한	38	44	209	124 ^{c)}
남북한	85	67	256	128

註: a) 1990년 통계이며, 러시아 및 소련은 추정치임.

b) 1989년 통계이며, 일본·소련·미국·남북한은 국내총생산(GDP)임. 일부 자료는 북한의 국민생산 규모를 더 적게 평가하고 있음. 예를 들어 *Far Eastern Economic Review* (1991. 8. 22)는 북한의 국민생산 규모를 210억달러로 산출하고 있음.

c) 1987년 통계이며, 남북한은 1989년 통계임.

資料: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London: I.I.S.S., 1990); *National Geographic Atlas of the World* (Washington, D.C.: National Geographic Society, 1963); *Collier's Yearbook 1988* (New York: Macmillan Educational Co., 1987);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ugust 22, 1991; Donald S. Macdonald,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p. 138에서 재인용.

〈도표 2〉 南北韓 및 周邊國家間 軍事力 比較

국가명	현역군 (1,000명)	예비군 (1,000명)	국방예산 ^{a)} (10억달러)	전함 ^{b)}	전투기 ^{c)}
중 국	3,303	1,200+	7	148	5,360
일 본	249	48	28	79	86
러 시 아	?	?	?	?	?
소 련	3,988	5,602	119	550	5,598
미 국	2,118	1,614	292	347	6,373
북 한	1,111	540	4	27	796
한 국	750	4,500	10	37	503
남 북 한	1,861	5,040	14	64	1,299

註: a) 일본의 경우 1988년과 1990년 통계 평균치, 소련의 경우 국방지출(defense expenditure), 그리고 북한의 경우 최소 추정치임.

b) 잠수함, 항공모함, 구축함, 프리깃 등을 포함 (소형 선박 제외).

c) 수송기, 헬기 제외.

資料: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London: I.I.S.S., 1990).

둘째, 한반도에서의 現狀變化가 域內 不安定要因으로 되어 각국의 國益에 대한 위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인식이다. 즉 한반도가 통일되어 域內 強國으로 등장할 경우, 역내 역학관계의 변동을 우려한 각국이 政治·軍事大國化 路線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各國은 자국의 영향력 증대를 도모하면서 타국의 영향력 증대 구실로 작용할 수 있는 한반도 통일이라는 현상변경요인의 발생을 억제하려 한다는 점이다.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이러한 否定的 立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통일환경과 관련하여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南北韓間 交流·協力이 활성화되고 平和共存이 제도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주변정세가 조성되고 있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 보았듯이 주변 4국은 당장의 통일은 희망하지 않으나, 남북관계 개선과 교류·협력 증진에는 긍정적인 입장에서 적극 지원하는 입장이므로 적어도 南北關係는 획기적으로 개선·진전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는 남북한의 自主的 努力에 따라 남북한이 南北聯合 段階에서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가고 政治統合의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간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완성해 나가면서 남북간 평화와 교류·협력이 制度化되고 민족공존·공영이 보장될 수 있는 상태이며, 정치적으로는 단일국가 통일을 이룩하지는 못하더라도 남북한이 국가연합 또는 연방을 구성하여 政治的 一體性을 강화하여 나가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태」는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통일 의지 여하와 주변정세의 변화에 따라 남북한이 민족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이며, 이러한 상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統一構圖에 따라 分斷史를 극복하고 통일후유증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점진적으로 민족화합을 달성해 나갈 때 조성될 것이므로 域內 情勢의 急變을 야기하지 않고서도 달성할 수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실

현되면, 역내국가들의 반발과 저항을 최소화하면서 완전한 統一로의 이행을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실상의 통일상태」가 구현되거나 또는 한반도 통일이 동서독의 통일처럼 급속도로 이루어질 경우, 주변 4국이 통일한국에 대한 영향력 확보 차원에서 소극적인 자세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으로 통일을 지원할 가능성도 있다. 즉 주변 4국은 한반도의 통일이 불가피한 것이라면 통일한국과 우호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한반도의 통일을 지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⁶⁾ 이를 위해 주변 4국은 교차승인으로 조성될 남북한에 대한 影響力을 바탕으로 이것이 통일이후 統一韓國에 대한 영향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강구·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현재 동북아에서 형성되고 있는 新國際秩序는 전술하였듯이 「균형자로서의 미국과 세력균형을 이룬 일·중·러」라는 「1+3」體制로 구축될 가능성이 있는 바, 통일한국이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파괴하는 變數로 작용하지 않도록 政策的 努力을 경주한다면 민족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한국은 균형자로서의 美國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유지·발전시키는 동시에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협조하고 통일한국이 미국의 국익을 손상시키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미국의 지원을 확보하고, 日·中·러의 勢力均衡關係에서도 특정국에

6) Ibid., p. 147.

편향적인 정책을 추진하지 않을 경우 궁극적으로 對外的 統一 環境을 완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第 V 章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

1. 基本方向

韓民族은 유구한 역사를 지닌 單一民族으로서 삼국통일 이래로 統一國家를 구성하여 왔다는 점에서 제 2 차 세계대전 이후 동·서 냉전과정에서 과생된 外勢에 의한 分斷을 民族의 主體的 努力으로 극복함으로써 민족통일을 이룩하는 것을 民族 最大의 課題로 삼아 왔다. 즉 한민족은 외세에 의한 분단 과정에 대한 자기 비판과 성찰과정을 통하여 민족통일은 외세에 의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민족의 주체적인 노력과 역량에 의해 성취되어야만 항구적인 민족번영을 도모할 수 있다는 教訓을 얻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단일민족으로서의 한민족의 통일문제는 남북한 주민이 主體가 되어야 한다.

물론 소연방의 해체와 동·서 냉전의 종식이라는 새로운 국제정치적 상황이 조성되고 있으나 外勢에 의한 분단과정과 한반도 주변정세에 비추어 볼 때, 民族統一을 주변정세와 주변 국가의 한반도 정책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는 없다. 한민족을 주체로 하여 민족통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對內的 統一對備力量을 함양·제고하여 나가는 것이 핵심적인 과제이나, 주변정세를 민족통일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성하고 주변국가들이 민족통일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적극적인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努力이 民族의 主體的 統一努力과 병행

하여 경주되지 않으면 안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이 형성되고 있는 동북아 신국제질서 속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 방향에 입각하여 민족내부적 통일기반을 정비하는 동시에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한다.

첫째,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긍정적인 주변 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대화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민족공존의 기틀을 마련하는 한편, 내실있는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함으로써 민족공영을 도모한다.

둘째, 실질적인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통하여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함으로써 주변 4국으로 하여금 한반도 통일의 當爲性과 不可避性을 인정하도록 하고,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적극적인 統一意志를 바탕으로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인 민족통일로 발전시킨다.

남북간 교류·협력 활성화·제도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북한의 정책변화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구소련 및 동구권의 근본적 변화 등 새로운 국제환경 속에서 北韓이 사회주의체제의 한계와 모순을 직시함으로써 스스로 개방·개혁 등 變化 努力을 경주하지 않는 한, 「기본합의서」 채택·발효 등 南北關係의 가시적 발전에도 불구하고 統一戰線戰術에 입각한 북한의 二重的 對南戰略으로 인하여 남북관계가 본질적으로 개선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社會主義圈의 大變革이라는 시대적 조류에 순응함으로써 민족통일의 대업에

일보 전진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인 남북대화과정을 통하여 韓國이 對北韓 交流·協力を 확대해 나감으로써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는 동시에, 미·일·중·러 등 주변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대북한 개방·개혁을 요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主體的인 努力을 경주하는 동시에 周邊國家들의 協調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와 동시에 향후 남북한이 「기본합의서」를 남북관계 발전의 기본틀로 하여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향해 정진할 것임을 확인하는 등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平和統一意志가 천명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남북한이 합의하는 실현가능한 統一方案을 마련하고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한반도문제를 남북한이 當事者가 되어 해결할 것임을 분명히 하는 등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이룩할 것이라는 의지를 천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南北平和體制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한국은 다음과 같은 국제적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첫째, 북한의 核問題가 남북 상호 핵사찰 규정 채택을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제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북한이 여전히 대미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과 교류·협력의 제도화를 이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當事者問題가 해결되어야 한다. 물론 남북한이 直接 協商을 통해 당사자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

나, 이 문제가 남북한에 의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關聯 當事國 및 유엔의 협조를 통해 당사자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편 東北亞의 탈냉전화 과정에서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構造가 정착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이 이루어지더라도, 통일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듯이 주변 4국이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으므로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을 우려하는 理由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인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협조와 지원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前章에서 논하였듯이 주변 4국이 한반도의 궁극적인 통일에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는 이유는 통일한국의 未來에 대한 不確實性和 한반도 통일이 야기할 域內 不安定性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따라서 ① 통일한국의 未來에 대한 과도한 자화자찬을 삼가하고, ②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한편, 「1+3」체제를 고려하여 美國의 均衡者的 役割 모색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域內 多者間 協力機構 구축 등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신국제질서 속에서 통일한국의 位相을 제도화함으로써 주변 4국의 우려를 불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민족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기 위한 推進構圖를 다음과 같이 설정함으로써 국제적 통일기반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 분석하였듯이 주변 4국이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남북대화를 통한 緊張緩

和와 平和定着에는 긍정적인 반면, 궁극적인 韓半島 統一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을 韓半島 平和定着 次元과 韓半島 統一 次元으로 나누어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선 韓半島 平和定着 次元에서의 國際的 支援 誘導方案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統一意志를 천명함으로써 주변 4국의 통일문제 개입여지를 최소화한다.

둘째, 주변 4국과의 지속적인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한다.

셋째, 주변 4국으로 하여금 北韓의 開放·改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넷째,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과 國際的 平和保障體制 構築을 실현한다.

한편 韓半島 統一 次元에서의 國際的 支援 誘導方案은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理由를 제거하는 차원에서 강구·추진되어야 할 것인 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未來像에 대한 주변 4국의 우려를 불식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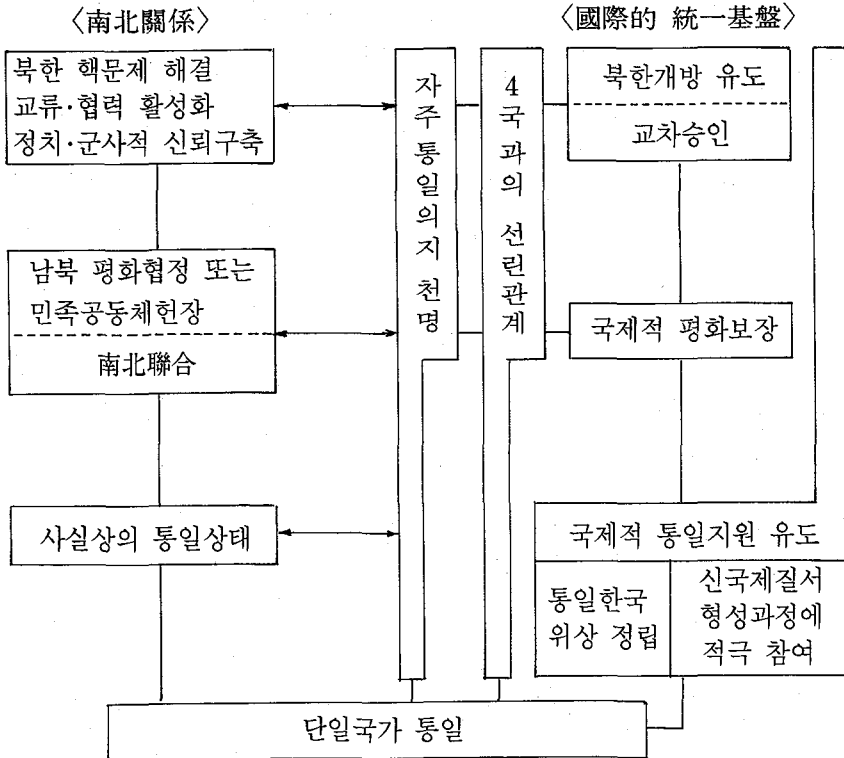
둘째,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東北亞 國際 秩序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그러나 주변 4국의 입장을 고려하여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

을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이라는 두 가지 차원으로 분류하였으나, 이상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방안이 반드시 段階性을 지닌 것은 아니다. 한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지 및 주변 4국과의 선린관계는 한반도 평화정착 뿐만 아니라 통일성취를 위해서는 필요불가결한 요건이며,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 설정·제시 및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서의 참여도 평화정착 차원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안된다. 다만 韓半島 平和定着을 위해서는 적어도 네 가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하며, 이로써 확보된 한반도 평화를 궁극적인 統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네 가지 사항의 지속적인 구현과 함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두 가지 사항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상과 같이 구분하여 제시한 것이다.

한편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을 위한 이상과 같은 基本方向과 推進構圖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설정하고 있는 統一原則과 統一構圖에 조응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방안의 추진구도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제시하고 있는 남북관계 발전구도를 도식화하면 <도표 3>과 같다.

〈도표 3〉 南北關係 發展構圖와 國際的 統一基盤 造成方案



2. 推進方案

가. 韓半島 平和定着支援 誘導方案

(1) 한민족의 적극적인 自主平和統一意志 천명

한반도 통일은 일차적으로 당사자인 남북한 당국과 주민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문제이나, 외세에 의한 분단과

정과 한반도 주변정세에 비추어 볼 때 통일문제를 주변국가들의 입장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추진할 수만은 없다. 따라서 前章에서 한반도 통일환경을 평가·전망하면서 논하였듯이 주변 4국이 한반도의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이나 궁극적인 통일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민족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민족통일을 자주적으로 성취하겠다는 남북한의 적극적인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적극적인 自主統一意志를 바탕으로 南北對話가 실질적으로 진전됨으로써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된다. 즉 남북한의 분단이 비록 外勢에 의해 강제된 것이었으나, 戰勝 4大國의 영향력이 제도화되어 있던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주변국가들이 한반도의 장래에 대한 決定權을 갖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한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의지를 천명함으로써 통일과정에 대한 개입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북한 개방 유도 및 국제적 평화보장 등 韓半島 平和定着過程에서는 주변 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평화 공존·공영을 이룩하되 한반도 장래에 대한 어느 일국의 독점적인 영향력 행사를 배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韓半島 統一過程에서는 북한의 정책 변화에 따라 「기본합의서」에 입각하여 統一過程이 진전되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하고 통일분위기가 성숙될 경우, 비록 주변국가들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民族의 主體的 力量으로

自主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平和定着 및 統一過程에서 주변국가들의 개입을 최소화 내지 배제하기 위해서는 한반도 統一主體가 남북한 당국과 주민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 그 方案으로는 ①「기본합의서」를 유엔에 등록하여 法的 效力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방안, ② 한반도 통일의 주체가 남북한임을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선언하는 방안, ③ 남북한이 실현가능한 통일방안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이 통일을 자주·평화·민주적으로 이룩해 나갈 것임을 천명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첫째,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서문에서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라고 인정하였다. 즉 「기본합의서」는 남북한 當事者間 合意書로서 통일 이전의 남북관계를 잠정적 특수관계로 규정한 「잠정협정」(*modus vivendi*)의 성격을 지니는 것이다. 또한 「기본합의서」는 국제법상 조약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法的 拘束力이 있는 合意文書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기본합의서」는 국제법상 상호 승인한 國家間 條約은 아니나, 주권적 정치실체인 남북한 당국간 합의서이기 때문에 廣義의 條約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유엔 헌장 제102조 1항¹⁾은 회원국간 「조약 또는 국제

1) 유엔 헌장 제102조 1항은 “이 헌장이 효력을 발생한 후 국제연합 회원국이 체결하는 모든 조약과 국제협정은 가능한 한 조속히 事務局에 등록하고, 또한 사무국에 의하여 공표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협정」의 유엔사무국 등록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은 유엔회원국이므로 「기본합의서」는 헌장 제102조에 따른 유엔 事務局 登錄 對象條約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과의 협의를 거쳐 「기본합의서」를 유엔 사무국에 등록함으로써 유엔에서 남북관계를 제도화하고 유엔 諸機關에서 「기본합의서」의 원용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²⁾

따라서 「기본합의서」를 유엔에 등록함으로써 「기본합의서」의 法的 效力을 원용하는 동시에,³⁾ 남북간 의견대립 및 분쟁 발생시 유엔을 통한 평화적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국제적으로 공인받음으로써 향후 남북한이 한반도 통일문제를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남북한간의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해결하여 나갈 것을 대내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의 主體가 「기본합의서」 정신에 따라 南北韓이라는 점을 공식화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개입여지를 최소화 내지 배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둘째, 유엔 會員國으로서 남북한은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
- 2) 유엔 헌장 제102조 2항은 “本條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조약 또는 국제협정의 당사국은 국제연합의 어떠한 기관에 대하여도 당해 조약이나 협정을 원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합의서」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援用不可의 불이익을 받게 되며, 「기본합의서」 조항을 근거로 憲章上 義務不履行을 항변할 수도 없다.
- 3) 예컨대 「기본합의서」 제15조에 규정된 「민족내부교류」와 관련하여 GATT와 법리상 해석문제가 발생할 경우, 「기본합의서」의 법적 효력을 원용하여 대응할 수 있다.

韓半島 統一의 當事者問題를 확인·천명할 수 있다.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문제를 논하면서 후술할 것이나, 한반도문제 해결의 당사자가 남북한이라는 점을 국제적으로 공인받는 것은 향후 남북간 대화와 협상을 制度化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 그 效力을 인정받는다는 차원에서 自主統一을 이룩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즉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의 직접 협상을 통해 이루어짐을 천명함으로써 제 3국의 개입여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統一論理와 관련하여 統一方案을 실현가능한 방향으로 구체화하여, 일차적으로 北韓의 同意를 확보하는 동시에, 통일방안에 대한 주변 4국 및 국제사회의 동의와 협조를 요청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南北聯合 段階를 「국가연합 → 연방」 단계로 구체화함으로써 북한이 동 방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의 노력이 경주되어야 할 것이다. 실현가능한 統一方案을 남북한이 합의하여 확립한다는 것은 남북관계가 향후 합의된 통일방안에서 제시되고 있는 構圖에 따라 발전할 것이며, 남북한이 궁극적인 統一을 이룩하기 위하여 통일방안에 따라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한반도 통일과정을 국내 외적으로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주변국가들의 한반도 정책도 韓半島 統一을 前提로 강구·추진될 것이며, 이는 결과적으로 주변국가들의 통일과정 관여를 최소화·배제하는 효과로 나타날 것이다.

(2) 周邊4國과의 善隣·友好關係 維持·發展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과 협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주변 4국과의 선린·우호관계를 유지·발전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제Ⅳ장에서 동북아 신국제질서를 평가·전망하면서 논하였듯이, 동북아지역에는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의 비효율화 가능성, 중국·북한의 대내적 정치혼란 가능성과 이에 따른 남북관계 및 중·대만관계의 급경직 가능성, 영토분쟁 첨예화 가능성, 군비경쟁 가능성 및 러시아의 보수 우경화 가능성 등의 不安定要因이 상존하고 있어 한반도 통일 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며, 주변 4국과의 선린·우호관계가 손상될 수도 있다. 따라서 한국은 통일지향적 외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여 주변 4국과의 선린관계 발전을 보장하는 동시에 역내 불안정요인을 관리해 나가야 할 것이다.

첫째, 기존의 安保爲主 外交를 총체적인 統一指向的 外交로 전환하여 통일외교역량을 제고하면서 경제·안보외교 등 실질적인 국가이익을 제고할 수 있는 부문의 정책을 한국의 국내외적 역량·위상 제고 측면에서 적극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北方政策도 앞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 뿐만 아니라 한반도 통일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둘째, 對美 關係에 있어서는 미국과의 기존 유대관계를 확

대·발전시킴으로써 實利를 확보하는 동시에, 한·미 안보협력 관계를 유지·발전시켜 동북아의 지역불안정 가능성 등 외부적 군사위협에 대처하는 한편, 미국의 均衡者的 役割 수행에 적극 협조하고 한반도 통일이 미국의 국익에 배치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셋째, 對日 關係에 있어서는 일본의 정치·군사대국화 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하여 역내국가들과의 협조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과의 外交·經濟·安保協力을 강화하여 증대되고 있는 일본의 역내 영향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넷째, 對中 關係에 있어서는 동북아 지역의 안보·경제문제 등과 관련하여 중국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함으로써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을 주도하는 동반자관계를 확립하는 한편, 韓·中 경제교류·협력의 규모를 확대하면서 상호보완적이고 호혜·균형적인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주의 이념·체제를 고수하는 국가로서의 긴밀한 연대의식 내지는 우호·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中·北韓 關係의 特殊性을 감안할 때, 한국의 중국에 대한 과도한 대북한 영향력 행사 요구는 오히려 한·중 관계 및 남북한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鄧小平 사후 발생할지도 모를 중국의 國內政治的 變動을 고려하여 다양한 정치세력과의 연계를 모색하고, 한·러간 군사협력 수준에 비등한 한·중 군사협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對러 關係에 있어서는 불확실하고 유동적인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내 정세를 고려하여 향후 정국의 향배와 관계 없이 한·러 관계를 선린·우호관계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 러시아 의회내 최대 정치세력으로 부상한 「시민동맹」을 포함한 다양한 政治勢力과의 유대관계를 모색하는 동시에 구소련 구성국가들과의 개별적인 유대를 강화하여야 한다. 또한 러시아와의 經濟協力 및 軍事協力を 확대·발전시켜 경제실리 증진, 북한의 군사적 위협 제어 등의 효과를 거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經濟協力問題에 있어서는 단기적인 경제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인 진출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양국관계를 돈독하게 한다는 차원에서 지속적인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한편 통일한국의 미래를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거주 韓人을 극동지역에 재정착시키는 방안을 강구·추진할 필요가 있다.⁴⁾

(3) 對北韓 開放誘導

북한은 현재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면서 통제된 개방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기본합의서」의 성실한 이행·실천을

4) 독일과 러시아는 스탈린이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계 주민을 추방할 때까지 독일자치공화국이 위치하고 있던 볼가江 流域에 독일의 再定着을 허용하는 條約을 서명(1992. 7. 10)한 바 있으므로, 한국의 경우에도 일차적으로 구소련 거주 韓人의 권익보호를 위해 중앙아시아국가들과 교섭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 한인의 극동재정착을 위해 러시아정부와 필요한 조치를 협의·추진할 필요가 있다.

통한 내실있는 남북교류·협력을 활성화·제도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정책 변화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으로서는 북한의 통제된 개방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北韓의 開放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方案을 강구하는 한편, 주변 4국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短期的인 측면에서 북한의 對外開放을 가장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국가는 中國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은 자국의 개혁·개방정책을 확대·심화하고자 할 뿐만 아니라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다. 또한 北韓은 1982년 9월 김일성의 중국방문 이래 중국의 대외개방정책·경제개혁조치를 공식적으로 지지하면서 그 성과에 많은 관심을 표명해 온 점에 비추어 中國式 開放모델의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韓·中 國交正常化를 이룬 상황에서 한국으로서는 급증하는 韓·中 經濟·政治關係를 북한의 개혁·개방과 연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① 중국의 多國間 經濟協力體 구상에 북한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② 중국내 韓·中 經濟合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 ③ 북한의 「자유무역지대」에 한·중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또한 한국은 러시아와의 經濟協力이 활성화되는 상황에서 북한의 참여를 적극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① 한·러

양국의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북한의 참여, ② 기존의 러·북한 간 경제협력사업에 대한 한국의 참여, ③ 시베리아 개발 등에의 남북한·미·일 등 다자간 공동 참여, ④ 북한 자유무역지대에의 한·러 공동 참여 등의 방안을 모색·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한국은 美·北韓, 日·北韓의 관계발전을 북한이 國際法, 國際慣例를 준수하고 각종 국제기구에 책임있는 구성원으로 참여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며, 미·북한, 일·북한 수교후 미·일의 對北韓 경제지원 및 협조수준을 북한의 개방과 연계시키도록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북한의 각종 國際經濟機構 가입을 관련국과 협조하여 적극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開放을 촉진시키고 나아가 국제기구에서의 남북한 간 協力을 활성화·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식 사회주의」를 견지하기 위해 사상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북한이 민주화 및 시장경제화 등 사회주의권의 일반적 추세를 수용함으로써 사회개방·체제개혁 등 본질적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 북한의 政治的 民主化를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미·북한, 일·북한 수교협상과정에서 미·일이 북한의 정치적 민주화를 촉구하도록 하고, 수교 이후에도 동 문제가 경제지원·협력 확대의 條件으로 강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클린턴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등을 제기함으로써 대북한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도 있을 것이나, 북한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민주

화 요구가 오히려 북한을 폐쇄시키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할 것이며, 이는 南北對話 進展狀況과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韓半島 平和에 대한 國際的 保障

제 5 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채택된 「기본합의서」 제 5 조는 “남과 북은 現 停戰狀態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平和狀態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平和狀態가 이룩될 때까지 現 軍事停戰協定을 준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平和狀態 構築을 위한 구체적 方法과 節次를 명시하지 않고 있다. 또한 제 8 차 고위급회담(1992. 9. 15~18)에서 채택·발효된 「기본합의서」 화해부문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 5 장 「정전상태의 평화상태로의 전환」에서의 “남과 북은 現 정전상태를 남북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19조)는 條項이 우리측의 當事者 解決原則으로 해석되는지, 또는 북측의 對美平和協定 체결 주장⁵⁾의 근거가 되는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제 8 차 고위급회담에서 部門別 附屬合意書가 채택된 이후에도 “미국은 우리 공화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조선에서 미군을 시급히 철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⁶⁾라고 주

5) 북한은 休戰協定 署名者가 유엔군사령관이며, 유엔군사령관이 美國人이라는 논리에서 미국이 休戰協定의 當事者인 동시에 平和協定 當事者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1992년 10월 4일자 「로동신문」 논설, “미국은 북남합의서 이행을 가로막지 말아야 한다” 참조.

장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평화상태 전환문제」가 계속 쟁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남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남북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을 제도화하는 동시에, 한반도 평화체제를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 평화체제 구축과 연계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은 우선적으로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한반도문제 해결의 직접적인 당사자가 남북임을 분명히 하는 등 당사자문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⁷⁾ 남북 평화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國際的 保障裝置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역분쟁 해결과 평화정착을 위한 國際的 保障類型은 보장조약형, 유엔보장형, 다자간 지역안전보장형, 교차불가침협정형 등으로 대별된다.⁸⁾

- 7) 당사자문제와 관련하여 한국은 다음과 같은 논거를 주장할 수 있다. ① 한국은 전쟁이 발발한 국가(host country)일 뿐만 아니라 「主 交戰國」이다. ② 한국은 유엔군사령부에 작전지휘권을 이양하였으며, 유엔군사령관은 유엔 뿐만 아니라 한국을 대리하여 휴전협정에 서명하였다. 따라서 한국은 休戰協定의 法的 當事者이다. ③ 휴전협정 제60항은 한국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정치회담을 휴전후 3개월내에 소집할 것을 규정하여 한국은 유엔총회 결의(1953. 8. 28)와 베를린 미·영·프·소 외무장관회담 공동성명(1954. 2. 28)에 의거하여, 이미 제네바 政治會談(1954. 4. 26~6. 15)의 당사자로 참가한 바 있다. 따라서 韓國은 休戰體制를 대체하는 문제를 논의하는 정치회담의 당사자 자격이 있다. 北韓도 1974년 3월 25일 이전에는 南北間 平和協定 체결을 주장하였다.
- 8) 첫째, 保障條約型은 분쟁 가능 당사국에 대하여 영향력을 가진 강대국 또는 관련 강대국이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둘째, 유엔보장형은 분쟁지역에 대한 유엔平和維持軍(PKF) 또는 平和監視團(PKO) 파견 및 평화문제 관련 유엔특별위원회 등을 통해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이다. 셋째, 다자간 지역안전보장형은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통하여 역내 특정 분쟁 가능 당사자간 분쟁 발생을 예방, 지역안전 및 평화를 보장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넷째, 交叉不可侵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 방안으로 첫째, 保障條約型的 경우, ① 주변 4국이 보장하는 방안, ② 美·中이 보장하는 방안, ③ 美國이 보장하는 방안, ④ 參戰 16개국 및 中·러가 보장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으나, 한반도 주변환경을 감안할 때 ①案(주변 4국 보장방안)이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②案은 韓·美 및 中·北韓 關係를 고려할 때 타당성이 있으나, 日·러가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고, ③案은 북한의 3者會談 주장을 고려할 때 적실성이 있으나, 미국의 對北韓 影響力이 제한적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④案은 제네바정치회담의 연장선상에서 法的 根據는 있으나, 회의 개최상의 난점 및 절차상 복잡성 등의 문제점이 있다.

둘째, 유엔보장형의 경우, 최근 유엔의 국제적 역할증대 추세와 남북한의 유엔가입에 비추어 한반도 平和保障方案의 하나로 고려될 수 있으나, 유엔보장형 평화보장을 위해서는 유엔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 PKF) 파견이 필요하다. 이는 특히 非武裝地帶에 대한 국제적 감시를 위해서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유엔군의 직접적인 주둔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자주통일원칙에 상치될 위험성이 있다.

셋째, 多者間 地域安全保障型的 경우, 유럽과 달리 동북아

協定型은 분쟁 가능 당사국이 각각 상대방을 지원할 수 있는 제3국과 不可侵 協定을 체결하여 제3국의 상대방에 대한 지원가능성을 봉쇄함으로써 안전을 보장받는 방식이다. 全東震,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참조.

에서는 한·미, 미·일, 중·북한간 쌍무적 동맹조약이 안보질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며, 역내 국가간의 정치·군사적 이해가 대립되고 있기 때문에 동북아지역에서 단기적으로 多者間 安保協議機構가 창설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통한 평화보장 확보를 당장 기대할 수는 없으나, 장기적으로는 효용성이 큰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넷째, 交叉不可侵協定型의 경우, 4국의 남북한 교차승인 가능성이 증대되고 있는 바, 韓·러, 韓·中, 美·北韓, 日·北韓 不可侵協定을 체결하여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도모할 수 있다. 다만 동북아의 경우 불가침협정 체결 관련국이 보장조약 체결 관련국과 중복되므로 4국의 보장조약이 체결될 경우, 교차불가침협정형 보장을 반드시 추진할 필요는 없다고 평가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에 대한 국제적 보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履行을 국제적으로 보장하는 美·日·中·러의 보장조약 체결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조약에서는 미·일·중·러가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고 한반도에서 무력을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남북한 가운데 一方의 위협 및 도발에 대해 4국이 공동 대응할 것임을 규정하는 명시적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정부는 베이커 미국무장관의 한반도문제 해결을 위한 6者會談 주선용의 표명에 대해 1991년 11월 10일 반대의사를 표명한 바 있으나, 한국은 적어도 한반도 평화의 국제적 보장문제에 관해서는 「2+4」의 6者會談을 적극 수

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4국의 보장조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交叉不可侵協定型 保障 次元에서 우선적으로 韓·러, 韓·中間 不可侵協定을 체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⁹⁾

한편 韓半島 平和體制를 공고화하는 동시에 統一基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군비축소와 동북아지역 차원의 군비통제를 연계시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남북간 군비축소를 위해서는 남북간 직접협상에 의한 「군비축소협정」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의 궁극적 평화를 보장하기 위하여 多者間 安保協議機構를 창설하여 지역적 차원에서 군비통제를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므로 동북아지역 다자간 안보협의기구 창설구상이 가시화될 경우, 동 구상의 실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나. 韓半島 統一支援 誘導方案

동북아의 탈냉전화 및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 등이 실현되고 한반도 평화에 대한 國際的 保障이 이루어졌다고 하여도, 미·일·중·러 등 주변 4국이 韓半島 統一을 적극적으로 희망·지원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韓半島 平和 定着 次元에서는 한반도 긴장완화와 남북대화를 원하고 있는 주변 4국의 입장을 활용하여 대북한 개방 및 한반도 평화에

9) 열린 대통령 방한시 무력불행사를 규정한 「한·러 기본관계조약」이 체결(1992. 11. 19)되었으므로 한·중간에도 유사한 조약이 체결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대한 국제적 보장을 이루되, 韓半島 統一 次元에서는 주변 4국이 한반도 통일에 소극적인 이유를 제거함으로써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지원·협조를 유도하거나 적어도 주변 4국이 통일장애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주체적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통일한국의 國際的 位相을 과다하게 자화자찬함으로써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하며, ②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음을 주변 4국으로 하여금 인식시키고 韓半島 統一이 궁극적으로 동북아 및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1)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 설정·제시

한반도의 統一方式 및 統一時期에 따라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은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나, 주변 4국은 한반도 통일이 현재의 동북아질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며, 각국의 國益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분석을 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4국은 한반도의 불확실한 미래보다는 現狀維持를 선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한국의 國際的 位相에 대한 과대한 평가는 궁극적으로 統一 障礙要因이 될 수 있다. 특히 통일한국이 經濟的 強國으로 부상하여 일본과 경제·외교적인 경쟁관계를 형성하게 될 것이며, 통일한국이 核武裝을 할 경우 동북아 국제정세가 불안정하게 될 것이

라는 研究報告書들¹⁰⁾은 주변 4국이 통일한국의 미래를 우려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한국으로서는 통일한국의 位相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未來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의구심을 불식하여 이들이 統一 障礙要因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한반도의 통일이 4국의 利害關係를 위협하지 않는 것임을 강조하고, 統一韓國의 國際的 位相에 대한 불필요한 과다 자찬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난을 감안할 때, 통일이 실현될 경우 한국의 經濟力을 상회하는 과도한 統一費用 지출이 요구될 것이며, 따라서 단기간내 한국이 역내 경제강국으로 등장하기 어려움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¹¹⁾ 물론 남북한의 경제력을 현재 수준에서 통합하더라도 상당한 국력을 보유하고 되며, 통일비용 지출 등에 따른 통일후의 경제적 어려

10) James A. Winnefeld and Jonathan D. Pollack et al.,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 (Santa Monica: Rand, 1992); Aidan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近藤重克, “冷戦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卷 第1號 (1992年 6月) 참조.

11) 이와 관련하여 韓國開發研究院은 한반도에서의 조기통일 달성시 통일후 처음 3년간은 1천 4백억달러가 소요되고 1990년대 말까지는 총 2천 5백억~3천억 달러의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영국 경제정보단의 보고서는 조기통일 이후 10년간 매년 90~100억달러의 투자 자금과 60~160억달러의 보조금이 소요되는 동시에, 北韓産業 再建을 위한 민간부문의 투자가 최소한 매년 350억달러 이상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Foster-Carter, *Korea's Coming Reunification*, p. 99.

음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풍부한 자원, 노동력 및 국내시장의 확대 등의 好材를 활용하여 통일한국이 초기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나아가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통상파트너, 투자 및 기술이전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역할을 하여 經濟富國으로 발돋움할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이 제고된다고 하여도 그것이 동북아지역의 전반적인 경제변영에 기여하는 것임을 강조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이와 관련하여 한국은 동북아지역내 多者間 經濟協力機構 및 나아가 東北亞經濟圈 形成過程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역내국가간 산업구조 조정을 도모하고 경제로 형성될 것인 바,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내국가들 역내의 여타 국가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님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安保的 側面에서 한반도의 전략적 가치가 대단히 높으므로 統一韓國이 어느 하나의 주변국가의 독점적 영향권하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 통일한국이 막강한 軍事力을 보유하는 것도 여타 동북아지역 국가들에게 불리하다는 것으로 인식될 것이다. 또한 유럽과 달리 集團安保協力體制가 수립되어 있지 않고, 동북아 안보환경이 현재보다 불안정한 방향으로 전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통일한국이 보유하여야 할 適正 軍事力 規模는 중요한 논란의 대상이 될 수 있다.¹²⁾

12) 유럽에서는 집단안보협력체제(CSCE)가 형성되어 있어 統一獨逸을 집단안보협력체제의 틀 안에서 견제할 수 있는 한편, 독일의 입장에서도 막강한 軍事力없이도 이와 같은 협력체제를 통하여 自國의 安保를 보장받을 수 있다.

따라서 통일한국은 동북아지역내의 국가들이 통일한국의 군사력 규모로 인해 안보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하면서도 자국의 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군사력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기본합의서」의 不可侵部門을 이행하는 과정을 통해 주변국의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 수준과 통일한국의 적정 군사력 규모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段階的 軍縮을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통일한국의 核武器 보유 가능성에 대해서는 주변국 모두가 우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한은 이미 「한반도의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을 통해 “핵무기의 시험,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비,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한반도의 非核化를 실현해 나가면서 주변국의 우려를 불식하여야 할 것이다.

(2) 東北亞 新國際秩序 形成過程에의 적극 참여

동북아 신국제질서는 전술하였듯이 미국을 중심으로 한 「1+3」체제로 되면서 동시에 다자간 협력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형성될 것인 바, 한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한다는 차원에서 한반도 통일이 역내 정세 변동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의 일환으로 만드는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미·일·중·러 등 동북아 4국 모두와 의

교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외교환경을 바탕으로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수행에 적극 협조하는 동시에 주변국간의 懸案問題를 거중 조정하는 外交力量을 발휘함으로써 동북아 역내에서 한국의 위상을 제고하는 한편, 한반도 통일이 주변국간 力學關係의 새로운 變數로 작용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것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둘째, 역내 多者間 安保·經濟協力에 적극 참여하는 동시에 북한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다자간 협력의 틀 속에서 남북한의 統合을 모색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함으로써 自主統一의 여건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美國은 냉전종식 및 소연방 해체에 따라 唯一 超強國의 地位를 확보하는 한편, 아·태지역에 대한 전략적·경제적 중요성을 재평가하면서 이 지역에서 均衡者的 役割 지속과 함께 影響力 擴大를 도모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요인들은 미국의 효율적인 균형자적 역할 수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첫째, 미국은 아·태지역에서의 既得權 상실을 원하지 않으나 국제정세의 긴장완화, 국내 경제력 약화 등으로 아·태 지역 주둔군의 축소를 포함한 戰略的 調整이 불가피하며, 이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지역에서의 영향력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日本은 현재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大國化를 지향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는데, 이는 향후 동북아지역에서의 일본의 역할과 영향력 강화를 의미한다. 셋째, 이러한 일본의 역할(특히 군사력) 강화와 남북한 통일은 중국을

자극하여,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유도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넷째, 남북한관계가 평화공존관계로 진전됨에 따라 韓國의 對美 安保依存 필요성이 감소되고, 이러한 경향은 남북한 통일이 가까와질수록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요컨대 향후 동북아 신국제질서의 궁극적인 모습을 「균형자로서의 미국과 세력균형관계에 있는 일·중·러」라는 「1+3」체제라고 볼 때, 역내 정세가 안정화될 수 있느냐 여부는 미국이 일·중·러간의 세력경쟁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은 미국과의 기존 紐帶關係를 확대·발전시킴으로써 對美 관계에 있어서 最大의 實利를 확보하는 동시에, 미국의 균형자적 역할 모색에 적극 협조함으로써 동북아지역에서 힘의 공백에 따른 緊張發生 可能性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평화통일기반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통일에 대한 미국의 지원과 협조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盧泰愚 大統領이 제창한 바 있는 「동북아 평화협회의의」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 구상은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問題와 연계되어 있는 것으로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둘러싼 최근 역내에서의 새로운 움직임을 감안할 때, 한국은 「동북아 평화협회의의」를 주창함으로써 域內 情勢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自主統一을 위한 民族의 主體的 力量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아·태지역에서의 다자간 안보협력 논의는 일찌기 구소

련에 의해 강조되어 왔으나, 최근 일본이 경제력에 상응하는 政治·軍事的 役割 증대 차원에서 自衛隊의 군사력 증강을 모색하는 동시에, 美·러·中이 참여하는 다국간 안전보장기구 설치를 주장(1992. 6. 22 宮澤喜一 외무장관 기자회견)함으로써 同 기구를 통한 정치·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도모하고 있어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문제가 가시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여 온 클린턴이 美대통령으로 취임함에 따라 미국이 동 기구 설치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동북아지역에서 다자간 안보협의기구를 창설한다는 이와 같은 構想이 구체화될 경우, 한국은 동 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동 기구내에서의 역할 증대를 도모하는 동시에, 동 기구에의 북한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제어하고 韓半島 軍備統制問題를 동북아의 전반적인 군비통제문제와 연계하여 해결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역내 안보환경의 변화를 가져올 중대한 변수인 한반도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自律性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동북아지역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과 관련하여, 한국은 동북아평화협의회의 구상을 포함하여 역내국가들에 의해 제안되고 있는 기존의 다양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 구상을 종합하여 역내국가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수용될 수 있는 方案을 새로이 강구·천명할 필요가 있다. 즉 다자간 안보협력을 적극 주장하고 이를 주도함으로써 이 틀속에서 통일한국의 위상을 제도화하고 통일한국의

위상에 대한 역내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동시에, 自主統一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후의 역할과 위상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은 동북아지역에서의 多者間 經濟協力機構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경제의 블록화 추세가 심화되는 과정에서 역내국가들간의 다자간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고 있어, 아·태 경제협력각료회의(APEC)과 같은 域內 經濟協力機構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한국은 역내 다자간 경제협력기구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동 기구내에서의 役割 增大를 모색하는 동시에, 北韓의 동 기구 參與를 유도·추진함으로써 남북간 쌍무적 경제협력 이외에도 다자간 경제협력의 틀을 구축하고, 역내국가들간의 전반적인 경제정책 조정 과정 속에서 南北韓 經濟統合에 필요한 諸般措置를 모색·강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전술하였듯이 다자간 경제협력 기구에의 참여를 통해 統一韓國의 經濟的 位相에 대한 주변국가들의 우려를 불식할 수 있을 것이다.

第Ⅵ章 結 論

동북아 신국제질서 형성과정은 강대국간의 역학관계 변화 가능성으로 인한 流動性과 기존의 냉전적 대립구조와 새로운 탈냉전적 변화가 병존하는 二重性으로 특징지어지고 있으나, 향후 東北亞 新國際秩序는 「1+3」 체제를 바탕으로 균형자로서의 미국이 일·중·러간의 역학관계를 조정하면서, 多者間 協力を 강화하여 역내 정치·경제적 불안정요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주변 4 국은 기본적으로 한반도정세가 域內 不安定要因으로 대두되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현상유지 차원에서 南北對話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는 긍정적인 반면, 궁극적인 韓半島 統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정착에 대한 주변 4 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활용하여 남북한이 交流·協力を 활성화하여 나간다면, 民族의 自主的 努力 여하에 따라 남북한이 民族和合·民族共榮을 지향하는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후 남북한의 主體的인 統一意志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 국의 우려를 불식해 나간다면,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궁극적으로 單一國家 統一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일차적으로 한반도 평화정착 차원에서 ① 한민족의 적극적인 자

주통일의지를 천명함으로써 주변 4국의 통일문제개입을 최소화하고, ② 주변 4국과의 지속적인 선린·우호관계 발전을 도모하며, ③ 주변 4국으로 하여금 北韓의 開放·改革을 적극 유도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④ 한반도 평화를 제도화하기 위하여 주변 4국의 南北韓 交叉承認과 國際的 平和保障體制 構築을 실현하여야 함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이상과 같은 네 가지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동시에, 한반도 통일에 대한 주변 4국의 우려를 제거해 나감으로써 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을 확보하여야 함을 지적하였다. 이를 위하여 ① 통일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설정·제시함으로써 통일한국의 未來像에 대한 주변 4국의 우려를 불식하고, ② 「사실상의 통일상태」를 구현하는 동시에 東北亞 新國際秩序 형성과정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통일이 역내 불안정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통일한국의 존재가 東北亞 新國際秩序의 자연스러운 일부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국제적 통일지원 유도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이상과 같은 한반도 평화정착 및 통일에 대한 국제적 지원 유도방안과 함께, 한반도의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한민족의 자주적 통일역량 강화 차원에서의 對內的 統一基盤이 조성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는 한국의 독자적 통일대

비역량 강화 측면과 남북관계 발전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 바,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 對內·對北政策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한국의 독자적인 통일대비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통해 國力伸張을 이루고, 정치적 안정 속에서 민주발전을 지속하는 동시에 正義社會를 구현하여 통일국가의 미래상을 구현해 나가며, 통일과정 및 통일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安保戰略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南北關係를 단계적이고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궁극적으로 민족통일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핵문제 해결」, 「정치적 신뢰구축」, 「북한의 개방, 교류·협력 제도화 및 군사적 신뢰구축」을 각각의 분기점으로 하는 段階別 南北關係 發展構圖를 설정하여 「기본합의서」를 이행·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 해결원칙」, 「상호주의」 등 기본원칙을 견지하는 한편, 화해, 불가침, 교류·협력 부문의 진전이 均衡 推進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參 考 文 獻

1. 單行本

民族統一研究院.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년대 東北亞秩序 豫測(I)」。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全東震.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1.

統一院. 「1990年度 北韓經濟 綜合評價」。 서울: 統一院, 1991.

Carter, Jimmy and Yasuhiro Nakasone. *Ensuring Alliance in an Unsure World: the U.S.—Japan Global Partnership in the 1990's*. Washington, D.C.: The Center for Strategic and International Studies, 1991.

Foster-Carter, Aidan. *Korea's Coming Reunification: Another East Asian Superpower?* London: 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 1992.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The Military Balance 1990~1991*. London: I.I.S.S., 1990.

U.S. Department of Commerce. *Statistical Abstract of the United States 1990*.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U.S. Department of Defense. *A Strategic Framework for the Asian Pacific Rim: Looking Toward the 21st Cen-*

ture.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1990.

_____. *Asia-Pacific Strategic Framework Report (A Report to Congress)*. July 1992.

Winnefeld, James A. and Jonathan D. Pollack et al. *A New Strategy and Fewer Forces: The Pacific Dimension*. Santa Monica: Rand, 1992.

小島清. 「續·太平洋經濟圏の生成」. 東京: 文眞堂, 1990.

日本防衛廳 編. 「防衛白書 1990」. 東京: 防衛廳, 1990.

_____. 「防衛白書 1991」. 東京: 防衛廳, 1991.

日本外務省. 「外交青書」平成 3年版.

竹村健一. 「日本の悲劇」. 東京: 祥傳社, 1991.

2. 論 文

姜元植. “北方領土問題에 대한 러·日의 立場과 解決 展望.”
「統一研究論叢」, 第1卷 第2號 (1992).

_____. “解放直後 蘇聯의 韓半島 政策構想.” 한림대학교 아
시아문화연구소 제7회 학술연구발표회 발표논문.

김일성. “신년사 (1991년).” 「로동신문」, 1991년 1월 1일.

_____. “우리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자”(1991년 8월 1일 조
국평화통일위원회 책임일군들,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북
측본부 성원들과 행한 담화). 「로동신문」, 1991년 8월
5일.

- _____. “인민대중의 역할을 높이는 것은 자주위업의 승리를 위한 담보.” 「로동신문」, 1992년 4월 16일.
- _____.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위업을 끝까지 완수하자.” 「조선중앙년감 1989」.
- 김중손. “지배와 예속의 낡은 질서를 유지확대하기 위한 힘의 정책.” 「로동신문」, 1992년 8월 2일.
- 리석윤. “1극화의 세계는 자주위업을 말살하기 위한 제국주의의 세계.” 「로동신문」, 1992년 9월 19일.
- _____. “랭전시대의 유물: 미국의 낡은 대조선정책.” 「로동신문」, 1992년 9월 2일.
- _____. “아세아와 세계평화를 위한 관건적 고리.” 「로동신문」, 1992년 8월 25일.
- 연형묵. “주체의 혁명적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총로선을 끝까지 관철하자.” 「로동신문」, 1992년 9월 9일.
- 鄭圭燮. “南北協商의 成果와 南北關係 發展方向.” 民族統一研究院.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關係」. 서울: 民族統一研究院, 1992.
- 정송남. “발전하고 있는 우리 공화국의 대외경제관계.” 「국제생활」, 제59호 (1990년 12월).
- 최문일. “미국은 남조선을 강점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장본인.” 「로동신문」, 1991년 7월 29일.
- 호영길.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야 한

- 다.” 「로동신문」, 1992년 8월 5일.
- Akio, Yutaka. “The Soviet Union’s Asia Policy: Past, Present, and Future.” *Japan Review of International Affairs*, vol. 5, no. 1 (Spring/Summer 1991).
- Baker, James A. III. “America in Asia: Emerging Architecture for a Pacific Commun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 Brzezinski, Zbigniew. “The Consequences of the End of the Cold War for International Security.” *Adelphi Papers 256* (Winter 1991/92).
- Crowe, William J. Jr. and Alan D. Romberg. “Rethinking Pacific Security.” *Foreign Affairs*, vol. 70, no. 2 (Spring 1991).
- Ford, Carl W. Jr. “The U.S. Future in Asia.” *The Korea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 II, no. 2 (Winter 1990).
- Huntington, Samuel P. “America’s Changing Strategic Interests.” *Survival*, vol. XXXIII, no. 1 (January/February 1991).
- Job, Brian L. “Canadian Defense Policy in the Pacific, Relevance, Commitments and Capabilities.” *Canadian Defense Quarterly*, vol. 21, no. 2 (1991).
- Lee, Hy-Sang. “North Korea’s Closed Economy: The

- Hidden Opening." *Asian Survey*, vol. XXVIII, no. 12 (December 1988).
- Macdonald, Donald S. "The Role of the Major Powers in the Reunification of Korea." *The Washington Quarterly*, vol. 15, no. 3 (Summer 1992).
- Nishihara, Massashi. "Security Initiatives in East Asia." presented in the Workshop on Shared Security Responsibilities, the Trilateral Commission. October 20~21, 1991. Revised April 5, 1992.
- Novozhilov, Vitor I. "Soviet Views on the Problems in the Asia-Pacific Region." Keynote Address in the 3rd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Center for American and Soviet Studies. Dankook University. November 4~5, 1991.
- Nye, Joseph S. Jr. "What New World Order?" *Foreign Affairs*, vol. 71, no. 2 (Spring 1992).
- Pushkov, Alexei. "Is Alliance with the West Feasible?" *Moscow News*, no. 9 (1992).
- Robinson, Thomas W. "Modernization and Revolution in Post-Cold War Asia." *Problems of Communism*, vol. XLI, no. 1-2 (January / April 1992).
- Segal, Gerald. "The Challenges to Chinese Foreign Policy." *Asian Affairs*, vol. XXI, part III (October

1990).

Tucker, Nancy Bernkopf. "China and America: 1941~1991." *Foreign Affairs*, vol. 70, no. 5 (Winter 1991/92).

Youn, Jung Suk. "Japanese Attitude toward the Question of Korean Unification." *East Asian Review*, vol. IV, no. 1 (Spring 1992).

Zagorsky, Andrei. "New Russia in a New World." *Moscow News*, no. 9 (1992.)

姜凌濬. "我國東北地區在東北亞經濟合作中的地位和作用."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1年 第3號.

近藤重克. "冷戦後のアジア・太平洋地域の安全保障をいかに確保するか." 「新防衛論集」, 第20巻 第1號, 1992年 6月.

冬福全. "三大經濟圈發展的新趨向及其未來特徵." 「世界經濟」, 1990年 10月.

藤經明. "ソ連版マ-シャル・プランは實現するか." 「世界週報」, 1991年 6月 25日.

木村明生. "アジア安保構想: スターリンからゴルバチョフへ." 「ソ連研究」, 第3號. 1986年 10月.

徐林興. "向臺售武嚴重損壞中美關係." 「文匯報」, 1992年 9月 4日.

莊蒙. "鄧提內政外交'十二字'新方針." 「鏡報」, 1991年 11月號.

中西輝政, 長谷川慶太郎, 高坂正堯. "90年代日本の防衛構想."

Voice, 1990年 8月.

池元吉. “國際經濟集團化的趨勢與日本構築‘經濟圈’的設想.”

「吉林大學社會科學學報」, 1991年 第3號.

陳啓懋. “關於在亞太地區建立政治新秩序的探索.” 「國際問題研

究」, 1992年 1期.

河合浪一. “環日本海經濟圈と日中協力.” 「日中經濟協會報」,

1990年 9號.

3. 其 他

「로동신문」.

「조선중앙년감 1986」.

「중앙방송」.

「평양방송」.

「内外通信」.

Far Eastern Economic Review.

The New York Times.

「世界週報」.

「朝日新聞」.

「讀賣新聞」.

「人民日報」.

「文匯報」.

Izvestiya.

Pravda.

Nezavisimaya Gazeta.

Statement by Richard H. Solomon,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Bureau of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on the House Foreign Affairs, Subcommittee on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March 6, 1991.

Testimony before the Committee on Armed Services of the U.S. Senate, by General Louis Menetrey, Commander of U.S. Forces in Korea, Washington, D.C., February 8, 1990, in *Korea and World Affairs*, vol. 14, no. 1 (Spring 1990).